

정책보고서 2022-108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483-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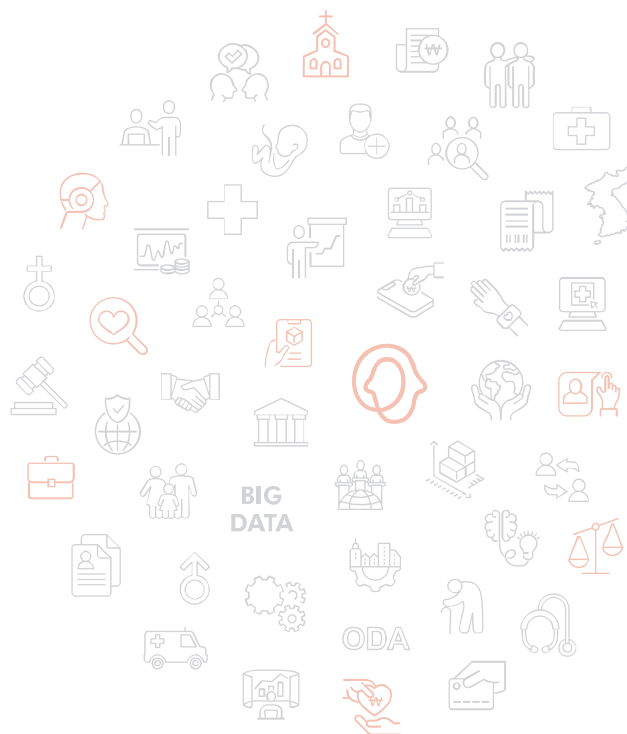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설문조사 결과(별책)

고제이

하솔잎·나원희·박소은·이진아·최환용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제이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하솔잎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원희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소은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이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구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7.29)한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별책으로 인식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제1부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1
제1장 조사개요	5
제1절 조사의 목적	7
제2절 조사설계	7
제3절 응답자 특성(일반인)	8
제4절 조사항목	9
제5절 평점산출 방식	9
제2장 결과요약	11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13
B. 아동수당 개선방안	17
제3장 조사결과: 일반국민	31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33
B. 아동수당 개선방안	50
제4장 조사결과: 전문가	87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89
B. 아동수당 개선방안	91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107

제2부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125
제5장 조사개요	127
제6장 조사결과	131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197



제1부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표 1-1〉 조사설계	7
〈표 1-2〉 응답자 특성(일반인)	8
〈표 1-3〉 조사항목	9
〈표 3-1〉 미성년 자녀 유무	35
〈표 3-2〉 첫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36
〈표 3-3〉 둘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37
〈표 3-4〉 셋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38
〈표 3-5〉 아동수당 수혜 여부	40
〈표 3-6〉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42
〈표 3-7〉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44
〈표 3-8〉 아동수당 만족도	47
〈표 3-9〉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49
〈표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52
〈표 3-11〉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55
〈표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57
〈표 3-1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60
〈표 3-14〉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63
〈표 3-15〉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66
〈표 3-16〉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69
〈표 3-17〉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72
〈표 3-18〉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74
〈표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76
〈표 3-20〉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79
〈표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82
〈표 3-22〉 자유의견: ① 아동수당 금액 관련	84
〈표 3-23〉 자유의견: ② 아동수당 지급 대상 관련	84
〈표 3-24〉 자유의견: ③ 수당 외 기타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84
〈표 3-25〉 자유의견: ④ 제도 개선 관련	85
〈표 3-26〉 자유의견: ⑤ 기타	85
〈표 4-1〉 아동수당 만족도	89



〈표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90
〈표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91
〈표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92
〈표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93
〈표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95
〈표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96
〈표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97
〈표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98
〈표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99
〈표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100
〈표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101
〈표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102
〈표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3
〈표 4-15〉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4

제2부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표 6-1〉 2020 환수결정건수	133
〈표 6-2〉 2020 환수결정건수	135
〈표 6-3〉 2020 환수건수	136
〈표 6-4〉 2020 환수율	137
〈표 6-5〉 2021 환수결정건수	138
〈표 6-6〉 2021 환수건수	140
〈표 6-7〉 2021 환수율	142
〈표 6-8〉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확인	145
〈표 6-9〉 2020 해외여권	147
〈표 6-10〉 2020 대한민국여권	148
〈표 6-11〉 2021 해외여권	149
〈표 6-12〉 2021 대한민국여권	150
〈표 6-13〉 주요 환수결정 이유	152
〈표 6-14〉 확인이 어려운 이유	154
〈표 6-15〉 실제 신고 접수 사례	156



〈표 6-16〉 확인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158
〈표 6-17〉 우선적 보완사항	160
〈표 6-18〉 우선적 보완사항	162
〈표 6-19〉 사전환수통지서 - 발송여부	164
〈표 6-20〉 사전환수통지서 - 기간	165
〈표 6-21〉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166
〈표 6-22〉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167
〈표 6-23〉 사전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168
〈표 6-24〉 환수통지서 - 기간	171
〈표 6-25〉 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172
〈표 6-26〉 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173
〈표 6-27〉 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174
〈표 6-28〉 공시송달공고 - 기간	177
〈표 6-29〉 공시송달공고 - 통지회수	178
〈표 6-30〉 공시송달공고 - 행정비용	179
〈표 6-31〉 환수가 어려운 이유	182
〈표 6-32〉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184
〈표 6-33〉 부모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186
〈표 6-34〉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	188
〈표 6-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190
〈표 6-36〉 제도 개선	192
〈표 6-37〉 소급가능한 신청기간 개선방안	194
〈표 6-38〉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 강화 필요	196

그림 목차

제1부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그림 2-1] 미성년 자녀 유무	13
[그림 2-2] 아동수당 수혜 여부	14
[그림 2-3] 아동수당 사용처	15
[그림 2-4] 아동수당 만족도	16
[그림 2-5]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17
[그림 2-6] 아동수당 주요역할	18
[그림 2-7] 아동수당 확대방식(일반국민)	19
[그림 2-8] 아동수당 확대방식(전문가)	19
[그림 2-9]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20
[그림 2-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21
[그림 2-1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22
[그림 2-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23
[그림 2-13]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24
[그림 2-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25
[그림 2-15]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26
[그림 2-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27
[그림 2-1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28
[그림 2-18] 자유의견	29
[그림 3-1] 미성년 자녀 유무	33
[그림 3-2] 아동수당 수혜 여부	39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41
[그림 3-4]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43
[그림 3-5] 아동수당 만족도	45
[그림 3-6]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48
[그림 3-7] 아동수당 주요역할	50
[그림 3-8]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53
[그림 3-9]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56
[그림 3-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58
[그림 3-1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61
[그림 3-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64



[그림 3-13]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67
[그림 3-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70
[그림 3-1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73
[그림 3-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75
[그림 3-17]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77
[그림 3-18]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80
[그림 3-19] 자유의견	83
[그림 4-1] 아동수당 만족도	89
[그림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90
[그림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91
[그림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92
[그림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93
[그림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94
[그림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96
[그림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97
[그림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98
[그림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99
[그림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100
[그림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101
[그림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102
[그림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103

제2부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그림 6-1]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율	134
[그림 6-2]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 사용 실태 확인	144
[그림 6-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의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 비중	146
[그림 6-4]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151
[그림 6-5]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153
[그림 6-6]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155
[그림 6-7]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157

[그림 6-8]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 의무 이행 도모를 위한 보완사항	159
[그림 6-9]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 인지 경로	161
[그림 6-10]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163
[그림 6-11]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170
[그림 6-12]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81
[그림 6-13]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183
[그림 6-14]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5
[그림 6-15] 입국일 확인 후 소급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7
[그림 6-16] 입국 확인 후 재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189
[그림 6-17]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191
[그림 6-18] 소급 가능 신청 기간에 대한 민원 및 국민 불편 해소방안	193
[그림 6-19]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 강화 필요	195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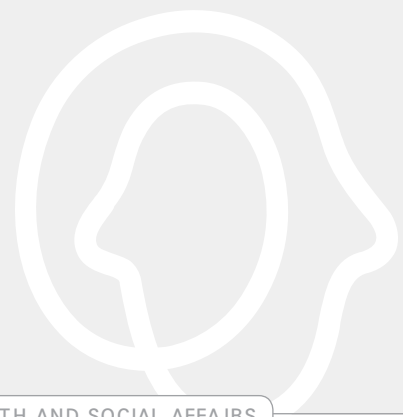
제 1 부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일러두기

1.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의 해석 시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함.
사회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하다.
2. 표본 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3. 문항별 결과는 변수별로 백분율(%)을 산출하며, 결괏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이 과정에서 백분율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
날 수 있음. 반올림 오차란 실제 전체 합계는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수치
를 기록하는 관계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
는 오류가 아님. 가령 '54.35'와 '45.65'의 합은 정확히 '100'이나 소수점 둘
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결과를 기록한 경우, '54.4'와 '45.7'로 표기되어 두 수
치의 단순 합계가 '100.1'로 보이는 경우가 있음.



제 1 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제2절 조사설계

제3절 응답자 특성(일반인)

제4절 조사항목

제5절 평점산출 방식

제 1 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 일반국민의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아동수당 정책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련 의견을 확인하고자 함.
- 향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제2절 조사설계

〈표 1-1〉 조사설계

조사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일반인	조사대상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오차	±3.1%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
	조사 기간	2022년 10월 13일 ~ 10월 21일 (9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50% 및 온라인 조사 50%
	표집틀	유·무선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프레임(무선 10%, 유선 20%) 및 전국 일반인 대상 온라인 패널
	응답률	전화면접조사 13.2%(3,785명 접촉, 500명 응답 완료) 모바일앱조사 9.8%(5,090명 접촉, 500명 응답 완료)
전문가	조사대상	아동수당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조사 기간	202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8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집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전문가 및 담당자 리스트

제3절 응답자 특성(일반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연령대,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사 대상자 수를 산정하였음. 아동수당을 수령 중인 응답자 200명*은 임의로 할당 표집 함.

〈표 1-2〉 응답자 특성(일반인)

구 분		표본 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연령대	19~29세	170	17.0
	30대	151	15.1
	40대	184	18.4
	50대	196	19.6
	60세 이상	299	29.9
거주권역	서울	188	18.8
	경기·인천	318	31.8
	대전·세종·충청	107	10.7
	강원	31	3.1
	부산·울산·경남	150	15.0
	대구·경북	98	9.8
	광주·전라	96	9.6
성별	제주	12	1.2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미성년 자녀	있음	322	32.2
	1명	189	18.9
	2명	119	11.9
	3명	14	1.4
없음		678	67.8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20.0
	받지 않음	800	80.0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22.2
	전문대졸	137	13.7
	대졸	530	53.0
	대학원이상	111	11.1
직업	자영업	86	8.6
	화이트칼라	447	44.7
	블루칼라	134	13.4
	주부	141	14.1
	학생	31	3.1
	농림축어업	3	0.3
	은퇴/무직/기타	158	15.8

제4절 조사항목

〈표 1-3〉 조사항목

구 분	내용	조사대상	
		일반인	전문가
선별문항	연령대	○	○
	거주 광역지자체	○	○
	성별	○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미성년 자녀 유무	○	-
	자녀 연령 및 학교	○	-
	아동수당 수혜 여부	○	-
	아동수당 사용처	○	-
	아동수당 만족도	○	○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	○
	아동수당 주요역할	○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아동수당 확대방식(1+2+3순위)	○	○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	○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	○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	○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	○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	○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	○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	○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	○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	○
배경문항	학력	○	-
	직업	○	-

제5절 평점산출 방식

□ 이 조사에서 만족이나 인지 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은 리커트 4점 혹은 5점 척도를 활용한 측정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전산처리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음.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만족이나 인지도의 정도를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계산하였음.

$$\square Y_i = \sum_1^n \left(\frac{R-r}{R-1} \right) * 100, (Y_i = 100 \text{점 변환점수}, R = \text{보기의 개수}, r = \text{선택한 보기})$$



제2장

결과요약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제 2 장 결과 요약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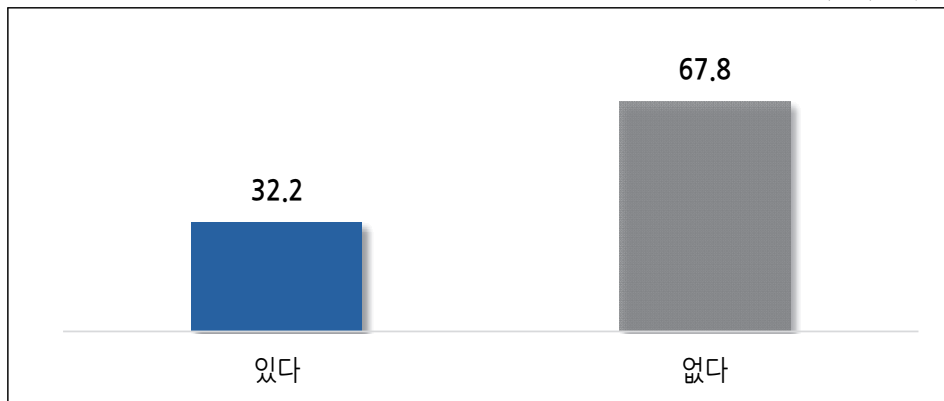
A1. 미성년 자녀 유무

□ 만19세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2.2%가 ‘있다’고 답하였음.

□ 미성년 자녀의 재학 학교와 학년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가 있는 응답자 322명의 자녀 중에서는 취학 전 자녀의 비율이 39.1%, 초등학생 자녀 32.3% 등이었고 평균 연령은 8.8세임.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는 취학 전 자녀가 54.1%, 초등학생 자녀 33.1%였고 평균 연령은 6.6세였음. 셋째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14명에 불과해 상세한 분석이 어려움.

[그림 2-1] 미성년 자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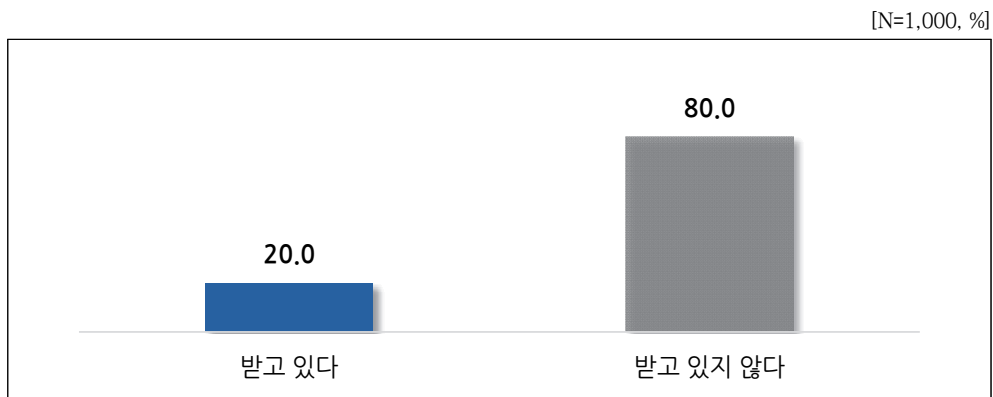
[N: 1,000, 단위: %]



A2. 아동수당 수혜 여부

□ 이 조사에서 아동수당을 현재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수혜자)의 비율은 20.0%였으며, ‘받고 있지 않다’ 응답자의 비율은 80.0%임.

[그림 2-2] 아동수당 수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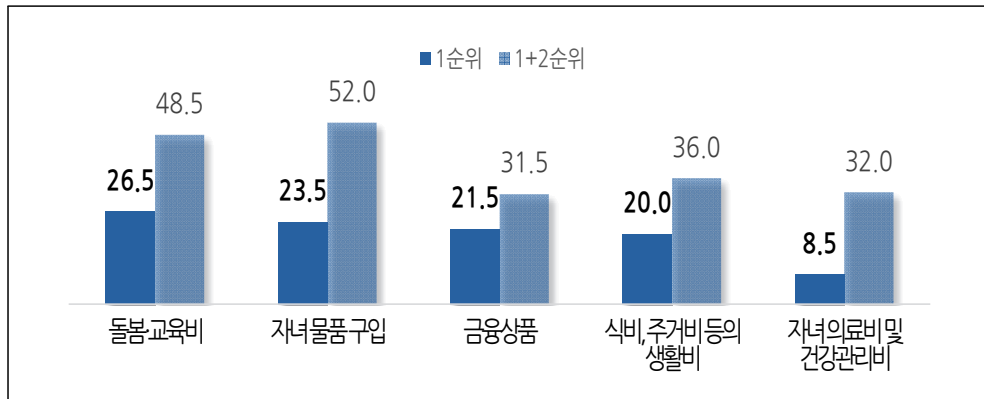
A2-1. 아동수당 사용처

□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200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돌봄·교육비’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으며, ‘자녀 물품 구입’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3.5%로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 ‘자녀명의 금융상품’ 21.5%,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20.0%,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8.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계한 결과로는 ‘자녀 물품 구입’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교육비’가 48.5%로 그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36.0%,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32.0%, ‘자녀명의 금융상품’ 31.5%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3] 아동수당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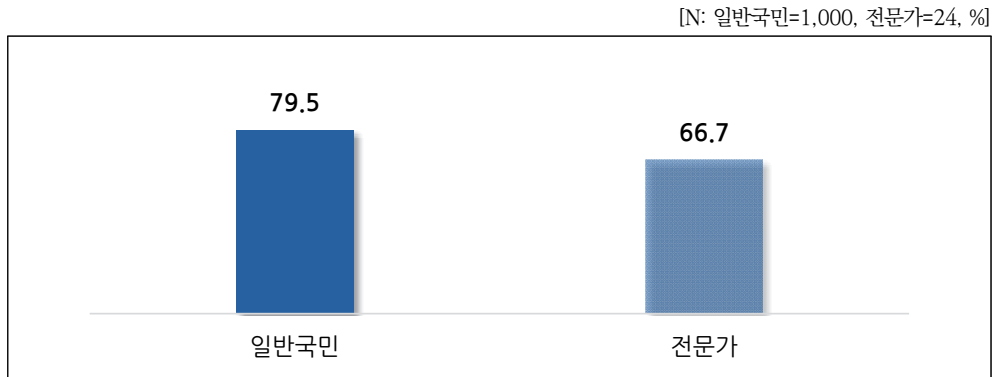
[N=200, %]



A3. 아동수당 만족도

-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79.5% (매우 만족 17.5%, 만족하는 편 62.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응답자의 비율인 20.5%(매우 불만족 3.8%, 불만족 하는 편 16.7%)임. 만족도를 100점으로 전환 시 점수는 64.4점임.
-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200명 중 ‘만족한다’는 비율은 82.5%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전년도 조사에서 아동수당 만족도는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 400명의 ‘만족’ 비율은 87.3%였고, 이번 조사에서 수령자는 200명 중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82.5%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이번 조사에 답한 관련 전문가 24명 중 16명(66.7%)이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가 응답자 수가 24명에 불과해 일반화는 어려우나,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만족, 79.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임.

[그림 2-4] 아동수당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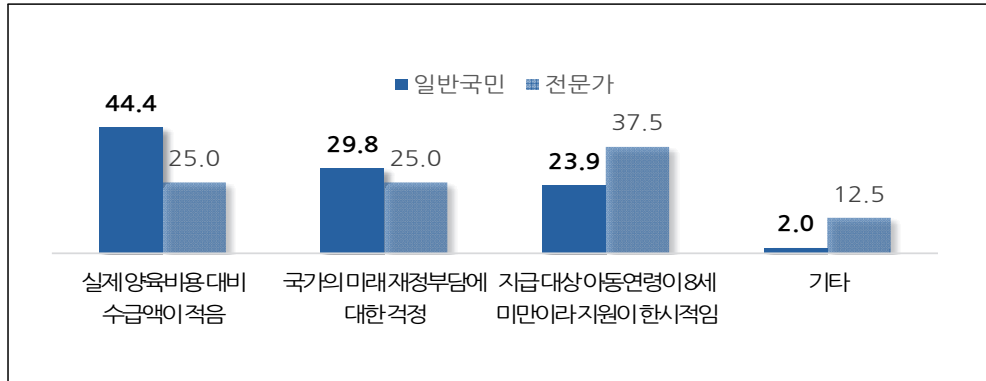
A3-1.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20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는 응답 29.8%,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응답이 23.9%로 조사되었고, ‘기타’이유는 2.0%임.

□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전문가 8명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3명 (37.5%)은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 답했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다’ 혹은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 답한 전문가 각 2명(25.0%)이었음.

[그림 2-5]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N: 일반국민=205, 전문가=8,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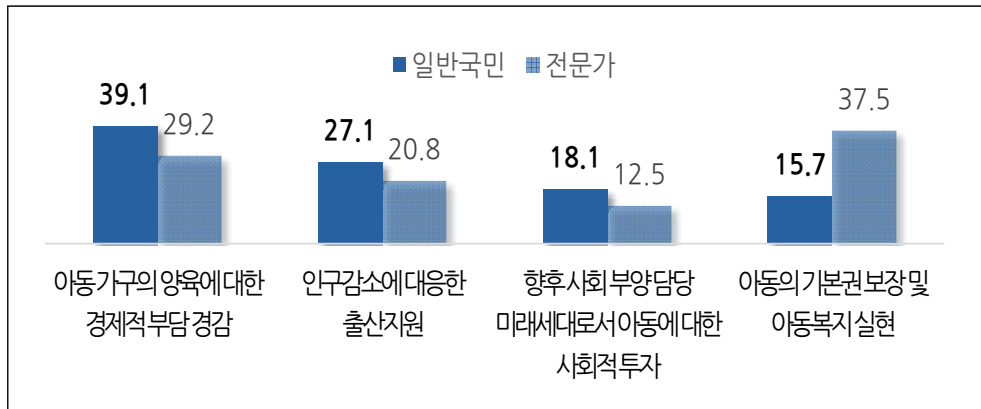
B1. 아동수당 주요역할

□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27.1%,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18.1%,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15.7%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문가 조사에서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이 9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이 7명(29.2%),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5명(20.8%),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3명(12.5%)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조사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의 비율(15.7%)이 가장 낮았던 점과 대비됨.

[그림 2-6] 아동수당 주요역할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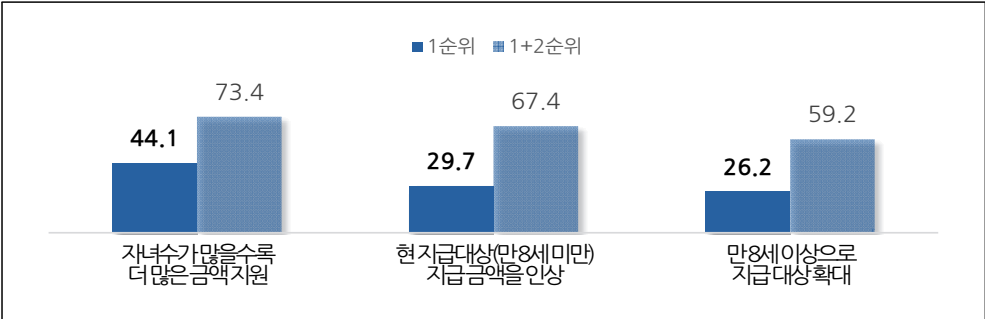
B2. 아동수당 확대방식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29.7%,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26.2%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계 비율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7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67.4%,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59.2%로 1순위 응답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그림 2-7] 아동수당 확대방식(일반국민)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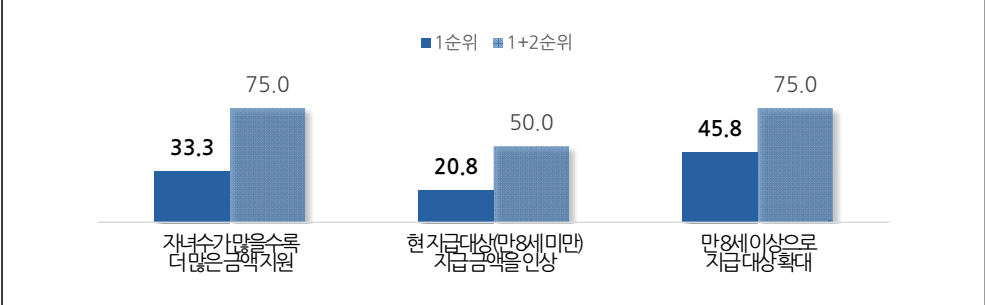


□ 전문가 조사에서는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라 답한 경우가 11명(45.8%)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은 8명(33.3%),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5명(20.8%)임. 일반국민은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26.2%)이 가장 낮았던 점과 대비됨.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2순위 응답의 합계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라 답한 응답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응답이 각 18건(75.0%)으로 가장 많았음.

[그림 2-8] 아동수당 확대방식(전문가)

[N=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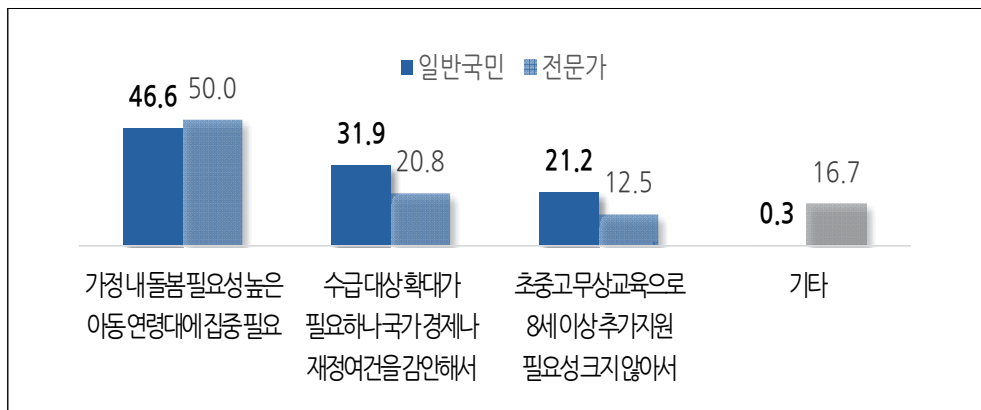
B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 아동수당이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 대한 지급 금액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1.9%, ‘초중고 무상교육의 실시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21.2%로 조사되었음. ‘기타’ 의견은 0.3%의 비율을 보임.

□ 전문가 조사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 대한 지급 금액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12명(50.0%)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명(20.8%), ‘초중고 무상교육의 실시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가 3명(12.5%)으로 조사되었음. 일반국민 조사에서도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함.

[그림 2-9]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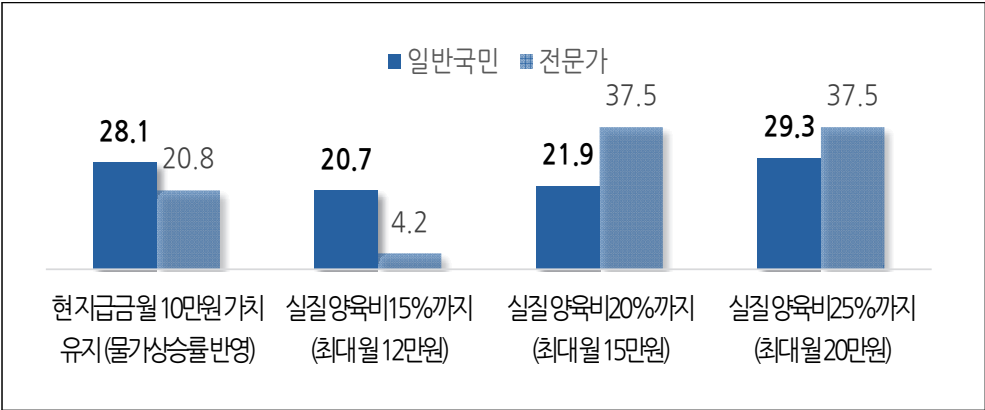


B3-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 현재 아동 1인당 지원되는 지급금액(10만원)을 인상하는 경우 얼마나 인상해야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실질 양육비의 25%까지(최대 월 20만원)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 28.1%,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15만원)’ 21.9%,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12만원)’ 20.7%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 조사에서는 ‘실질 양육비의 25%까지(최대 월 20만원)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과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15만원)’가 각 9명(37.5%)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은 5명(20.8%) 였으며,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12만원)’은 1명(4.2%)에 그쳤음.

[그림 2-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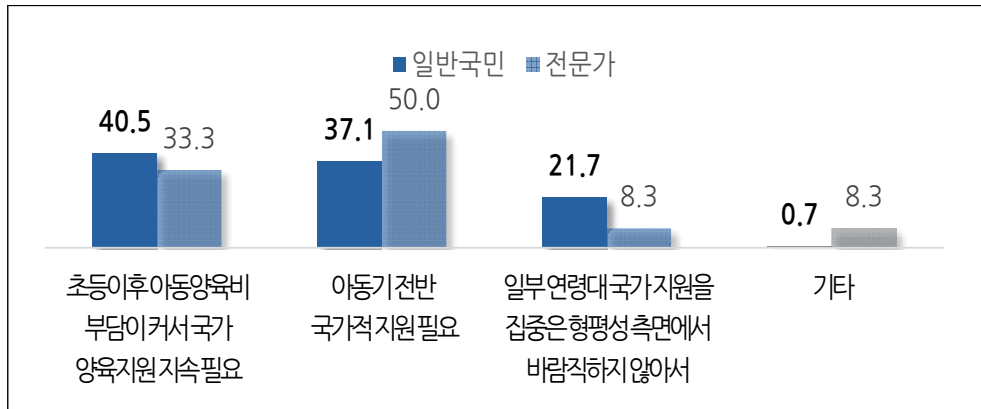
B4.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 아동수당을 ‘만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시,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37.1%,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21.7%임. ‘기타’는 0.7%임.

□ 한편, 전문가 조사에서는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라 답한 경우가 12명(50.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는 8명(33.3%)이었음.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는 2명(8.3%)에 그침.

[그림 2-1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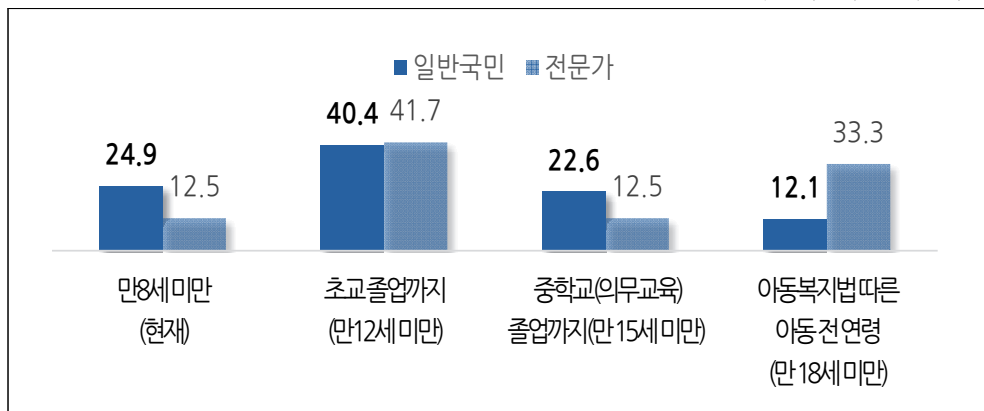
B4-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 확대할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12세 미만)’가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유지’ 24.9%,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22.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조사에서는 지급 연령 확대 시 대상 연령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12세 미만)’이라 답한 전문가가 10명(41.7%)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8명(33.3%),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와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가 각 3명(12.5%)에 그쳤음. 일반국민 조사에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12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유사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12.1%로 가장 낮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2-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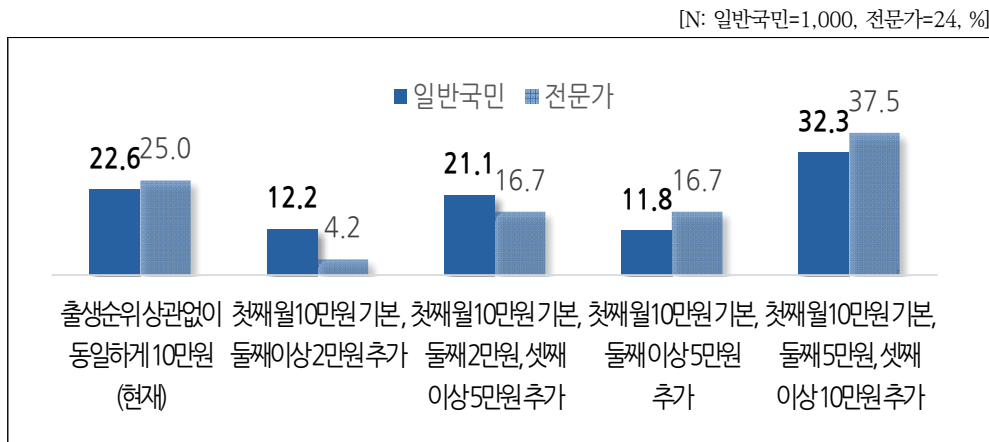


B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 22.6%,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21.1%,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12.2%,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11.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9명(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 6명(25.0%),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과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이 각 4명(16.7%),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2만원 추가 지급’은 1명(4.2%)에 그쳤음.

[그림 2-13]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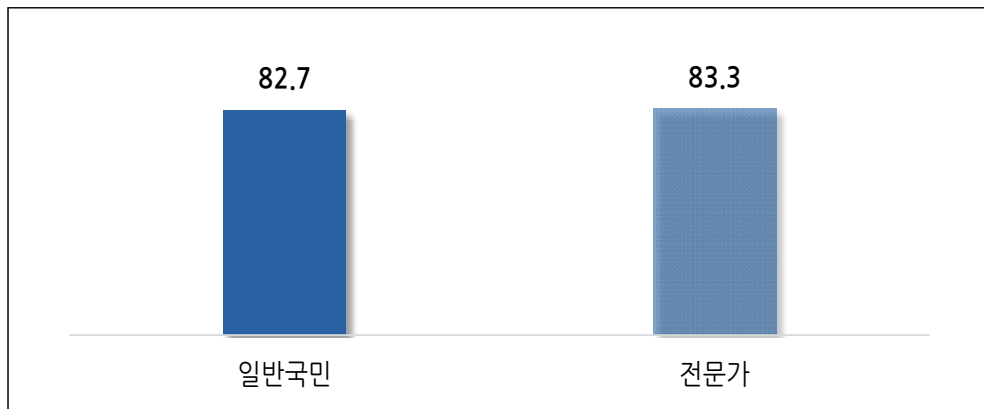
B5-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지원이 자녀가 2명 이상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82.7% (매우 도움이 된다 19.4%, 약간 도움이 된다 63.3%)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7.3%(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전문가가 20명(83.3%)이었고, 나머지 4명(16.7%)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일반국민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그림 2-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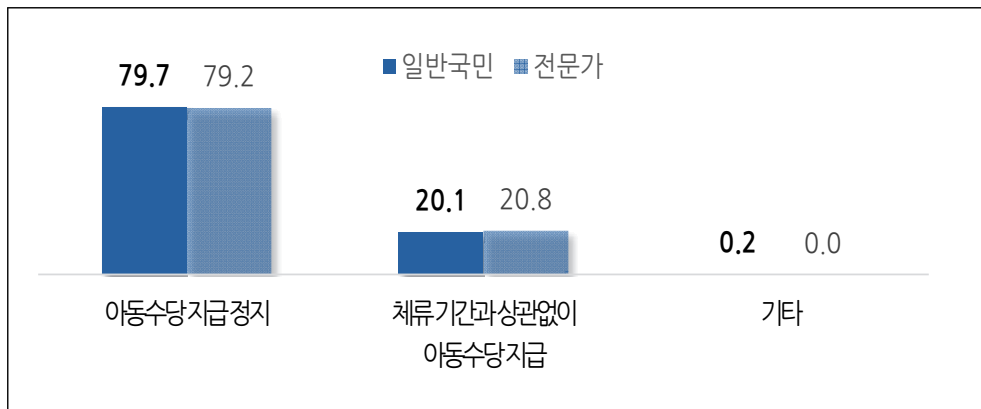
B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7%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음. ‘기타’ 응답은 0.2%임.

□ 전문가 조사에서도 해외 체류 아동 지급 정지에 대해 19명(79.2%)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5명(20.8%)에 그쳐 일반국민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음.

[그림 2-15]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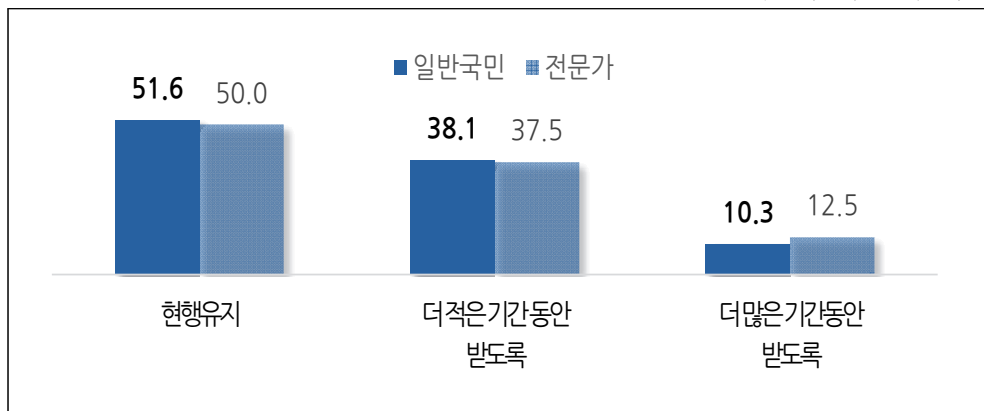
B6-1.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 해외 체류 시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의견이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지급이므로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해야 한다 38.1%,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의견이 10.3%였음.

□ 전문가 조사에서도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라고 답한 전문가가 12명(50.0%)으로 절반이었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지급이므로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9명(37.5%),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전문가는 3명(12.5%)에 그쳐 일반국민 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그림 2-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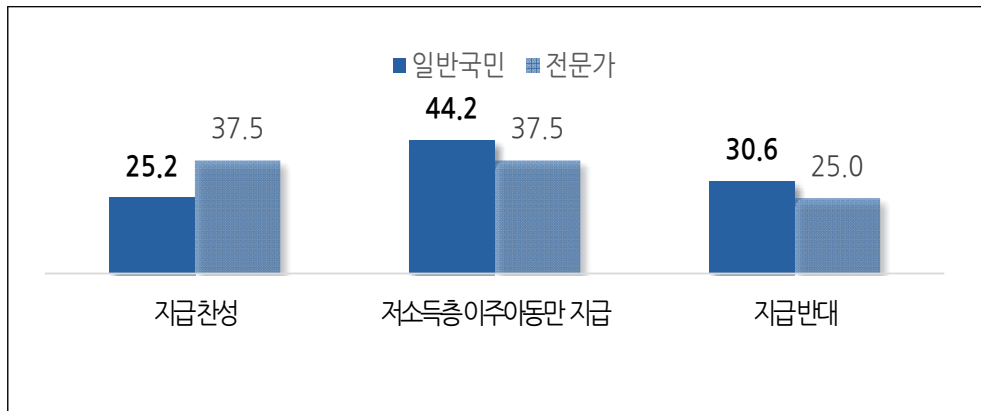
B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의 44.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2%임.

□ 전문가 조사에서는 이주 아동 아동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와 ‘저소득계층의 이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전문가가 각 9명(37.5%)으로 나타났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명(25.0%)임.

[그림 2-1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N: 일반국민=1,000, 전문가=24, %]



B8. 자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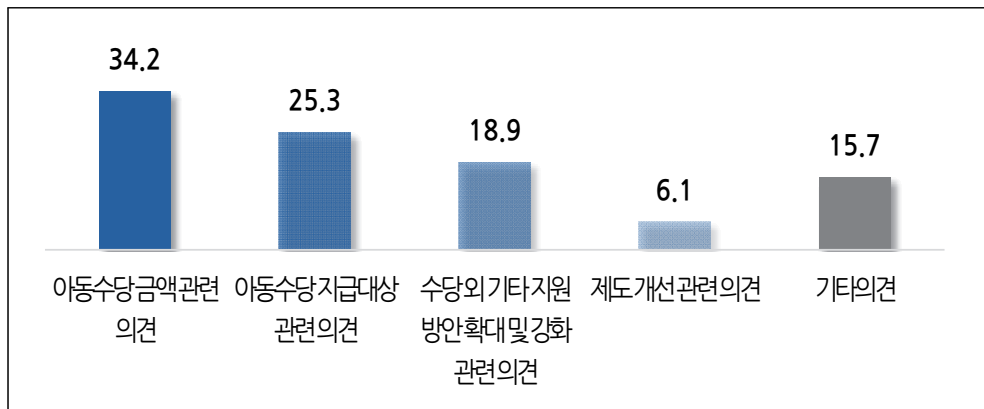
□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94건이 제기되었음. 이 중 ‘아동수당 금액 관련 의견’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관련 의견’ 25.3%, ‘수당 외 기타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의견’ 18.9%, ‘제도 개선 관련 의견’ 6.1% 등으로 제기되었음.

□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기본 수급액 인상’ 12.8%, 소득/가정 환경에 따른 차등 지급 또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 11.1%, ‘수혜 가능 연령대(기간) 확대 및 기준 완화’ 9.6% 등의 순서임.

※ 전문가 자유의견 [표Ⅳ-15]에 별도 제시함.

[그림 2-18] 자유의견

[N: 일반국민=594, %]





제3장

조사결과: 일반국민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제3장 조사결과: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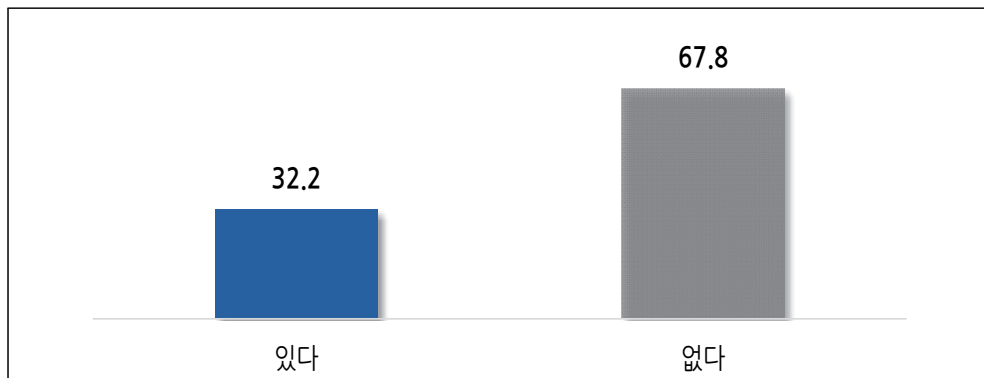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A1. 미성년 자녀 유무

Q	귀하께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각 자녀는 만으로 몇 살이고, 재학 중인 학교는 어디입니까?
---	--

[그림 3-1] 미성년 자녀 유무

[N=1,000, %]



□ 미성년 자녀 '있다'고 답한 응답자 32.2%

- 만19세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대해 이번 조사 응답자의 32.2%가 '있다'고 답하였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에서 70.2%, 40대에서 68.5%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에 따라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44.7%로 전체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가운데서 35.7%,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 28.6%로 조사되었음.
 -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응답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각 40.9%, 38.3%로 고졸 이하나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직업에 따라서는 은퇴/무직/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8.2%에 불과한 특징을 보임.
 - 미성년 자녀의 학교와 학년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가 있는 응답자 322명의 자녀 중에선 취학 전 자녀가 39.1%, 초등학생 32.3%, 중학생 12.7%, 고등학생 15.8%였고 평균 연령은 8.8세임.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는 취학 전 자녀 54.1%, 초등학생 33.1%, 중학생 11.3%, 고등학생 1.5%였으며 평균 연령은 6.6세였음.
- 셋째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14명에 불과해 상세한 분석이 어려움.

〈표 3-1〉 미성년 자녀 유무

[단위: %]

구 분		응답자수	있다	없다
전 체		(1000)	32.2	67.8
연령대	19~29세	(170)	12.4	87.6
	30대	(151)	70.2	29.8
	40대	(184)	68.5	31.5
	50대	(196)	27.6	72.4
	60세 이상	(299)	5.0	95.0
권역	서울	(188)	26.6	73.4
	경기·인천	(318)	32.1	67.9
	대전·충청·세종	(107)	32.7	67.3
	강원	(31)	29.0	71.0
	부산·울산·경남	(150)	44.7	55.3
	대구·경북	(98)	28.6	71.4
	광주·전라	(96)	28.1	71.9
	제주	(12)	33.3	66.7
성별	남성	(496)	28.6	71.4
	여성	(504)	35.7	64.3
미성년 자녀	있다	(322)	100.0	-
	없다	(678)	-	100.0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100.0	-
	2명	(119)	100.0	-
	3명	(14)	100.0	-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100.0	-
	받지 않음	(800)	15.3	84.8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31.4	68.6
	불만족	(205)	35.1	64.9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13.5	86.5
	전문대졸	(137)	40.9	59.1
	대졸	(530)	38.3	61.7
	대학원이상	(111)	29.7	70.3
직업	자영업	(86)	23.3	76.7
	화이트칼라	(447)	40.0	60.0
	블루칼라	(134)	41.0	59.0
	주부	(141)	37.6	62.4
	학생	(31)	-	100.0
	농림축어업	(3)	66.7	33.3
	은퇴/무직/기타	(158)	8.2	91.8

36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2〉 첫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단위: %, 세]

구 분		응답자수	취학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연령 (/세)
전 체		(322)	39.1	32.3	12.7	15.8	8.8
연령대	19~29세	(21)	81.0	19.0	-	-	4.4
	30대	(106)	65.1	34.0	0.9	-	5.4
	40대	(126)	22.2	44.4	18.3	15.1	10.0
	50대	(54)	16.7	13.0	29.6	40.7	12.8
	60세 이상	(15)	20.0	6.7	6.7	66.7	14.0
권역	서울	(50)	44.0	44.0	4.0	8.0	7.5
	경기·인천	(102)	42.2	26.5	14.7	16.7	8.8
	대전·충청·세종	(35)	51.4	22.9	8.6	17.1	8.5
	강원	(9)	33.3	11.1	22.2	33.3	11.1
	부산·울산·경남	(67)	31.3	35.8	13.4	19.4	9.1
	대구·경북	(28)	39.3	32.1	21.4	7.1	8.8
	광주·전라	(27)	25.9	44.4	7.4	22.2	9.6
성별	제주	(4)	25.0	25.0	50.0	-	10.3
	남성	(142)	33.8	33.8	14.1	18.3	9.3
미성년 자녀수	여성	(180)	43.3	31.1	11.7	13.9	8.4
	1명	(189)	48.7	22.2	11.6	17.5	8.1
아동수당 수령여부	2명	(119)	28.6	45.4	12.6	13.4	9.5
	3명	(14)	-	57.1	28.6	14.3	11.7
아동수당 만족도	받고 있음	(200)	59.5	37.5	2.5	0.5	5.8
	받지 않음	(122)	5.7	23.8	29.5	41.0	13.7
최종학력	만족	(250)	41.2	32.4	12.0	14.4	8.5
	불만족	(72)	31.9	31.9	15.3	20.8	9.7
직업	고졸이하	(30)	33.3	16.7	23.3	26.7	10.5
	전문대졸	(56)	32.1	42.9	12.5	12.5	8.6
	대졸	(203)	42.4	30.5	10.8	16.3	8.5
	대학원이상	(33)	36.4	39.4	15.2	9.1	8.9
직업	자영업	(20)	20.0	30.0	15.0	35.0	11.4
	화이트칼라	(179)	39.1	36.3	13.4	11.2	8.5
	블루칼라	(55)	43.6	27.3	9.1	20.0	8.5
	주부	(53)	41.5	26.4	15.1	17.0	8.6
	학생	(2)	-	-	-	100.0	17.0
	농림축어업	(13)	46.2	30.8	7.7	15.4	8.7
	은퇴/무직/기타	(158)	8.2	91.8	-	-	8.2

〈표 3-3〉 둘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단위: %, 세]

구 분		응답자수	취학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연령 (/세)
전 체		(133)	54.1	33.1	11.3	1.5	6.6
연령대	19~29세	(4)	75.0	25.0	-	-	4.0
	30대	(46)	84.8	15.2	-	-	4.0
	40대	(68)	42.6	41.2	14.7	1.5	7.4
	50대	(13)	-	53.8	38.5	7.7	11.5
	60세 이상	(2)	50.0	50.0	-	-	9.0
권역	서울	(17)	64.7	23.5	11.8	-	4.9
	경기·인천	(42)	47.6	40.5	11.9	-	7.0
	대전·충청·세종	(16)	75.0	18.8	-	6.3	5.0
	강원	(4)	25.0	50.0	25.0	-	8.0
	부산·울산·경남	(23)	43.5	39.1	17.4	-	7.3
	대구·경북	(15)	46.7	40.0	13.3	-	7.4
	광주·전라	(13)	76.9	7.7	7.7	7.7	6.5
성별	제주	(3)	33.3	66.7	-	-	7.3
	남성	(55)	52.7	32.7	10.9	3.6	6.6
미성년 자녀수	여성	(78)	55.1	33.3	11.5	-	6.5
	2명	(119)	58.0	30.3	10.9	0.8	6.3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21.4	57.1	14.3	7.1	9.4
	받고 있음	(89)	78.7	20.2	1.1	-	4.3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44)	4.5	59.1	31.8	4.5	11.1
	만족	(107)	55.1	33.6	9.3	1.9	6.5
최종학력	불만족	(26)	50.0	30.8	19.2	-	7.0
	고졸이하	(12)	16.7	41.7	41.7	-	9.8
	전문대졸	(23)	47.8	39.1	8.7	4.3	7.3
	대졸	(83)	62.7	28.9	8.4	-	5.9
직업	대학원이상	(15)	46.7	40.0	6.7	6.7	6.7
	자영업	(8)	25.0	37.5	37.5	-	9.4
	화이트칼라	(77)	54.5	39.0	5.2	1.3	6.2
	블루칼라	(20)	55.0	25.0	15.0	5.0	6.9
	주부	(24)	58.3	25.0	16.7	-	6.5
은퇴/무직/기타		(4)	75.0	-	25.0	-	6.8

38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4〉 셋째 자녀 재학 학교 및 연령대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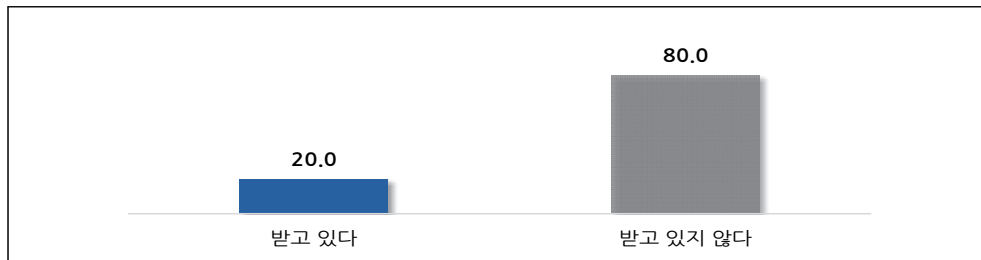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취학 전	초등학생	평균연령 (/세)
전 체		(14)	57.1	42.9	5.8
연령대	30대	(5)	100.0	-	3.2
	40대	(7)	28.6	71.4	7.3
	50대	(2)	50.0	50.0	7.0
권역	서울	(2)	100.0	-	4.0
	경기·인천	(5)	80.0	20.0	4.6
	강원	(1)	-	100.0	7.0
	부산·울산·경남	(2)	-	100.0	8.0
	광주·전라	(3)	66.7	33.3	6.0
	제주	(1)	-	100.0	9.0
성별	남성	(3)	33.3	66.7	8.3
	여성	(11)	63.6	36.4	5.1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10)	80.0	20.0	4.3
	받지 않음	(4)	-	100.0	9.5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13)	53.8	46.2	6.0
	불만족	(1)	100.0	-	3.0
최종학력	고졸이하	(4)	25.0	75.0	7.0
	전문대졸	(2)	50.0	50.0	7.0
	대졸	(7)	85.7	14.3	4.3
	대학원이상	(1)	-	100.0	9.0
직업	자영업	(1)	100.0	-	5.0
	화이트칼라	(5)	80.0	20.0	4.4
	블루칼라	(3)	-	100.0	8.3
	주부	(4)	50.0	50.0	6.0
	은퇴/무직/기타	(1)	100.0	-	5.0

A2. 아동수당 수혜 여부

Q	귀하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십니까?
---	------------------------

[그림 3-2] 아동수당 수혜 여부

[N=1,000, %]



□ 아동수당 수혜자, '받고 있다' 20%

- 이 조사에서 아동수당을 현재 '받고 있다' 응답자(수혜자)의 비율은 20.0%였으며, '받고 있지 않다' 응답자의 비율은 80.0%임.
- 수혜자는 연령대에 따라 30대에서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0대 응답자 가운데서는 39.1%가 아동수당 수혜자였음. 만19~29세 응답자 사이에서는 10.6%, 50대에서는 7.1%의 비율을 보였고,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1.3%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음.
- 권역에 따라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26.0%로 다소 높았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 23.2%, 남성 응답자 중 16.7%로 나타났음.
-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2명인 경우 66.4%, 1명인 경우 58.7%임.
-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응답자 사이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 25.5%, 24.0%로 고졸 이하나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높았음.
-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나 은퇴/무직/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 중 아동수당 혜택을 받는 경우가 각 10.5%, 5.1%에 그쳤음.

40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5〉 아동수당 수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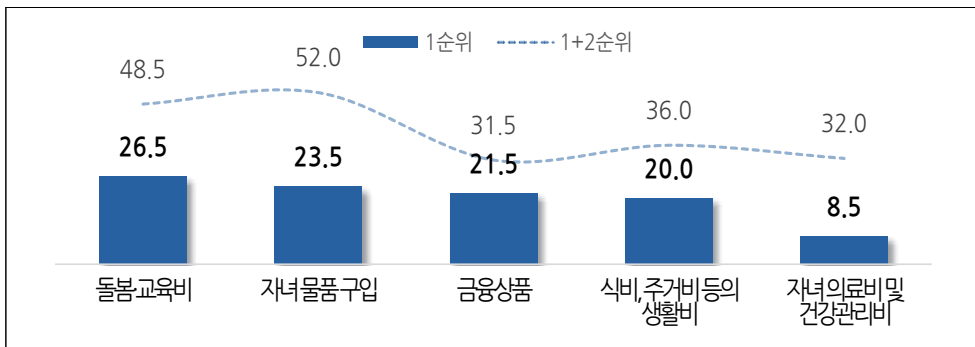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전 체		(1000)	20.0	80.0
연령대	19~29세	(170)	10.6	89.4
	30대	(151)	60.9	39.1
	40대	(184)	39.1	60.9
	50대	(196)	7.1	92.9
	60세 이상	(299)	1.3	98.7
권역	서울	(188)	19.1	80.9
	경기인천	(318)	19.2	80.8
	대전충청·세종	(107)	22.4	77.6
	강원	(31)	16.1	83.9
	부산울산·경남	(150)	26.0	74.0
	대구·경북	(98)	16.3	83.7
	광주·전라	(96)	18.8	81.3
	제주	(12)	8.3	91.7
성별	남성	(496)	16.7	83.3
	여성	(504)	23.2	76.8
미성년 자녀	있다	(322)	62.1	37.9
	없다	(678)	-	100.0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58.7	41.3
	2명	(119)	66.4	33.6
	3명	(14)	71.4	28.6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100.0	-
	받지 않음	(800)	-	100.0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20.8	79.2
	불만족	(205)	17.1	82.9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7.7	92.3
	전문대졸	(137)	25.5	74.5
	대졸	(530)	24.0	76.0
	대학원이상	(111)	18.9	81.1
직업	자영업	(86)	10.5	89.5
	화이트칼라	(447)	25.3	74.7
	블루칼라	(134)	27.6	72.4
	주부	(141)	23.4	76.6
	학생	(31)	-	100.0
	농림축어업	(3)	-	100.0
	은퇴/무직/기타	(158)	5.1	94.9

A2-1. 아동수당 사용처

Q	귀 가정에서는 지금 받으신 아동수당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은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

[그림 3-3]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N=200, %]



□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돌봄·교육비’ 26.5%, ‘자녀 물품 구입’ 23.5%

-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200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용도에 대해 물은 결과, 1순위로 ‘돌봄·교육비’라는 응답이 26.5%로 나타났으며, ‘자녀 물품 구입’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23.5%로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 ‘자녀명의 금융상품’ 21.5%,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20.0%,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8.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자녀명의 금융상품’이라는 응답이 30대에서 30.4%, 40대에서 12.5%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고, 다른 연령대는 응답자 수가 적어 세부적 분석이 곤란함.
- 권역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분석은 어려우며,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자녀명의 금융상품’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1명인 경우 27.9%였으나 2명인 경우 13.9%로 차이를 보였음.
- 응답자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상세한 분석이 어려움.

4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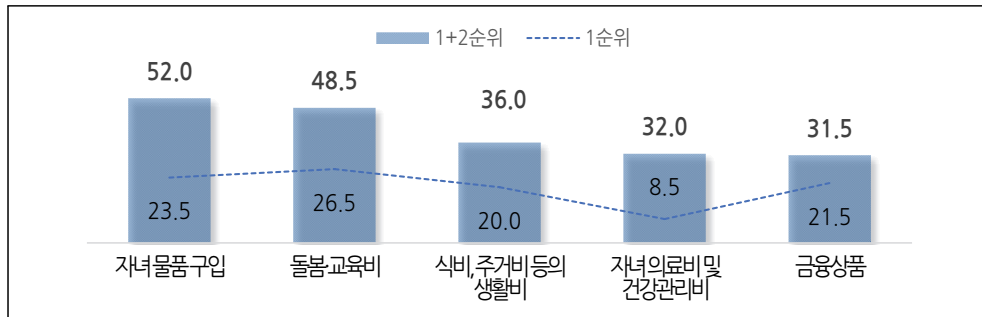
〈표 3-6〉 아동수당 사용처(1순위)

[단위: %]

구 분		응답자수	돌봄·교육비	자녀 물품 구입	자녀명의 금융상품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전 체		(200)	26.5	23.5	21.5	20.0	8.5
연령대	19~29세	(18)	16.7	16.7	22.2	33.3	11.1
	30대	(92)	25.0	23.9	30.4	15.2	5.4
	40대	(72)	26.4	25.0	12.5	22.2	13.9
	50대	(14)	50.0	14.3	7.1	28.6	-
	60세 이상	(4)	25.0	50.0	25.0	-	-
권역	서울	(36)	30.6	27.8	22.2	8.3	11.1
	경기·인천	(61)	24.6	23.0	26.2	19.7	6.6
	대전·충청·세종	(24)	25.0	29.2	29.2	16.7	-
	강원	(5)	40.0	40.0	-	-	20.0
	부산·울산·경남	(39)	20.5	28.2	12.8	28.2	10.3
	대구·경북	(16)	37.5	12.5	25.0	25.0	-
	광주·전라	(18)	27.8	-	16.7	33.3	22.2
성별	제주	(1)	-	100.0	-	-	-
	남성	(83)	25.3	24.1	18.1	21.7	10.8
미성년 자녀수	여성	(117)	27.4	23.1	23.9	18.8	6.8
	1명	(111)	24.3	23.4	27.9	18.0	6.3
	2명	(79)	29.1	22.8	13.9	22.8	11.4
아동 수당 만족도	3명	(10)	30.0	30.0	10.0	20.0	10.0
	만족	(165)	25.5	24.2	23.0	19.4	7.9
최종 학력	불만족	(35)	31.4	20.0	14.3	22.9	11.4
	고졸이하	(17)	11.8	29.4	11.8	23.5	23.5
	전문대졸	(35)	37.1	28.6	14.3	17.1	2.9
	대졸	(127)	25.2	22.8	25.2	18.1	8.7
직업	대학원이상	(21)	28.6	14.3	19.0	33.3	4.8
	자영업	(9)	33.3	11.1	22.2	22.2	11.1
	화이트칼라	(113)	27.4	22.1	23.0	20.4	7.1
	블루칼라	(37)	29.7	24.3	13.5	16.2	16.2
	주부	(33)	18.2	24.2	27.3	24.2	6.1
		(8)	25.0	50.0	12.5	12.5	-

[그림 3-4]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N=200, %]



□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자녀 물품 구입’ 52.0%, ‘돌봄·교육비’ 48.5%

- 아동수당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계한 결과 ‘자녀 물품 구입’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교육비’가 48.5%로 그 뒤를 이었음. 다음으로,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36.0%,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32.0%, ‘자녀명의 금융상품’ 31.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자녀명의 금융상품’이라는 응답이 30대에서 38.0%, 40대에서 25.0%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응답의 비율은 비슷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응답자 수가 적어 세부 분석이 어려움.
- 권역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분석은 어려움.
-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자녀명의 금융상품’이라는 응답이 남성에서 26.5%, 여성에서는 35.0%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2명인 경우 ‘돌봄·교육비’와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라는 응답이 각 51.9%, 39.2%로 자녀가 1명인 경우(각 43.2%, 32.4%)보다 약간 높았으나,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와 ‘자녀명의 금융상품’이라는 응답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각 36.0%, 36.0%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응답자(각 29.1%, 27.8%)보다 약간 높았음.
- 응답자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상세한 분석이 어려움.

4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7〉 아동수당 사용처(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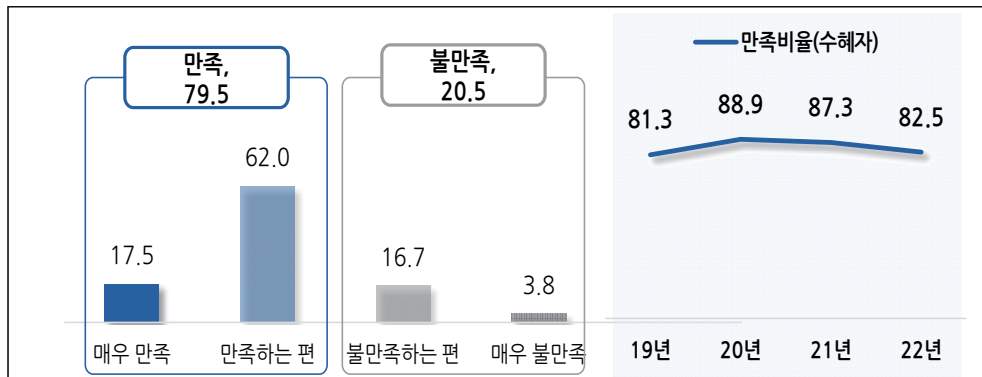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자녀 물품 구입	돌봄·교육비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자녀명의 금융상품
전 체		(200)	52.0	48.5	36.0	32.0	31.5
연령대	19~29세	(18)	61.1	22.2	44.4	33.3	38.9
	30대	(92)	47.8	48.9	34.8	30.4	38.0
	40대	(72)	54.2	51.4	34.7	34.7	25.0
	50대	(14)	42.9	57.1	50.0	35.7	14.3
	60세 이상	(4)	100.0	75.0	-	-	25.0
권역	서울	(36)	58.3	47.2	25.0	33.3	36.1
	경기·인천	(61)	49.2	55.7	37.7	26.2	31.1
	대전·충청·세종	(24)	58.3	41.7	33.3	20.8	45.8
	강원	(5)	40.0	40.0	40.0	40.0	40.0
	부산·울산·경남	(39)	56.4	35.9	46.2	41.0	20.5
	대구·경북	(16)	56.3	50.0	31.3	31.3	31.3
	광주·전라	(18)	27.8	61.1	38.9	44.4	27.8
	제주	(1)	100.0	100.0	-	-	-
성별	남성	(83)	54.2	49.4	34.9	34.9	26.5
	여성	(117)	50.4	47.9	36.8	29.9	35.0
미성년 자녀수	1명	(111)	52.3	43.2	32.4	36.0	36.0
	2명	(79)	51.9	51.9	39.2	29.1	27.8
	3명	(10)	50.0	80.0	50.0	10.0	10.0
아동 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52.0	48.5	36.0	32.0	31.5
아동 수당 만족도	만족	(165)	52.7	47.9	35.8	29.7	33.9
	불만족	(35)	48.6	51.4	37.1	42.9	20.0
최종학 력	고졸이하	(17)	52.9	35.3	47.1	47.1	17.6
	전문대졸	(35)	57.1	57.1	28.6	37.1	20.0
	대졸	(127)	51.2	47.2	34.6	29.9	37.0
	대학원이상	(21)	47.6	52.4	47.6	23.8	28.6
직업	자영업	(9)	44.4	55.6	33.3	44.4	22.2
	화이트칼라	(113)	47.8	50.4	37.2	31.0	33.6
	블루칼라	(37)	51.4	51.4	32.4	43.2	21.6
	주부	(33)	66.7	33.3	39.4	24.2	36.4
	은퇴/무직/기타	(8)	62.5	62.5	25.0	12.5	37.5

A3. 아동수당 만족도

Q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	--

[그림 3-5] 아동수당 만족도

[N: 1,000, 단위: %]



□ 아동수당 제도, 일반국민 79.5%, 수혜자 82.5%, ‘만족한다’

-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79.5%(매우 만족 17.5%, 만족하는 편 62.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응답자의 비율인 20.5%(매우 불만족 3.8%, 불만족 하는 편 16.7%)임. 만족도를 100점으로 전환 시 점수는 64.4점임.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대에서 85.4%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71.7%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음.
- 거주하는 권역에 따라서는 대구·경북의 응답자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4.7%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고, 서울 및 광주·전라 응답자 중에서는 77.1%, 경기·인천에서 78.0%로 근소하게 낮았음.
- 여타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200명 중 ‘만족한다’는 비율은 82.5%로 전체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

- 전년도 조사에서 아동수당 만족도는 아동수당을 ‘받는’ 400명(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pm 4.90\%$ p)을 대상으로 했고 ‘만족’ 비율은 87.3%였음. 이번 조사에서 아동수당 수령자는 200명(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pm 6.93\%$ p)이었고, ‘만족’ 비율은 82.5%임.
- 지난해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수치상 4.8%p 낮았으나, 전년도와 올해 오차범위의 합계(약 $\pm 11.8\%$ p)를 고려 시 실제로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통계적 유의미성과는 별개로 만족도 조사 시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번 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물가상승률(6월 6.0%, 7월 6.3%)을 겪은 후 실시되어, 아동수당 금액(10만원)에 대한 상대적 가치평가가 낮아졌을 수 있음.

〈표 3-8〉 아동수당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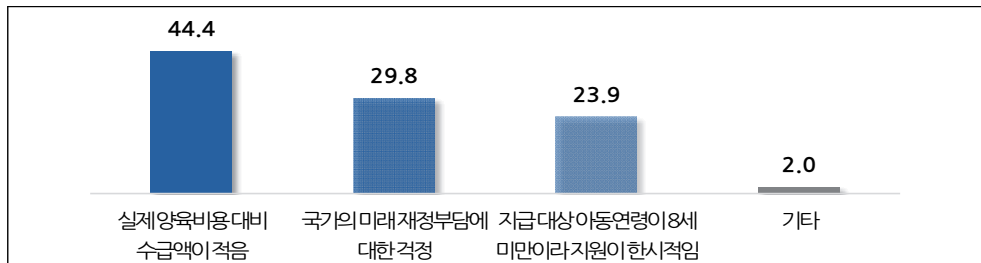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매우 만족한다 ①	만족하는 편이다 ②	불만족 하는 편이다③	매우 불만족 한다④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도 (/점)
전 체		(1000)	17.5	62.0	16.7	3.8	79.5	20.5	64.4
연령대	19~29세	(170)	20.6	61.2	15.3	2.9	81.8	18.2	66.5
	30대	(151)	17.2	68.2	11.9	2.6	85.4	14.6	66.7
	40대	(184)	16.8	54.9	20.7	7.6	71.7	28.3	60.3
	50대	(196)	15.8	62.2	17.9	4.1	78.1	21.9	63.3
	60세 이상	(299)	17.4	63.5	16.7	2.3	80.9	19.1	65.3
권역	서울	(188)	16.0	61.2	19.7	3.2	77.1	22.9	63.3
	경기인천	(318)	15.4	62.6	17.9	4.1	78.0	22.0	63.1
	대전충청세종	(107)	23.4	59.8	13.1	3.7	83.2	16.8	67.6
	강원	(31)	22.6	64.5	9.7	3.2	87.1	12.9	68.8
	부산울산경남	(150)	18.0	60.7	17.3	4.0	78.7	21.3	64.2
	대구경북	(98)	17.3	67.3	12.2	3.1	84.7	15.3	66.3
	광주-전라	(96)	20.8	56.3	17.7	5.2	77.1	22.9	64.2
성별	제주	(12)	-	91.7	8.3	-	91.7	8.3	63.9
	남성	(496)	18.5	61.7	15.5	4.2	80.2	19.8	64.9
미성년 자녀	여성	(504)	16.5	62.3	17.9	3.4	78.8	21.2	64.0
	있다	(322)	16.1	61.5	18.0	4.3	77.6	22.4	63.2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18.1	62.2	16.1	3.5	80.4	19.6	65.0
	1명	(189)	14.3	61.4	20.6	3.7	75.7	24.3	62.1
	2명	(119)	20.2	58.8	15.1	5.9	79.0	21.0	64.4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7.1	85.7	7.1	-	92.9	7.1	66.7
	받고 있음	(200)	22.5	60.0	14.5	3.0	82.5	17.5	67.3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16.3	62.5	17.3	4.0	78.8	21.3	63.7
	만족	(795)	22.0	78.0	-	-	100.0	-	74.0
최종학력	불만족	(205)	-	-	81.5	18.5	-	100.0	27.1
	고졸이하	(222)	20.3	59.0	17.1	3.6	79.3	20.7	65.3
	전문대졸	(137)	18.2	62.8	14.6	4.4	81.0	19.0	65.0
	대졸	(530)	16.8	62.8	16.2	4.2	79.6	20.4	64.1
직업	대학원이상	(111)	14.4	63.1	20.7	1.8	77.5	22.5	63.4
	자영업	(86)	10.5	70.9	16.3	2.3	81.4	18.6	63.2
	화이트칼라	(447)	16.3	63.3	16.6	3.8	79.6	20.4	64.1
	블루칼라	(134)	23.1	56.0	15.7	5.2	79.1	20.9	65.7
	주부	(141)	16.3	63.1	17.0	3.5	79.4	20.6	64.1
	학생	(31)	22.6	54.8	19.4	3.2	77.4	22.6	65.6
	농림축어업	(3)	66.7	33.3	-	-	100.0	-	88.9
직업	은퇴/무직/기타	(158)	19.0	59.5	17.7	3.8	78.5	21.5	64.6

A3-1.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Q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그림 3-6]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N: 205, 단위: %]



□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44.4%

○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20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는 응답 29.8%,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응답이 23.9%로 조사되었고, '기타'이유는 2.0%임.

○ 연령대나 권역에 따라서는 상세한 분석이 어려움.

○ 성별에 따라서는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라는 응답이 남성에서 50.0%로 여성(39.3%)보다 높았으며,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36.4%로 남성(22.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라는 응답은 51.4%로 없는 응답자(40.6%)보다 높았고,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응답도 자녀가 있는 경우 36.1%로 없는 응답자(17.3%)보다 높았음. 한편,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응답은 미성년 자녀가 '없음' 응답자에서 39.1%에 달했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서는 12.5%에 불과하였음.

○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 중에서 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응답자는 35명에 불과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나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이라는 응답이 74.3%에 달함.

○ 최종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응답자 수가 적어 세부 분석이 어려움.

〈표 3-9〉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응답자수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기타
전 체		(205)	44.4	29.8	23.9	2.0
연령대	19~29세	(31)	48.4	32.3	16.1	3.2
	30대	(22)	45.5	18.2	36.4	-
	40대	(52)	48.1	17.3	34.6	-
	50대	(43)	30.2	39.5	27.9	2.3
	60세 이상	(57)	49.1	36.8	10.5	3.5
권역	서울	(43)	55.8	32.6	11.6	-
	경기·인천	(70)	45.7	41.4	12.9	-
	대전·충청·세종	(18)	44.4	22.2	33.3	-
	강원	(4)	25.0	25.0	50.0	-
	부산·울산·경남	(32)	31.3	15.6	53.1	-
	대구·경북	(15)	46.7	26.7	20.0	6.7
	광주·전라	(22)	36.4	18.2	31.8	13.6
	제주	(1)	100.0	-	-	-
성별	남성	(98)	50.0	22.4	24.5	3.1
	여성	(107)	39.3	36.4	23.4	0.9
미성년 자녀	있다	(72)	51.4	12.5	36.1	-
	없다	(133)	40.6	39.1	17.3	3.0
미성년 자녀수	1명	(46)	43.5	13.0	43.5	-
	2명	(25)	64.0	12.0	24.0	-
	3명	(1)	100.0	-	-	-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35)	74.3	8.6	17.1	-
	받지 않음	(170)	38.2	34.1	25.3	2.4
최종학력	고졸이하	(46)	39.1	39.1	17.4	4.3
	전문대졸	(26)	42.3	19.2	34.6	3.8
	대졸	(108)	47.2	28.7	24.1	-
	대학원이상	(25)	44.0	28.0	24.0	4.0
직업	자영업	(16)	56.3	18.8	18.8	6.3
	화이트칼라	(91)	42.9	34.1	22.0	1.1
	블루칼라	(28)	35.7	32.1	28.6	3.6
	주부	(29)	48.3	34.5	17.2	-
	학생	(7)	42.9	42.9	14.3	-
	은퇴/무직/기타	(34)	47.1	14.7	35.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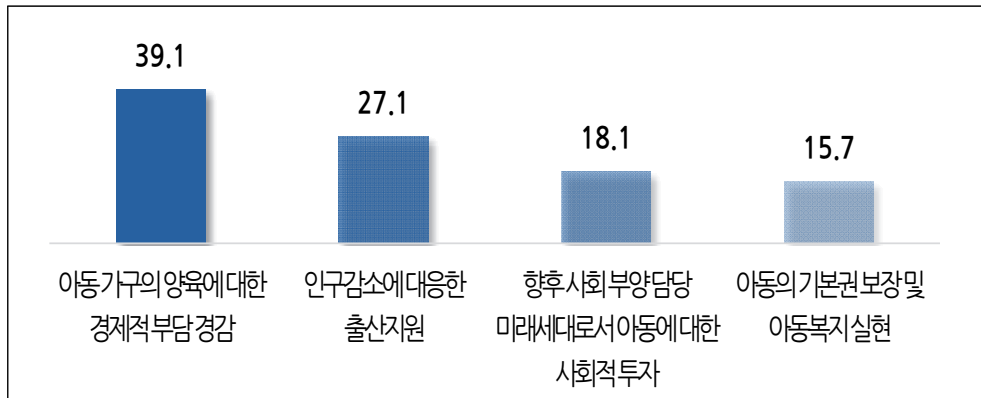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아동수당 주요역할

Q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7] 아동수당 주요역할

[N: 1,000, 단위: %]



□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39.1%

-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27.1%,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18.1%,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응답자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응답이 16.6%로 전체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인 것 외 전체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권역에 따라서는 부산·울산·경남 응답자에서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46.7%로 다른 지역의 응답자 보다 다소 높았음.

-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43.5%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37.0%)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 30.2%로 있는 응답자(2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아동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서도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에서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46.0%로 ‘받지 않는’ 응답자(37.4%)보다 높았으나,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은 수당을 ‘받지 않는’ 응답자에서 29.9%로 ‘받는’ 응답자(16.0%)보다 높았음.
- 학력별로는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 대학원 이상에서 46.8%로 다소 높았고, 직업에 따라서는 같은 응답이 ‘주부’에서 46.8%로 다른 응답자보다 높았음.

5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10〉 아동수당 주요역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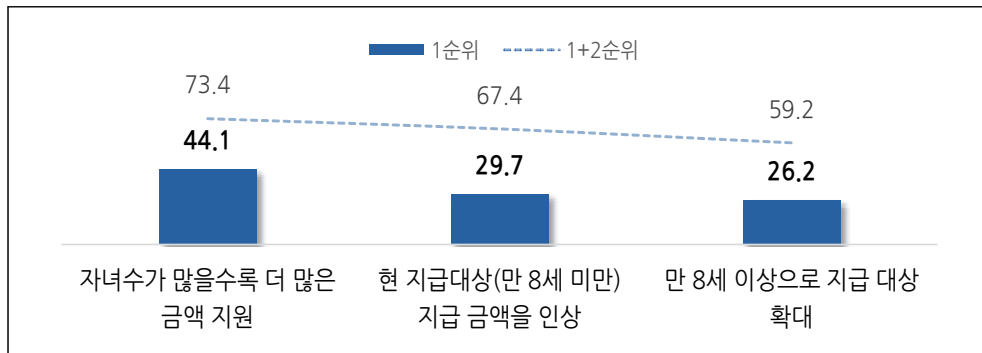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전 체		(1000)	39.1	27.1	18.1	15.7
연령대	19~29세	(170)	34.7	31.2	14.7	19.4
	30대	(151)	42.4	16.6	20.5	20.5
	40대	(184)	41.3	27.7	16.3	14.7
	50대	(196)	35.7	27.6	24.5	12.2
	60세 이상	(299)	40.8	29.4	15.7	14.0
권역	서울	(188)	36.2	22.3	22.3	19.1
	경기·인천	(318)	39.3	25.5	20.1	15.1
	대전·충청·세종	(107)	35.5	32.7	18.7	13.1
	강원	(31)	45.2	22.6	9.7	22.6
	부산·울산·경남	(150)	46.7	25.3	12.7	15.3
	대구·경북	(98)	33.7	36.7	16.3	13.3
	광주·전라	(96)	37.5	31.3	16.7	14.6
성별	남성	(496)	35.9	32.5	18.1	13.5
	여성	(504)	42.3	21.8	18.1	17.9
미성년 자녀	있다	(322)	43.5	20.5	19.6	16.5
	없다	(678)	37.0	30.2	17.4	15.3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40.2	20.6	21.7	17.5
	2명	(119)	46.2	21.0	18.5	14.3
	3명	(14)	64.3	14.3	-	21.4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46.0	16.0	19.5	18.5
	받지 않음	(800)	37.4	29.9	17.8	15.0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39.2	27.0	17.6	16.1
	불만족	(205)	38.5	27.3	20.0	14.1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36.9	28.8	15.8	18.5
	전문대졸	(137)	42.3	27.0	16.1	14.6
	대졸	(530)	37.5	25.5	20.6	16.4
	대학원이상	(111)	46.8	31.5	13.5	8.1
직업	자영업	(86)	33.7	34.9	17.4	14.0
	화이트칼라	(447)	40.3	27.7	17.0	15.0
	블루칼라	(134)	34.3	26.9	22.4	16.4
	주부	(141)	46.8	16.3	17.7	19.1
	학생	(31)	16.1	45.2	9.7	29.0
	농림축어업	(3)	33.3	33.3	33.3	-
	은퇴/무직/기타	(158)	40.5	27.2	19.6	12.7

B2. 아동수당 확대방식

Q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	---

[그림 3-8]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N: 1,000, 단위: %]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 방식(1순위),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지원’ 44.1%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원’이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29.7%,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26.2%로 나타난다.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19~29세, 50대 및 60대에서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30대는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이 37.7%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36.4%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에 따라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35.3%로 약간 낮은 특징을 보인 것 외에는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 응답이 남성에서 47.8%로 여성(40.5%)보다 높았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여성에서 29.4%로 남성(23.0%)에서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39.8%로 가장 높았으나, '없는' 응답자에서는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에 대해 40.5%의 비율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음.
- 아동수당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 응답이 45.5%였으나, '불만족'하는 경우 38.5%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학력 및 직업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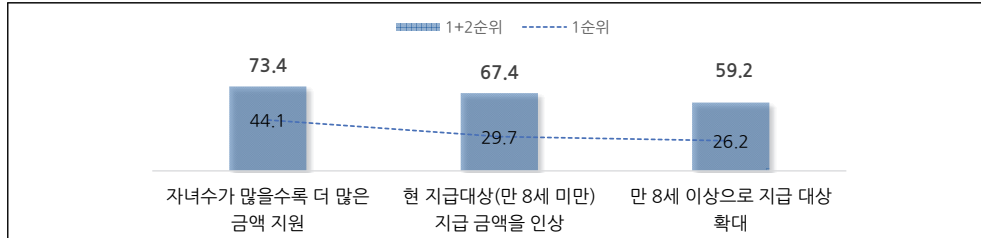
〈표 3-11〉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단위: %]

구 분		응답자수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전 체		(1000)	44.1	29.7	26.2
연령대	19~29세	(170)	44.1	28.2	27.6
	30대	(151)	27.8	37.7	34.4
	40대	(184)	29.9	33.7	36.4
	50대	(196)	54.1	22.4	23.5
	60세 이상	(299)	54.5	28.8	16.7
권역	서울	(188)	43.6	28.7	27.7
	경기·인천	(318)	45.9	32.4	21.7
	대전·충청·세종	(107)	39.3	29.9	30.8
	강원	(31)	48.4	22.6	29.0
	부산·울산·경남	(150)	35.3	32.7	32.0
	대구·경북	(98)	50.0	24.5	25.5
	광주·전라	(96)	46.9	26.0	27.1
	제주	(12)	75.0	25.0	-
성별	남성	(496)	47.8	29.2	23.0
	여성	(504)	40.5	30.2	29.4
미성년 자녀	있다	(322)	28.9	31.4	39.8
	없다	(678)	51.3	28.9	19.8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32.3	30.7	37.0
	2명	(119)	21.8	35.3	42.9
	3명	(14)	42.9	7.1	50.0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22.0	40.5	37.5
	받지 않음	(800)	49.6	27.0	23.4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45.5	28.6	25.9
	불만족	(205)	38.5	34.1	27.3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46.8	27.9	25.2
	전문대졸	(137)	43.8	24.8	31.4
	대졸	(530)	42.8	31.1	26.0
	대학원이상	(111)	45.0	32.4	22.5
직업	자영업	(86)	50.0	23.3	26.7
	화이트칼라	(447)	42.7	31.5	25.7
	블루칼라	(134)	41.0	29.9	29.1
	주부	(141)	38.3	31.2	30.5
	학생	(31)	41.9	19.4	38.7
	농림축어업	(3)	66.7	33.3	-
	은퇴/무직/기타	(158)	52.5	28.5	19.0

[그림 3-9]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N: 1,000, 단위: %]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 방식(1+2순위),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지원’
73.4%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계 비율에 대해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7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67.4%,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59.2%로 1순위 응답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각 80.1%, 76.9%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40대에서는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가 69.0%로 전체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 권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 응답이 남성에서 78.0%로 여성(68.8%)보다 높았으나,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여성에서 63.5%로 남성(54.8%)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이 68.3%,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64.6%, ‘만 8세 이상으로 지급대상 확대’가 67.1%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이 73.0%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음.

○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학력 및 직업에 따라서도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12〉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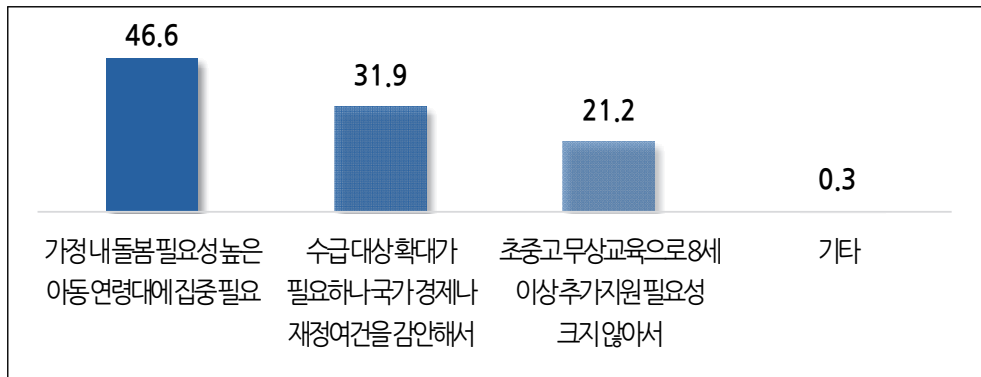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전 체		(1000)	73.4	67.4	59.2
연령대	19~29세	(170)	72.9	69.4	57.6
	30대	(151)	61.6	71.5	66.9
	40대	(184)	70.7	60.3	69.0
	50대	(196)	80.1	63.8	56.1
	60세 이상	(299)	76.9	70.9	52.2
권역	서울	(188)	75.0	69.1	55.9
	경기·인천	(318)	71.4	71.4	57.2
	대전·충청·세종	(107)	72.0	71.0	57.0
	강원	(31)	74.2	61.3	64.5
	부산·울산·경남	(150)	74.0	62.0	64.0
	대구·경북	(98)	74.5	63.3	62.2
	광주·전라	(96)	74.0	65.6	60.4
성별	제주	(12)	91.7	33.3	75.0
	남성	(496)	78.0	67.1	54.8
미성년 자녀	여성	(504)	68.8	67.7	63.5
	있다	(322)	68.3	64.6	67.1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75.8	68.7	55.5
	1명	(189)	72.0	65.1	63.0
	2명	(119)	63.9	63.9	72.3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57.1	64.3	78.6
	받고 있음	(200)	61.0	73.0	66.0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76.5	66.0	57.5
	만족	(795)	73.7	67.3	59.0
최종학력	불만족	(205)	72.2	67.8	60.0
	고졸이하	(222)	74.8	66.2	59.0
	전문대졸	(137)	73.0	61.3	65.7
	대졸	(530)	72.6	69.2	58.1
직업	대학원이상	(111)	74.8	68.5	56.8
	자영업	(86)	77.9	67.4	54.7
	화이트칼라	(447)	74.0	65.1	60.9
	블루칼라	(134)	73.9	65.7	60.4
	주부	(141)	70.2	70.2	59.6
	학생	(31)	64.5	77.4	58.1
	농림축어업	(3)	100.0	100.0	-
은퇴/무직/기타		(158)	72.8	70.3	57.0

B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Q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0]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N: 1,000, 단위: %]



□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 대한 지급 금액 인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46.6%

○ 아동수당이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 대한 지급 금액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1.9%, ‘초중고 무상교육의 실시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21.2%로 조사되었음. ‘기타’ 의견은 0.3%의 비율을 보임.

○ 연령대나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남성에서는 51.2.%였으나 여성에서는 42.1%에 그쳤고,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35.7%로 남성(28.0%)보다 약간 높았음.

-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 아동수당의 수령 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응답자 간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나,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하는 경우 '초중고 무상교육의 실시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가 19.1%에 그쳤으나 '불만족'하는 경우 29.3%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 학력자에서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54.1%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직업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1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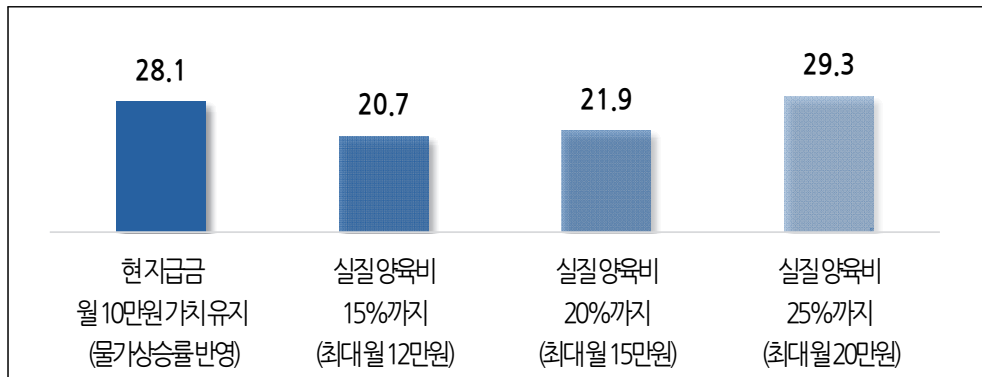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초중고 무상교육의 실시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기타
전 체		(1000)	46.6	31.9	21.2	0.3
연령대	19~29세	(170)	50.0	28.2	21.8	-
	30대	(151)	44.4	29.8	25.8	-
	40대	(184)	42.9	33.7	22.8	0.5
	50대	(196)	50.0	32.7	16.8	0.5
	60세 이상	(299)	45.8	33.4	20.4	0.3
권역	서울	(188)	50.0	32.4	17.0	0.5
	경가인천	(318)	48.7	30.5	20.4	0.3
	대전·충청·세종	(107)	42.1	29.0	28.0	0.9
	강원	(31)	41.9	48.4	9.7	-
	부산·울산·경남	(150)	41.3	34.0	24.7	-
	대구·경북	(98)	42.9	31.6	25.5	-
	광주·전라	(96)	49.0	32.3	18.8	-
성별	제주	(12)	66.7	16.7	16.7	-
	남성	(496)	51.2	28.0	20.4	0.4
미성년 자녀	여성	(504)	42.1	35.7	22.0	0.2
	있다	(322)	44.1	35.7	19.9	0.3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47.8	30.1	21.8	0.3
	1명	(189)	40.7	36.5	22.8	-
	2명	(119)	45.4	37.8	16.0	0.8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78.6	7.1	14.3	-
	받고 있음	(200)	47.5	32.0	20.0	0.5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46.4	31.9	21.5	0.3
	만족	(795)	47.7	32.8	19.1	0.4
최종학력	불만족	(205)	42.4	28.3	29.3	-
	고졸이하	(222)	46.8	33.8	19.4	-
	전문대졸	(137)	43.8	28.5	27.0	0.7
	대졸	(530)	45.7	34.2	19.8	0.4
직업	대학원이상	(111)	54.1	21.6	24.3	-
	자영업	(86)	51.2	32.6	16.3	-
	화이트칼라	(447)	48.5	29.3	22.1	-
	블루칼라	(134)	41.0	31.3	26.9	0.7
	주부	(141)	40.4	40.4	19.1	-
	학생	(31)	41.9	45.2	12.9	-
	농림축어업	(3)	66.7	33.3	-	-
직업	은퇴/무직/기타	(158)	49.4	29.1	20.3	1.3

B3-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Q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

[그림 3-1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N: 1,000, 단위: %]



□ 현재 지급 금액(10만원) 인상 시, ‘실질 양육비의 25%(최대 월 20만원)까지 인상해야’ 29.3%

- 현재 10만원인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얼마나 인상해야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실질 양육비의 25%까지(최대 월 20만원)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 28.1%,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21.9%,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20.7%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가 32.5%, ‘실질 양육비의 25%까지 보조’가 35.8%로 다른 응답자 보다 높았고, 50대의 경우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가 37.2%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음.
-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실질 양육비의 25%까지 보조’가 33.7%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가 34.9%로 가장 높았음.
-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확연한 차이가 없었음.
- 아동수당의 수령 여부에 따라서는 ‘받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실질 양육비의 25%까지 보조’가 37.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받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
- 아동수당 만족도에 따라서도 ‘불만족’한 응답자에서 ‘실질 양육비의 25%까지 보조’가 39.0%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3-14〉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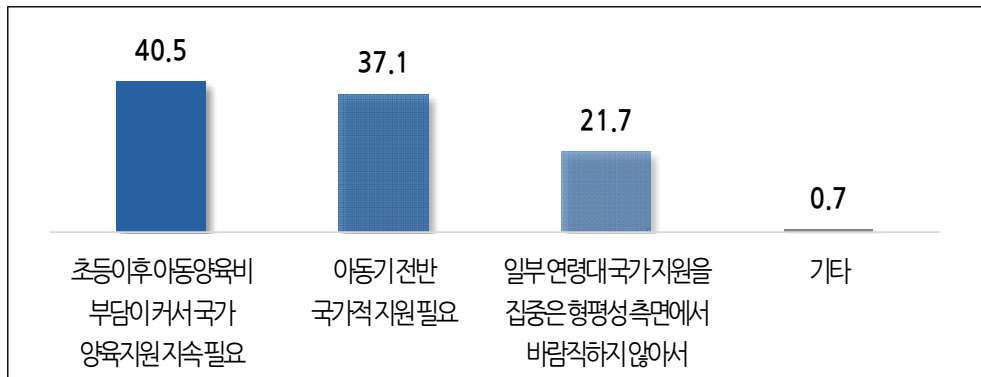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 (최대 월12만원)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 (최대 월15만원)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 (최대 월20만원)
전 체		(1000)	28.1	20.7	21.9	29.3
연령대	19~29세	(170)	21.8	28.2	22.9	27.1
	30대	(151)	15.2	32.5	16.6	35.8
	40대	(184)	34.8	16.8	19.6	28.8
	50대	(196)	37.2	17.9	19.4	25.5
	60세 이상	(299)	28.1	14.7	27.1	30.1
권역	서울	(188)	27.7	19.1	22.3	30.9
	경기·인천	(318)	30.2	18.2	20.8	30.8
	대전·충청·세종	(107)	26.2	25.2	25.2	23.4
	강원	(31)	22.6	19.4	25.8	32.3
	부산·울산·경남	(150)	30.0	18.0	25.3	26.7
	대구·경북	(98)	28.6	18.4	25.5	27.6
	광주·전라	(96)	26.0	31.3	12.5	30.2
성별	제주	(12)	-	41.7	8.3	50.0
	남성	(496)	21.2	20.6	24.6	33.7
	여성	(504)	34.9	20.8	19.2	25.0
미성년 자녀	있다	(322)	24.2	22.7	20.8	32.3
	없다	(678)	29.9	19.8	22.4	27.9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28.0	23.3	19.0	29.6
	2명	(119)	20.2	24.4	22.7	32.8
	3명	(14)	7.1	-	28.6	64.3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17.0	25.0	21.0	37.0
	받지 않음	(800)	30.9	19.6	22.1	27.4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26.8	22.8	23.6	26.8
	불만족	(205)	33.2	12.7	15.1	39.0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29.3	20.7	23.9	26.1
	전문대졸	(137)	24.1	23.4	19.7	32.8
	대졸	(530)	29.4	20.8	21.3	28.5
	대학원이상	(111)	24.3	17.1	23.4	35.1
직업	자영업	(86)	26.7	20.9	22.1	30.2
	화이트칼라	(447)	27.3	20.1	22.4	30.2
	블루칼라	(134)	26.9	30.6	12.7	29.9
	주부	(141)	31.9	17.0	20.6	30.5
	학생	(31)	22.6	29.0	32.3	16.1
	농림축어업	(3)	66.7	-	-	33.3
	은퇴/무직/기타	(158)	29.1	15.8	27.8	27.2

B4.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Q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2]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N: 1,000, 단위: %]



□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방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40.5%

○ 아동수당을 ‘만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가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37.1%,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21.7%임. ‘기타’는 0.7%임.

○ 연령대에 따라서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는 응답은 만19~29세에서는 45.9%였으나 고연령층일수록 낮은 비율을 보여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각 37.8%로 나타났음. 거주권역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서는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가 46.6%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았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는 응답이 29.5%로 약간 낮았음.

- 아동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서도 ‘받는’ 응답자에서는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가 48.0%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는 응답이 30.5%로 약간 낮았음.
-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불만족’한 응답자 가운데서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가 31.2%로 전체에 비해 높았음.
-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응답자에서는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가 46.0%로 다소 높았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가 45.9%로 전체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표 3-15〉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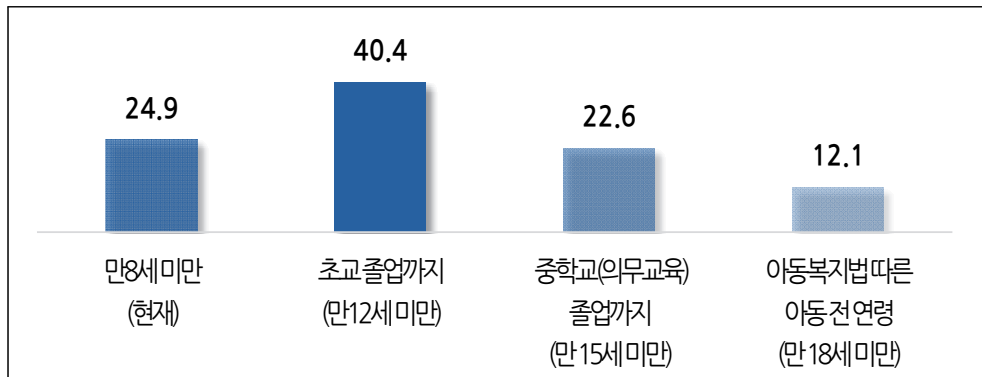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기타
전 체		(1000)	40.5	37.1	21.7	0.7
연령대	19~29세	(170)	45.9	34.7	19.4	-
	30대	(151)	43.0	32.5	24.5	-
	40대	(184)	40.8	33.7	25.5	-
	50대	(196)	37.8	39.3	21.9	1.0
	60세 이상	(299)	37.8	41.5	19.1	1.7
권역	서울	(188)	40.4	37.8	19.7	2.1
	경기·인천	(318)	41.8	34.9	22.3	0.9
	대전·충청·세종	(107)	40.2	40.2	19.6	-
	강원	(31)	38.7	41.9	19.4	-
	부산·울산·경남	(150)	42.7	36.7	20.7	-
	대구·경북	(98)	37.8	35.7	26.5	-
	광주·전라	(96)	37.5	37.5	25.0	-
	제주	(12)	33.3	58.3	8.3	-
성별	남성	(496)	39.5	38.3	21.2	1.0
	여성	(504)	41.5	35.9	22.2	0.4
미성년 자녀	있다	(322)	46.6	29.5	23.9	-
	없다	(678)	37.6	40.7	20.6	1.0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45.0	31.7	23.3	-
	2명	(119)	47.1	26.1	26.9	-
	3명	(14)	64.3	28.6	7.1	-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48.0	30.5	21.5	-
	받지 않음	(800)	38.6	38.8	21.8	0.9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41.6	38.2	19.2	0.9
	불만족	(205)	36.1	32.7	31.2	-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39.2	34.2	26.6	-
	전문대졸	(137)	46.0	35.0	18.2	0.7
	대졸	(530)	39.8	37.0	22.1	1.1
	대학원이상	(111)	39.6	45.9	14.4	-
직업	자영업	(86)	41.9	41.9	14.0	2.3
	화이트칼라	(447)	39.1	37.8	22.6	0.4
	블루칼라	(134)	38.1	35.8	26.1	-
	주부	(141)	44.7	32.6	22.0	0.7
	학생	(31)	41.9	35.5	22.6	-
	농림축어업	(3)	33.3	66.7	-	-
	은퇴/무직/기타	(158)	41.8	37.3	19.6	1.3

B4-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Q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3]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N: 1,000, 단위: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 ‘초등학교 졸업 때(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해야 40.4%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 확대할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24.9%,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22.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이 48.3%로 전체에 비해 높았고, 60세 이상의 경우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33.4%로 전체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에 따라서는 대구·경북에서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34.7%로 다소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 미성년 자녀가 ‘없음’ 응답자에서는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28.9%로 전체 비해 높았고,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응답자에서도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27.4%로 아동수당을 받는 응답자(15.0%)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 아동수당에 만족도에 따라서는 ‘불만족’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이 21.0%로 전체 결과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음.
-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30.6%로 다소 높았음.
- 직업에 따라서는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가 자영업자(33.7%), 주부(32.6%)에 약간 높았고,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응답자(46.3%)에서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블루칼라(33.6%)에서 전체결과 보다 약간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16〉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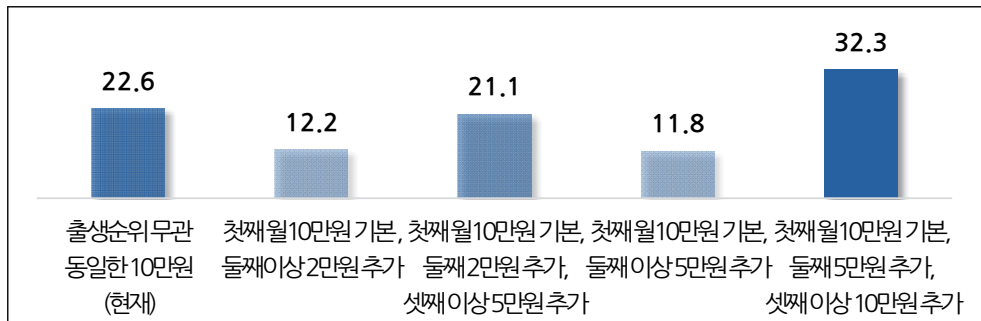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전 체		(1000)	24.9	40.4	22.6	12.1
연령대	19~29세	(170)	15.9	40.0	29.4	14.7
	30대	(151)	16.6	48.3	25.2	9.9
	40대	(184)	20.1	42.4	21.2	16.3
	50대	(196)	30.6	35.2	21.9	12.2
	60세 이상	(299)	33.4	38.8	18.7	9.0
권역	서울	(188)	25.0	43.6	20.2	11.2
	경기·인천	(318)	26.7	38.1	24.8	10.4
	대전·충청·세종	(107)	21.5	44.9	25.2	8.4
	강원	(31)	12.9	48.4	16.1	22.6
	부산·울산·경남	(150)	23.3	42.0	24.0	10.7
	대구·경북	(98)	34.7	33.7	16.3	15.3
	광주·전라	(96)	19.8	39.6	21.9	18.8
성별	제주	(12)	16.7	33.3	33.3	16.7
	남성	(496)	24.2	43.3	21.0	11.5
미성년 자녀	여성	(504)	25.6	37.5	24.2	12.7
	있다	(322)	16.5	44.1	24.2	15.2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28.9	38.6	21.8	10.6
	1명	(189)	15.9	45.0	22.8	16.4
	2명	(119)	18.5	42.9	26.1	12.6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7.1	42.9	28.6	21.4
	받고 있음	(200)	15.0	49.5	24.0	11.5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27.4	38.1	22.3	12.3
	만족	(795)	24.2	43.1	22.9	9.8
최종학력	불만족	(205)	27.8	29.8	21.5	21.0
	고졸이하	(222)	30.6	33.8	21.6	14.0
	전문대졸	(137)	19.7	41.6	25.5	13.1
	대졸	(530)	24.3	42.3	22.5	10.9
직업	대학원이상	(111)	22.5	43.2	21.6	12.6
	자영업	(86)	33.7	37.2	17.4	11.6
	화이트칼라	(447)	23.0	46.3	18.8	11.9
	블루칼라	(134)	18.7	39.6	33.6	8.2
	주부	(141)	32.6	30.5	24.1	12.8
	학생	(31)	16.1	35.5	38.7	9.7
	농림축어업	(3)	-	33.3	-	66.7
직업	은퇴/무직/기타	(158)	25.9	36.1	22.8	15.2

B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Q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4]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N: 1,000, 단위: %]



□ 출생순위 별 차등지원 방안,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32.3%

-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 22.6%,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21.1%,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12.2%,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와 50대에서는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이 각 31.0%, 29.1%로 전체에 비해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이 40.5%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권역에 따라서는 광주·전라에서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이 9.4%로 매우 낮은 대신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이 27.1%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41.5%로 다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이 29.4%로 약간 높았음.
- 미성년 자녀 여부나 아동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한 응답자의 경우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37.1%,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이 28.8%로 ‘만족’한 응답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에서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이 36.2%로 다소 높았음.

7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17〉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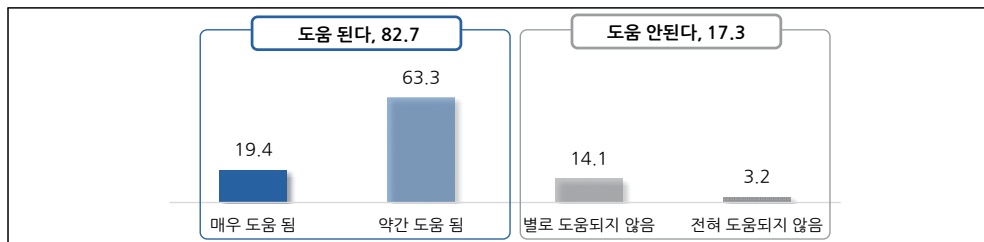
구 분		N	첫째 10만, 둘째 10만, 셋째 10만, 넷째 10만, ...	첫째 10만, 둘째 12만(+2), 셋째 12만(+2), 넷째 12만(+2) ...	첫째 10만, 둘째 12만(+2), 셋째 15만(+5), 넷째 15만(+5) ...	첫째 10만, 둘째 15만(+5), 셋째 15만(+5), 넷째 15만(+5) ...	첫째 10만, 둘째 15만(+5), 셋째 20만(+10), 넷째 20만(+10) ...
전 체		(1000)	22.6	12.2	21.1	11.8	32.3
연령대	19~29세	(170)	13.5	16.5	25.9	14.1	30.0
	30대	(151)	21.9	17.2	21.9	16.6	22.5
	40대	(184)	31.0	9.8	16.8	10.9	31.5
	50대	(196)	29.1	11.7	19.4	9.7	30.1
	60세 이상	(299)	18.7	9.0	21.7	10.0	40.5
권역	서울	(188)	21.3	10.6	21.8	10.6	35.6
	경기인천	(318)	27.0	11.0	17.6	10.4	34.0
	대전충청세종	(107)	23.4	17.8	22.4	13.1	23.4
	강원	(31)	29.0	-	25.8	9.7	35.5
	부산울산경남	(150)	26.0	9.3	20.7	13.3	30.7
	대구경북	(98)	18.4	18.4	23.5	9.2	30.6
	광주전라	(96)	9.4	14.6	27.1	15.6	33.3
	제주	(12)	-	16.7	16.7	33.3	33.3
성별	남성	(496)	15.7	10.5	20.2	12.1	41.5
	여성	(504)	29.4	13.9	22.0	11.5	23.2
미성년 자녀	있다	(322)	23.9	12.4	17.1	15.2	31.4
	없다	(678)	22.0	12.1	23.0	10.2	32.7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24.3	14.3	20.1	13.8	27.5
	2명	(119)	24.4	10.9	12.6	18.5	33.6
	3명	(14)	14.3	-	14.3	7.1	64.3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19.5	15.5	17.0	16.5	31.5
	받지 않음	(800)	23.4	11.4	22.1	10.6	32.5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21.0	13.1	23.0	11.8	31.1
	불만족	(205)	28.8	8.8	13.7	11.7	37.1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25.2	14.9	20.3	11.3	28.4
	전문대졸	(137)	20.4	11.7	22.6	14.6	30.7
	대졸	(530)	22.5	11.7	21.1	11.3	33.4
	대학원이상	(111)	20.7	9.9	20.7	11.7	36.9
직업	자영업	(86)	23.3	12.8	17.4	8.1	38.4
	화이트칼라	(447)	20.1	10.5	21.9	13.2	34.2
	블루칼라	(134)	20.9	16.4	19.4	17.2	26.1
	주부	(141)	36.2	10.6	17.0	9.2	27.0
	학생	(31)	19.4	22.6	25.8	3.2	29.0
	농림축어업	(3)	33.3	-	-	33.3	33.3
	은퇴/무직/기타	(158)	19.0	12.7	25.3	8.9	34.2

B5-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Q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N: 1,000, 단위: %]



□ 아동수당 출생순위 별 차등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82.7%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지원이 자녀가 2명 이상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82.7%(매우 도움이 된다 19.4%, 약간 도움이 된다 63.3%)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7.3%(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에 따라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은 60세이상에서 88.0%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 75.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응답자 거주권역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전반적으로 큰 응답 경향차이가 없었음.
- 아동수당을 수령하는지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한편, 아동수당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7.5%에 달했으나, ‘불만족’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63.9%에 그쳤음.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직업에 따라서도 ‘블루칼라’ 업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76.1%로 약간 낮은 점 외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7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18〉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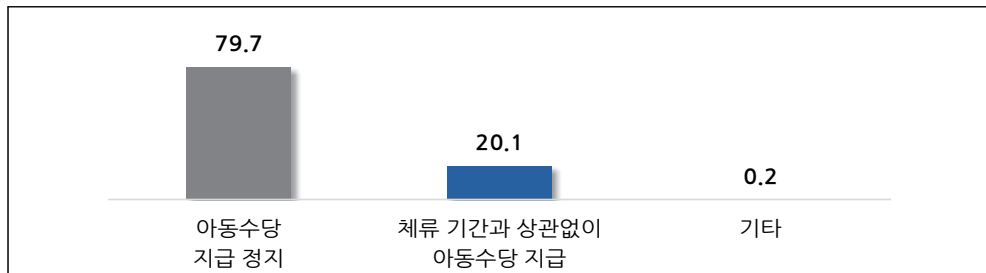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매우 도움 됨 ①	약간 도움 됨 ②	별로 도움되지 않음 ③	전혀 도움되지 않음 ④	도움 된다 ①+②	도움 안된다 ③+④	효과성 (/점)
전 체		(1000)	19.4	63.3	14.1	3.2	82.7	17.3	66.3
연령대	19~29세	(170)	17.6	62.4	17.1	2.9	80.0	20.0	64.9
	30대	(151)	19.9	55.6	21.2	3.3	75.5	24.5	64.0
	40대	(184)	19.0	61.4	14.1	5.4	80.4	19.6	64.7
	50대	(196)	21.4	63.3	12.2	3.1	84.7	15.3	67.7
	60세 이상	(299)	19.1	68.9	10.0	2.0	88.0	12.0	68.4
권역	서울	(188)	16.0	64.9	15.4	3.7	80.9	19.1	64.4
	경기·인천	(318)	22.0	63.2	12.6	2.2	85.2	14.8	68.4
	대전·충청·세종	(107)	16.8	61.7	15.9	5.6	78.5	21.5	63.3
	강원	(31)	16.1	74.2	6.5	3.2	90.3	9.7	67.8
	부산·울산·경남	(150)	16.0	62.7	18.0	3.3	78.7	21.3	63.8
	대구·경북	(98)	19.4	65.3	14.3	1.0	84.7	15.3	67.7
	광주·전라	(96)	26.0	58.3	10.4	5.2	84.4	15.6	68.4
	제주	(12)	25.0	58.3	16.7	-	83.3	16.7	69.5
성별	남성	(496)	18.1	65.5	12.9	3.4	83.7	16.3	66.1
	여성	(504)	20.6	61.1	15.3	3.0	81.7	18.3	66.5
미성년 자녀	있다	(322)	21.4	60.6	14.9	3.1	82.0	18.0	66.8
	없다	(678)	18.4	64.6	13.7	3.2	83.0	17.0	66.1
미성년 자녀수	1명	(189)	16.9	63.0	16.4	3.7	79.9	20.1	64.4
	2명	(119)	25.2	58.0	14.3	2.5	83.2	16.8	68.6
	3명	(14)	50.0	50.0	-	-	100.0	-	83.4
아동수당 수령여부	받고 있음	(200)	24.0	58.5	13.5	4.0	82.5	17.5	67.5
	받지 않음	(800)	18.3	64.5	14.3	3.0	82.8	17.3	66.0
아동수당 만족도	만족	(795)	21.8	65.8	11.3	1.1	87.5	12.5	69.4
	불만족	(205)	10.2	53.7	24.9	11.2	63.9	36.1	54.3
최종학력	고졸이하	(222)	22.5	59.0	14.0	4.5	81.5	18.5	66.5
	전문대졸	(137)	19.0	63.5	14.6	2.9	82.5	17.5	66.2
	대졸	(530)	18.9	63.8	14.9	2.5	82.6	17.4	66.4
	대학원이상	(111)	16.2	69.4	9.9	4.5	85.6	14.4	65.8
직업	자영업	(86)	16.3	72.1	10.5	1.2	88.4	11.6	67.8
	화이트칼라	(447)	19.5	63.8	14.5	2.2	83.2	16.8	66.8
	블루칼라	(134)	20.1	56.0	17.9	6.0	76.1	23.9	63.4
	주부	(141)	22.0	62.4	13.5	2.1	84.4	15.6	68.1
	학생	(31)	22.6	61.3	9.7	6.5	83.9	16.1	66.7
	농림축어업	(3)	100.0	-	-	-	100.0	-	100.0
	은퇴/무직/기타	(158)	15.8	65.8	13.3	5.1	81.6	18.4	64.2

B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Q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N: 1,000, 단위: %]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79.7%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7%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에 그쳤음. ‘기타’ 응답은 0.2%임.
- 연령대에서는 30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27.2%로 약간 높은 것 외에는 차이없음.
- 응답자 거주권역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미성년 자녀 여부 혹은 아동수당 수령여부 및 아동수당 만족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응답자의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나 ‘전문대졸’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가 각 75.7%, 73.7%였으나, ‘대졸’과 ‘대학원 이상’ 응답자에서 각 82.5%, 82.0%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 직업에 따라서는 블루칼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35.8%로 약간 높은 것 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76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19〉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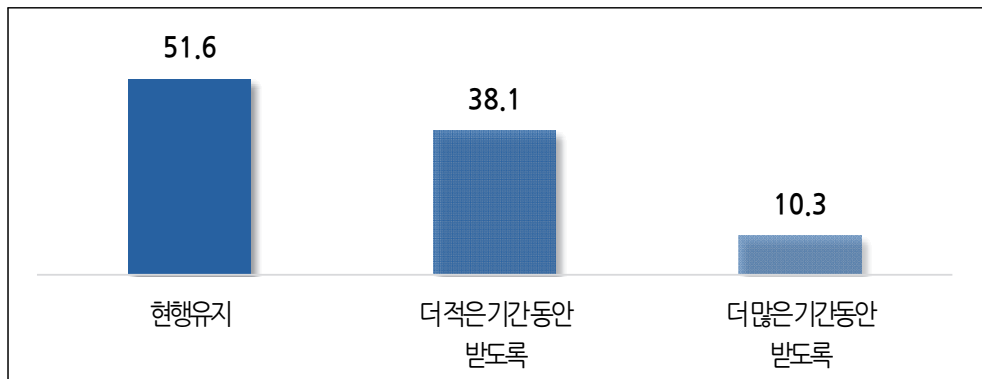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타
전 체		(1000)	79.7	20.1	0.2
연령대	19~29세	(170)	80.0	20.0	-
	30대	(151)	71.5	27.2	1.3
	40대	(184)	79.3	20.7	-
	50대	(196)	83.7	16.3	-
	60세 이상	(299)	81.3	18.7	-
권역	서울	(188)	76.6	22.9	0.5
	경기·인천	(318)	80.8	18.9	0.3
	대전·충청·세종	(107)	78.5	21.5	-
	강원	(31)	77.4	22.6	-
	부산·울산·경남	(150)	84.0	16.0	-
	대구·경북	(98)	80.6	19.4	-
	광주·전라	(96)	79.2	20.8	-
성별	제주	(12)	58.3	41.7	-
	남성	(496)	80.8	19.0	0.2
미성년 자녀	여성	(504)	78.6	21.2	0.2
	있다	(322)	76.4	23.0	0.6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81.3	18.7	-
	1명	(189)	75.1	23.8	1.1
	2명	(119)	79.0	21.0	-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71.4	28.6	-
	받고 있음	(200)	75.0	24.0	1.0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80.9	19.1	-
	만족	(795)	79.4	20.4	0.3
최종학력	불만족	(205)	81.0	19.0	-
	고졸이하	(222)	75.7	24.3	-
	전문대졸	(137)	73.7	26.3	-
	대졸	(530)	82.5	17.2	0.4
직업	대학원이상	(111)	82.0	18.0	-
	자영업	(86)	83.7	16.3	-
	화이트칼라	(447)	82.3	17.4	0.2
	블루칼라	(134)	64.2	35.8	-
	주부	(141)	77.3	22.7	-
	학생	(31)	80.6	19.4	-
	농림축어업	(3)	100.0	-	-
직업	은퇴/무직/기타	(158)	84.8	14.6	0.6

B6-1.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Q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7]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N: 1,000, 단위: %]



□ 해외체류아동 아동수당 지급정지 기간,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 51.6%

○ 해외 체류 시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의 견이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38.1%,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의견이 10.3%였음.

○ 연령대에 따라서 50대에서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 의견이 56.6%로 약간 높았고, 40대에서는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의견이 44.0%로 약간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음.

○ 응답자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대구·경북에서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가 57.1%로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

○ 미성년 자녀가 여부나 아동수당 수령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자별로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아동수당의 수당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해야 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 응답자 사이에서 44.4%였으나, '만족'하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36.5%로 차이를 보였음.
-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 응답의 비율이 56.8%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약간 높았고,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의견이 30.2%로 약간 낮았음.
- 직업에 따라서는 '블루칼라' 직종의 응답자에서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19.4%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20〉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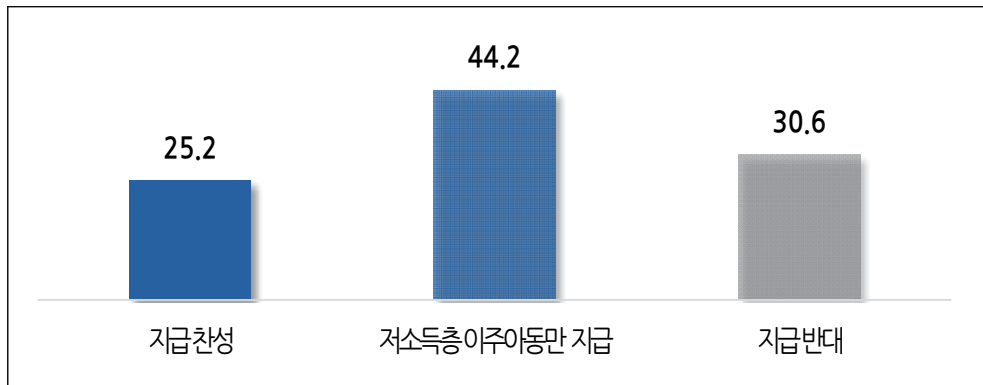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전 체		(1000)	51.6	38.1	10.3
연령대	19~29세	(170)	49.4	35.9	14.7
	30대	(151)	46.4	33.8	19.9
	40대	(184)	48.9	44.0	7.1
	50대	(196)	56.6	36.7	6.6
	60세 이상	(299)	53.8	38.8	7.4
권역	서울	(188)	44.7	42.0	13.3
	경기인천	(318)	53.8	35.8	10.4
	대전충청·세종	(107)	49.5	40.2	10.3
	강원	(31)	64.5	25.8	9.7
	부산·울산·경남	(150)	50.7	41.3	8.0
	대구·경북	(98)	57.1	35.7	7.1
	광주·전라	(96)	52.1	39.6	8.3
성별	제주	(12)	50.0	16.7	33.3
	남성	(496)	52.6	38.3	9.1
미성년 자녀	여성	(504)	50.6	37.9	11.5
	있다	(322)	51.2	36.6	12.1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51.8	38.8	9.4
	1명	(189)	50.3	39.2	10.6
	2명	(119)	54.6	31.1	14.3
아동수당 수령여부	3명	(14)	35.7	50.0	14.3
	받고 있음	(200)	55.0	32.0	13.0
아동수당 만족도	받지 않음	(800)	50.8	39.6	9.6
	만족	(795)	53.0	36.5	10.6
최종학력	불만족	(205)	46.3	44.4	9.3
	고졸이하	(222)	56.8	30.2	13.1
	전문대졸	(137)	48.9	40.1	10.9
	대졸	(530)	50.9	40.4	8.7
직업	대학원이상	(111)	47.7	40.5	11.7
	자영업	(86)	55.8	37.2	7.0
	화이트칼라	(447)	50.8	39.4	9.8
	블루칼라	(134)	44.8	35.8	19.4
	주부	(141)	58.2	31.9	9.9
	학생	(31)	48.4	32.3	19.4
	농림축어업	(3)	66.7	33.3	-
	은퇴/무직/기타	(158)	51.9	43.7	4.4

B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Q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3-18]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N: 1,000, 단위: %]



□ 이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저소득층 이주 아동에게는 지급’ 44.2%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의 44.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2%임.
- 응답자의 연령대, 거주권역,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응답자에서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가 46.0%로 ‘있어’ 응답자(40.4%)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아동수당 수령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족도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불만족’한 응답자에서 35.1%로 ‘만족’한 응답자(29.4%)보다 약간 높았음.

-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가 36.0%로 약간 높았고,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9.8%로 약간 낮았음.
-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자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가 52.3%로 다소 높았고, 블루칼라 업종 응답자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가 35.1%로 다소 높았음.

〈표 3-21〉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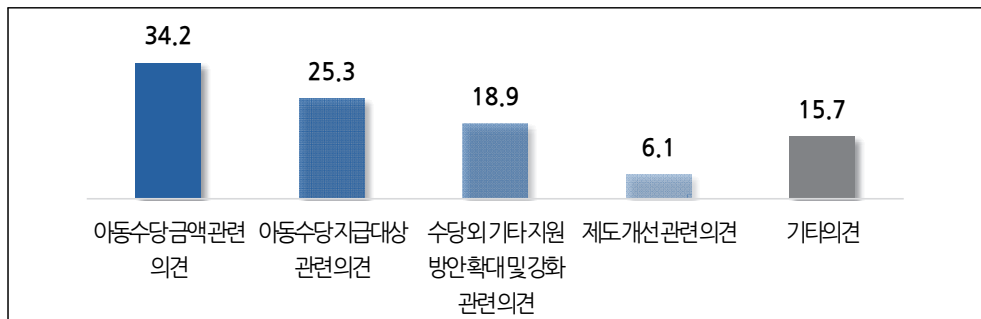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전 체		(1000)	25.2	44.2	30.6
연령대	19~29세	(170)	25.9	35.3	38.8
	30대	(151)	28.5	39.7	31.8
	40대	(184)	23.4	41.3	35.3
	50대	(196)	24.5	51.5	24.0
	60세 이상	(299)	24.7	48.5	26.8
권역	서울	(188)	25.0	44.1	30.9
	경기·인천	(318)	24.2	48.4	27.4
	대전·충청·세종	(107)	21.5	43.9	34.6
	강원	(31)	38.7	32.3	29.0
	부산·울산·경남	(150)	26.0	41.3	32.7
	대구·경북	(98)	25.5	39.8	34.7
	광주·전라	(96)	27.1	39.6	33.3
성별	제주	(12)	25.0	75.0	-
	남성	(496)	26.4	46.4	27.2
미성년 자녀	여성	(504)	24.0	42.1	33.9
	있다	(322)	25.5	40.4	34.2
미성년 자녀수	없다	(678)	25.1	46.0	28.9
	1명	(189)	25.4	45.0	29.6
아동수당 수령여부	2명	(119)	25.2	32.8	42.0
	3명	(14)	28.6	42.9	28.6
아동수당 만족도	받고 있음	(200)	25.5	41.5	33.0
	받지 않음	(800)	25.1	44.9	30.0
최종학력	만족	(795)	25.4	45.2	29.4
	불만족	(205)	24.4	40.5	35.1
직업	고졸이하	(222)	29.7	42.3	27.9
	전문대졸	(137)	27.0	46.0	27.0
	대졸	(530)	24.0	44.5	31.5
	대학원이상	(111)	19.8	44.1	36.0
직업	자영업	(86)	23.3	52.3	24.4
	화이트칼라	(447)	22.6	43.0	34.5
	블루칼라	(134)	35.1	50.0	14.9
	주부	(141)	26.2	38.3	35.5
	학생	(31)	29.0	35.5	35.5
	농림축어업	(3)	33.3	33.3	33.3
	은퇴/무직/기타	(158)	23.4	45.6	31.0

B8. 자유의견

Q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림 3-19] 자유의견

[N: 594, 단위: %]



□ 아동수당 관련 자유 의견, '금액' 관련 내용이 34.2%로 가장 많음

-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594건이 제기되었음.
- 이 중 '아동수당 금액 관련 의견'이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관련 의견' 25.3%, '수당 외 기타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의견' 18.9%, '제도 개선 관련 의견' 6.1% 등으로 제기되었음.
- 아동수당 '금액' 관련 의견으로는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기본 수급액 인상' 12.8%, '소득/가정 환경에 따른 차등 지급 또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 11.1% 등으로 조사되었음.
- '지급 대상'에 관한 의견에서는 '수혜 가능 연령대(기간) 확대 및 기준 완화' 관련 의견 9.6%, '수혜자 선정 시 적절한 기준을 통한 선별 작업 또는 범위 제한' 관련 의견이 7.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지급' 5.1%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음.
- '기타' 의견 중에서는 '단순 제도 확대/개선 요구' 응답의 비율이 6.6%를 차지하였음.

84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표 3-22〉 자유의견: ① 아동수당 금액 관련

[단위: 건, %]

No.	① 아동수당 금액 관련	빈도	비율
	소 계	203	34.2
1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기본 수금액 인상	76	12.8
2	소득/가정 환경에 따른 차등 지급 또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	66	11.1
3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금 지급 및 혜택 마련	25	4.2
4	국가재정(안정성)을 고려한 금액 지급 또는 확대	20	3.4
5	아동 나이에 따른 점진적인 지원금 상향	7	1.2
6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6	1.0
7	예산 부족 시 법인세 확대 및 부유세 도입	2	0.3
8	특정 연령대 지원 확대 요구	1	0.2

〈표 3-23〉 자유의견: ② 아동수당 지급 대상 관련

[단위: 건, %]

No.	② 아동수당 지급 대상 관련	빈도	비율
	소 계	150	25.3
1	수혜 가능 연령대(기간) 확대 및 기준 완화	57	9.6
2	수혜자 선정 시 적절한 기준을 통한 선별 작업 또는 범위 제한	42	7.1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지급	30	5.1
4	조건 없이 국내 거주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21	3.5

〈표 3-24〉 자유의견: ③ 수당 외 기타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단위: 건, %]

No.	③ 수당 외 기타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빈도	비율
	소 계	112	18.9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의 확대 및 개선 필요	20	3.4
2	돌봄 시설과 같은 양육환경 조성 및 확대	18	3.0
3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또는 기여도 확대	14	2.4
4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	12	2.0
5	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지원 필요	12	2.0
6	추가적 복지혜택 필요	8	1.3

No.	③ 수당 외 기타 지원 방안 확대 및 강화 관련	빈도	비율
7	아동 관련 지원 사업 확대	7	1.2
8	제도 관련 안내 체계 개선 및 홍보 확대	6	1.0
9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5	0.8
10	제도 신청 과정 간소화	2	0.3
11	수혜자에 대한 세금 감면	2	0.3
12	사각지대 내 아동 보호 필요	2	0.3
13	타 사업/제도와 연계 필요	2	0.3
14	타 사업/제도와 중복 수령 요구	1	0.2
15	아동 수당 외 추가 수당 지급 요구	1	0.2

〈표 3-25〉 자유의견: ④ 제도 개선 관련

[단위: 건, %]

No.	④ 제도 개선 관련	빈도	비율
	소 계	36	6.1
1	개선 사항 없음(현 제도 유지)	11	1.9
2	수혜금 사용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	10	1.7
3	바우처 활용 또는 물품 지원으로 대체	6	1.0
4	수혜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관심 필요	6	1.0
5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필요	3	0.5

〈표 3-26〉 자유의견: ⑤ 기타

[단위: 건, %]

No.	⑤ 기타	빈도	비율
	소 계	93	15.7
1	기타: 단순 제도 확대/개선 요구	39	6.6
2	기타: 단순 만족/필요성 피력	22	3.7
3	기타: 국가적 정책 및 지원 요구	17	2.9
4	아동수당제도 반대 또는 제도에 대한 우려	15	2.5



제4장

조사결과: 전문가

-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B. 아동수당 개선방안

제4장 조사결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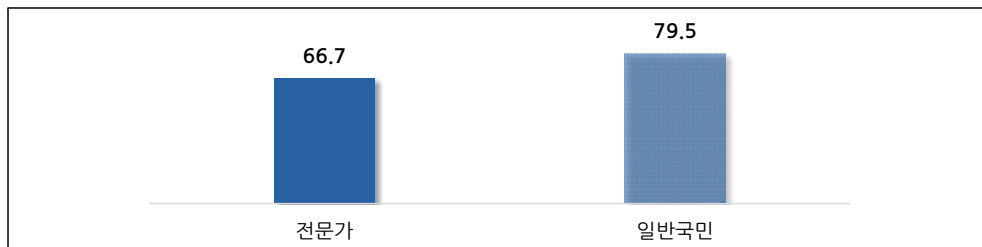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A1. 아동수당 만족도

Q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	--

[그림 4-1] 아동수당 만족도

[N: 24, 단위: %]



□ 아동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66.7%

- 이번조사에 응한 관련 전문가 24명 중 16명(66.7%)이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응답자 수가 24명으로 일반화는 어렵지만,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만족, 79.5%)에 비해 낮은비율을 보임.

<표 4-1> 아동수당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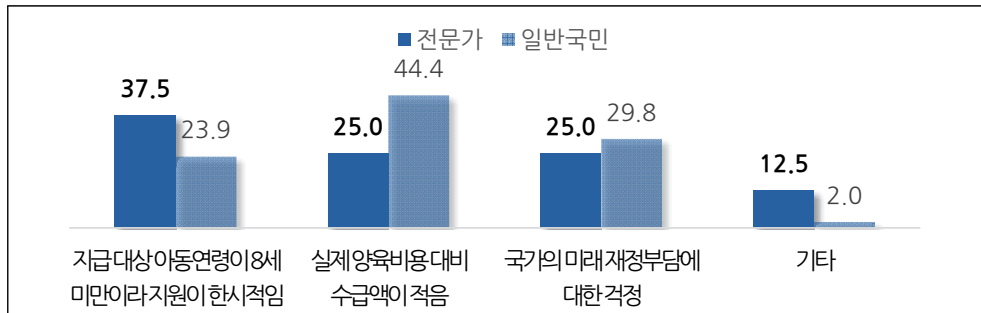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매우 만족한다	2	8.3	175	17.5
만족하는 편이다	14	58.3	620	62.0
불만족하는 편이다	8	33.3	167	16.7
매우 불만족한다	-	-	38	3.8
만족	16	66.7	795	79.5
불만족	8	33.3	205	20.5
합계	24	100.0	1000	100.0

A1-1.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Q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그림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N: 205, 단위: %]



□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 37.5%

- 아동수당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한 전문가 8명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3명(37.5%)은 '지급대상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이라 답했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혹은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 답한 전문가가 각 2명(25.0%)이었음.
- '기타' 의견 1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해외 거주 아동의 일시입국에도 출국일 90일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아동수당 취지에 맞지 않음”

〈표 4-2〉 아동수당 불만족 이유

[단위: %]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3	37.5	49	23.9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2	25.0	91	44.4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2	25.0	61	29.8
기타	1	12.5	4	2.0
합계	8	100	2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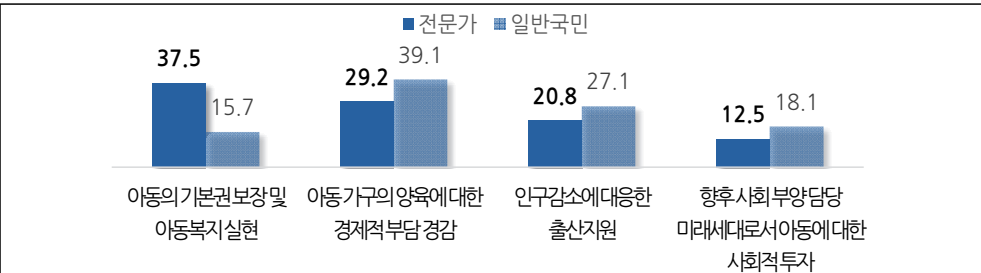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아동수당 주요역할

Q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N: 24, 단위: %]



□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37.5%

-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이 9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이 7명(29.2%),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5명(20.8%),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3명(12.5%)임.
- 일반국민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의 비율(15.7%)이 가장 낮았던 점과 대비.

〈표 4-3〉 아동수당 주요역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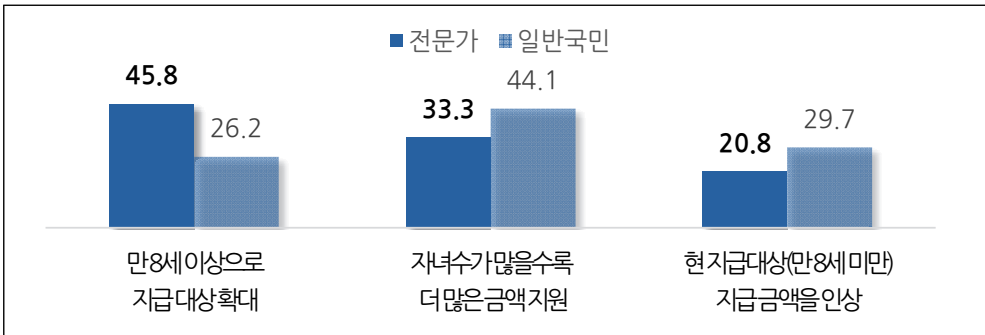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9	37.5	157	15.7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7	29.2	391	39.1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5	20.8	271	27.1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3	12.5	181	18.1
합계	24	100	1000	100.0

B2. 아동수당 확대방식

Q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	---

[그림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N: 24, 단위: %]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 45.8%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라 답한 전문가가 11명(45.8%)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지원’은 8명(33.3%), ‘현 지급대상(만 8세 미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5명(20.8%)임.

○ 일반국민은 ‘만 8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 확대’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26.2%)이 가장 낮았던 점과 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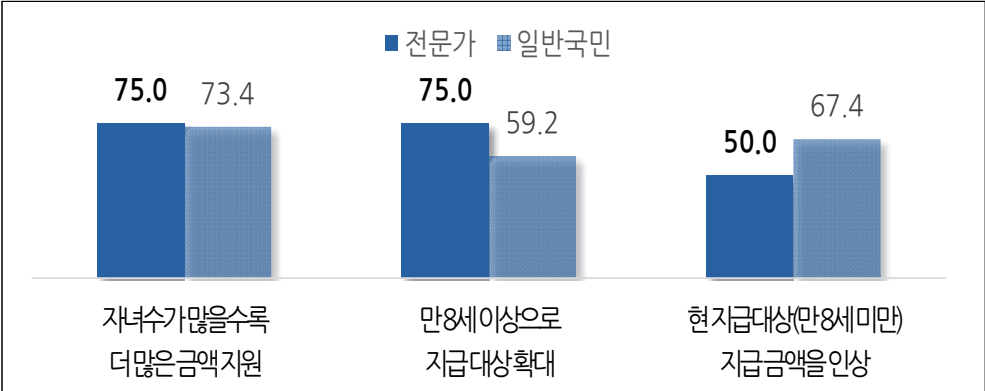
<표 4-4> 아동수당 확대방식(1순위)

[단위: %]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11	45.8	262	26.2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8	33.3	441	44.1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5	20.8	297	29.7
합계	24	100	1000	100.0

[그림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N: 24, 단위: %]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합계),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각 75.0%

- 바람직한 아동수당 확대방식에 대한 1+2순위 응답의 합계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라 답한 응답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응답의 합계가 각 18건(75.0%)로 가장 많았음.
-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라는 응답은 12건(50.0%)임.

〈표 4-5〉 아동수당 확대방식(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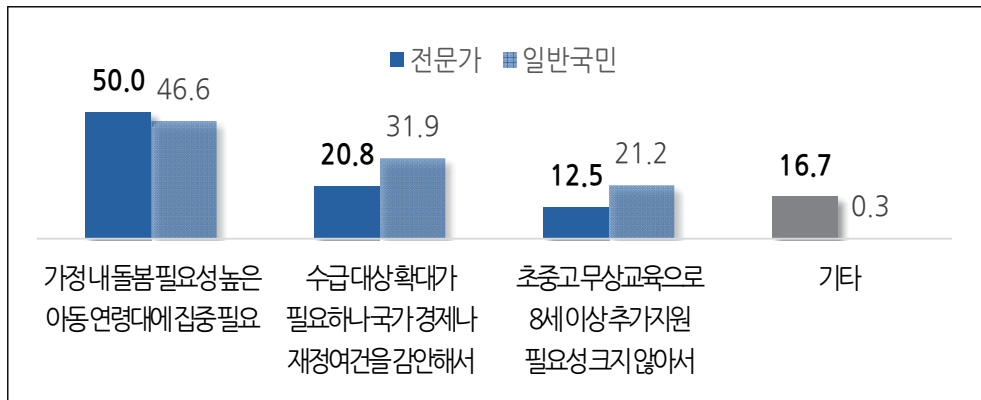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18	75.0	592	59.2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18	75.0	734	73.4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12	50.0	674	67.4
합계	48	200	2000	200.0

B3.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Q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N: 24, 단위: %]



□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이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50%

○ 아동수당이 ‘현재 지급 대상인 만8세 미만에 대한 지급 금액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가 12명(50.0%)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명(20.8%), ‘초중고 무상교육 시행으로 8세 이상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가 3명(12.5%)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라고 답한 응답자는 4명이었으며, 3명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음.

“만8세 미만에서 확대한다면 2세 이상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부모급여 도입 등 0~1세에게는 향후 현금성 지원이 증가할 예정이나, 실제 양육비 부담은 영아 보다 유아기에 더 높아지므로, 양육비 부담이 큰 연령을 고려해야 함”

“연(월)령이 낮을수록 기본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 및 조성을 위한 지원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함.”
“10만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

○ 일반국민 조사에서도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
가 있어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함.

〈표 4-6〉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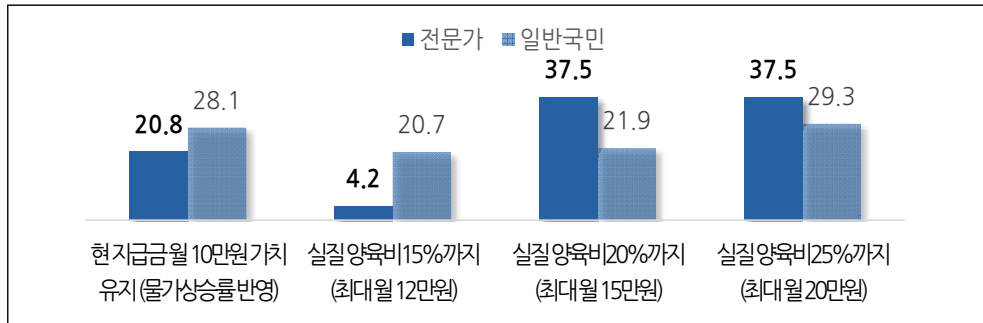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12	50.0	466	46.6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	20.8	319	31.9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3	12.5	212	21.2
기타	4	16.7	3	0.3
합계	24	100	1000	100.0

B3-1.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Q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

[그림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N: 24, 단위: %]



□ 현재 지급 금액(10만원) 인상 시, ‘실질 양육비의 25%(최대 월 20만원)까지 인상’과, ‘실질 양육비의 20%(최대 월 15만원)까지 인상’ 각 37.5%

- 현재 10만원인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실질 양육비의 25%까지(최대 월 20만원)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과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가 각 9명(37.5%)으로 가장 많았음.
-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은 5명(20.8%)이었으며,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는 1명(4.2%)에 그쳤음.

〈표 4-7〉 만8세미만 지급액 인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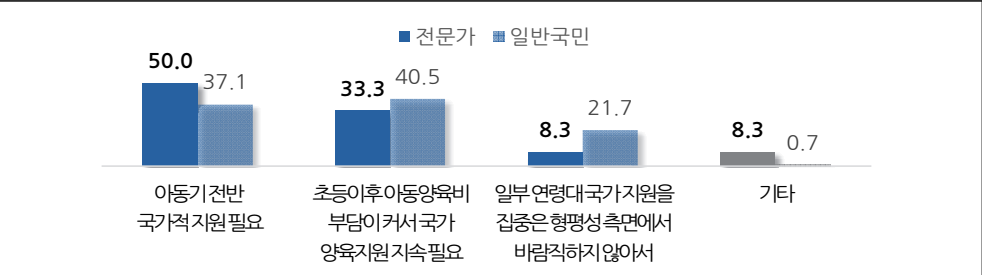
[단위: %]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	5	20.8	281	28.1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1	4.2	207	20.7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9	37.5	219	21.9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	9	37.5	293	29.3
합계	24	100	1000	100.0

B4.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Q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N: 24, 단위: %]



□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이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50.0%,

○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라 답한 전문가가 1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는 8명(33.3%)임.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전문가는 2명(8.3%)임.

○ ‘기타’ 의견은 2건(8.3%)이었으며,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단순 피력함.

〈표 4-8〉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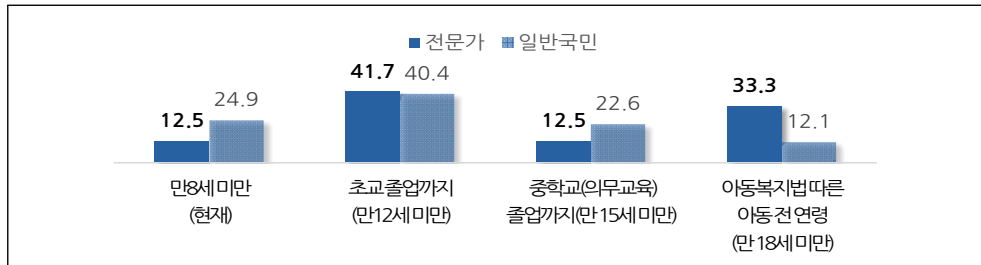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12	50.0	371	37.1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8	33.3	405	40.5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2	8.3	217	21.7
기타	2	8.3	7	0.7
합계	24	100	1000	100.0

B4-1.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Q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N: 24, 단위: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 ‘초등학교 졸업 때(만12세 미만)’까지 확대해야 41.7%

○ 지급 연령 확대 시 대상 연령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이라 답한 전문가가 10명(41.7%)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8명(33.3%),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와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가 각 3명(12.5%)에 그쳤음.

○ 일반국민 조사에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유사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12.1%로 가장 낮았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음.

〈표 4-9〉 만8세이상 지급연령 확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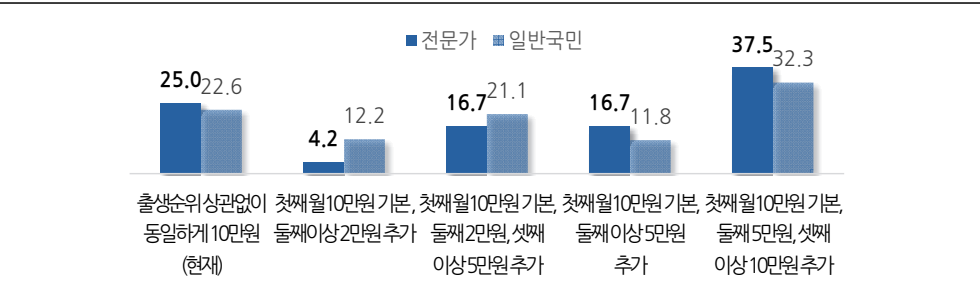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3	12.5	249	24.9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10	41.7	404	40.4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3	12.5	226	22.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8	33.3	121	12.1
합계	24	100	1000	100.0

B5.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Q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N: 24, 단위: %]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37.5%

○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월 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지급’이 9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처럼 출생순위 무관 동일한 10만원 지급’ 6명(25.0%),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과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4명(16.7%),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2만원 추가 지급’은 1명(4.2%)에 그쳤음.

<표 4-10>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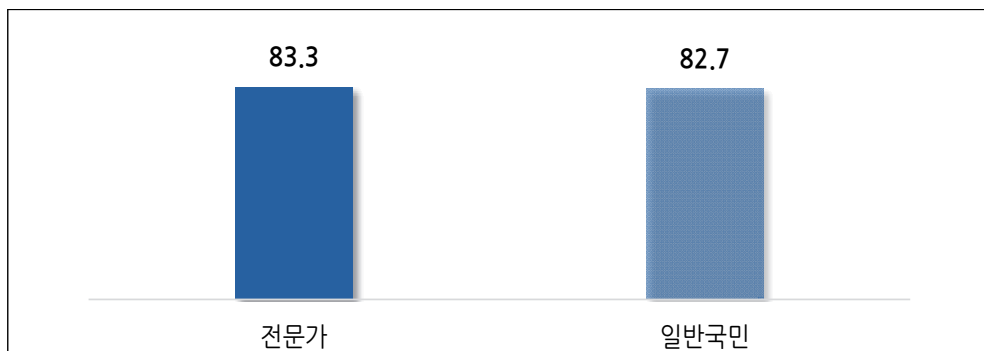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	6	25.0	226	22.6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1	4.2	122	12.2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4	16.7	211	21.1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이상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4	16.7	118	11.8
첫째 월10만원 기본,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9	37.5	323	32.3
합계	24	100	1000	100.0

B5-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Q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N: 24, 단위: %]



□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83.3%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지원이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답한 전문가는 20명(83.3%)이었고, 나머지 4명(16.7%)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함.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표 4-1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효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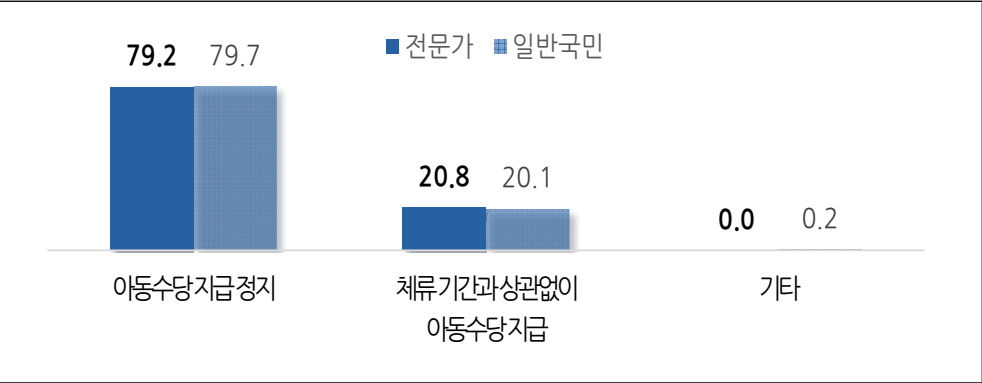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매우 도움 됨	2	8.3	194	19.4
약간 도움 됨	18	75.0	633	63.3
별로 도움되지 않음	4	16.7	141	14.1
전혀 도움되지 않음	-	-	32	3.2
도움 된다	20	83.3	827	82.7
도움 안된다	4	16.7	173	17.3
합계	24	100.0	1000	100.0

B6.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Q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N: 24, 단위: %]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79.2%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중 19명(79.2%)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였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5명(20.8%)에 그쳤음.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표 4-12〉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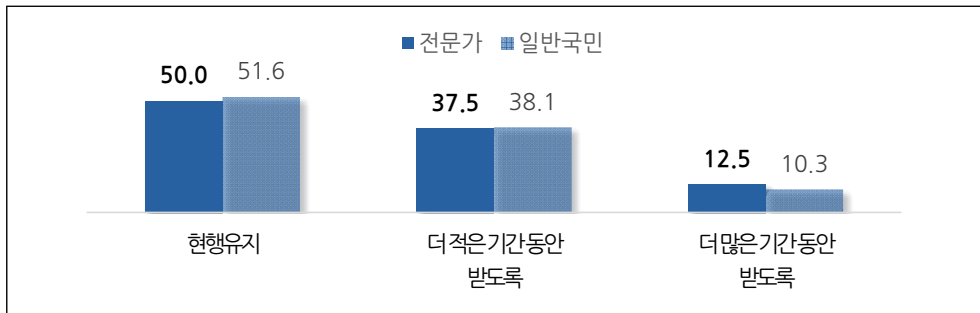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19	79.2	797	79.7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20.8	201	20.1
기타	-	-	2	0.2
합계	24	100	2	0.2

B6-1.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Q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N: 24, 단위: %]



□ 해외체류아동 아동수당 지급정지 기간,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 50.0%

- 해외 체류 시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라고 답한 전문가가 12명(50.0%)으로 절반이었으며, 다음으로 '과도한 지급이므로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9명(37.5%),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하자는 전문가는 3명(12.5%)임.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임.

〈표 4-13〉 해외체류아동 지급정지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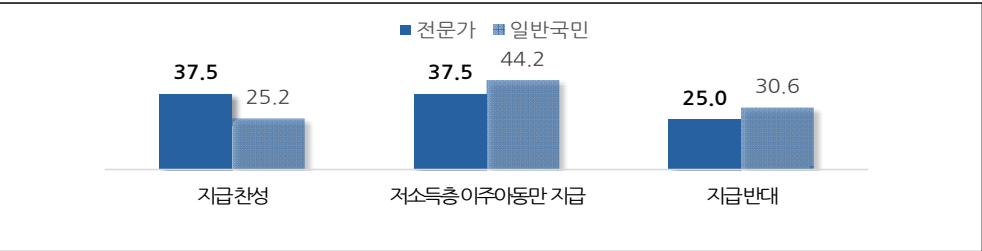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12	50.0	516	51.6
장기 해외체류 아동 지급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체류기간을 줄여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9	37.5	381	38.1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3	12.5	103	10.3
합계	24	100	1000	100.0

B7.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Q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N: 24, 단위: %]



□ 이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체류 아동 지급 찬성' 및 '저소득층 이주 아동에게는 지급' 37.5%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전문가와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전문가가 각 9명(37.5%)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명(25.0%)임.
- 지급에 반대하지 않는 비율(지급 찬성 및 저소득층 이주아동만 지급, 75.0%)은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69.4%)와 크게 다르지 않음.

<표 4-14>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단위: %]

보기	전문가		일반국민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9	37.5	252	25.2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9	37.5	442	44.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6	25.0	306	30.6
합계	24	100	1000	100.0

B8. 자유의견

Q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아동수당 관련 전문가 의견 23건 개진

- 아동수당에 확대 및 제도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조사에 참여한 24명의 전문가 중 23명이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Ⅳ-15]와 같음.

〈표 4-15〉 이주아동 아동수당지급

No	내 용
1	아동수당의 목적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저출산정책과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저출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영아수당이나 부모급여,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강화 등 다른 정책 분석을 통해 검토할 문제이지, 아동수당과 연결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기존의 영아수당 등이 아동수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 정체성과 정책목표 등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아동수당은 그 의미에 맞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
2	최소 중학교까지는 대상 연령대 확대 필요함.
3	수당 지급의 방향, 효율, 효과를 고려한 지원 방식 재편이 우선 고려되면 좋을 것.
4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대상 연령의 확대가 필요함. 현재 생애 초기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사업을 통해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후기아동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음. 물론, 무상교육을 통한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아동수당은 보편급여로서 권리적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무상교육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함.
5	아동수당이 부모의 양육비 경감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데, 이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동이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사용 목적 또한 아동 중심으로 인식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6	지급대상과 금액의 단계적 확대 필요함.
7	부모급여, 첫탄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이 확대 되는 상황임. 신규제도의 도입이나 개선 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임.
8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를 먼저 파악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음. 확대의 이유가 필요함.
9	해외체류 90일 이상에 대해 중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외국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가친척을 만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도 아동수당을 약 4개월 정도 지급하는 현 제도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해외 출국 시 아동수당을 익월부터 중지시키고, 재입국 시 익월부터 지급하도록 한다면, 단순히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다녀오는 아동들은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아동에겐 지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아동수당 도입 때부터 물가상승률은 점점 올라가는 반면 수당 금액은 여전히 제자리임. 금액 인상과 더불어 다자녀(2자녀부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No	내 용
10	국내 체류 다문화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만, 부모나 가구 소득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11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음. 더하여 출산장려의 목적도 있음. 곧 부모급여 도입으로 0~1세 영아에게 집중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출산을 전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현금 또는 바우처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나, 실제 양육비 부담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영유아에 집중한 현금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해 주면 좋겠음. 또한, 실제로 자녀 수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지급을 반드시 도입해 주길 바람.
12	다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1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최소화해 필요.
14	아동수당을 확대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남들과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15	출생을 제고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금액이나 지급 연령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6	점진적으로라도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저출산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생순위별 차등 지급이 반드시 필요함.
17	수당 지급으로 인한 민간 공급 서비스(사교육비 등 양육 관련 서비스)의 가격 상승 여부 검토 필요.
18	아동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아동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외 출국의 90일 이상 되어야 정지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19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급되는지 부모 대상 교육과 안내가 요구됨. 부모들을 만나보면, 이러한 돈을 국가에서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까지만) 왜 이렇게/이만큼을 주는지,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쓴다는 얘기들을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정보 제공,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보임. 즉,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든, 8세미만 아동 지급액을 늘리든, 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명분과 가치에 대한 공유가 메시지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음(비경제적 효과/사회적 가치 공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 서비스 이용 간 관계에 대한 정책 설계와 부모 안내 또한 필요함.
20	현금지원의 효과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 필요.
21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정책은 서비스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2	아동수당의 금액적인 부분에서 인상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며, 연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해 보임.
23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정지. 해외 체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봄.



[부록 1] 조사표: 아동수당 만족도 및 정책인식 조사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일반국민)」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 응답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 주 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 행 : 리얼미터

SQ.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recode 

- ① 만 18세 이하  조사대상 아님
② 19~29세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만 70세 이상  조사대상 아님

S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광역시/도는 다음 중 어느 곳 이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께서는 남성이십니까? 여성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 '아동수당'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초 이상 노출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대하여, 가구원 수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지급 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예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A1. 귀하께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임신 중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_____ 명)  A1-1. 문항으로
- ② 없다  A3. 문항으로

A1-1. 각 자녀는 만으로 몇 살이고, 재학 중인 학교는 어디입니까?

구분	만	연령	구분
<input type="checkbox"/> 첫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다섯째 이상	만	세	① 취학 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고등학생 이상





A2. 귀하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십니까?

- ① 받고 있다  **A2-1. 문항으로**
- ② 받고 있지 않다  **A3 문항으로**

A2-1. 귀 가정에서는 지금 받으신 아동수당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혹은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1~6 로테이션)

- ①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
- ② 자녀 물품 구입(기저귀, 유모차, 젖병, 이불, 의류, 신발, 장난감, 도서 등)
- ③ 자녀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 ④ 돌봄·교육비(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등 정규 과정 교육비, 학원·학습지 등 사교육비, 방과후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비용 등)
- ⑤ 금융상품(자녀 이름으로 된 저축·보험 등)
- ⑥ 기타(자세히 : _____)

A3.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보기 1~6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만족한다  **B1. 문항으로**
- ② 만족하는 편이다  **B1. 문항으로**
- ③ 불만족하는 편이다  **A3-1. 문항으로**
- ④ 매우 불만족한다  **A3-1. 문항으로**

A3-1.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 ②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 ③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 ②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 ③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 ④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B2.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확대 방안제시 순서 로테이션)

확대방안	금액 인상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즉, 첫째보다는 둘째에, 둘째보다는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선호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B3.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 ②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 ③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3-1.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참고] 2019년 자녀 양육비용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78만원 입니다

- ①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
- ②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 ③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 ④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

B4.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 ②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 ③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4-1.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 ②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 ③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B5.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생 순위의 상관없이 8세 미만 아동당 10만원 지급)
다음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예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①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②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2만원
③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5만원
④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⑤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B5-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순·역순 배치)

- ① 매우 도움이 됨
- ② 약간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다음은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해외체류 및 이주아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6.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 ③ 기타 (자세히 : _____)

B6-1.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 ②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 ③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줄여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B7.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②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B8.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아동수당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Q. 배경문항

DQ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학교(2~3년제) 졸업
-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DQ1.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현재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 ② 판매/영업/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③ 기능/숙련직 (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④ 생산/노무직 (제조업 생산직, 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⑤ 사무직 (차장 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이하 공무원)
- ⑥ 경영/관리직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급 이상)
- ⑦ 전문/자유직 (변호사, 의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⑧ 학생
- ⑨ 가정주부 (가사와 육아만 하는 전업주부)
- ⑩ 농업/임업/축산업/어업
- ⑪ 은퇴자 (연금생활자 등)
- ⑫ 무직
- ⑬ 기타
- ⑭ 응답거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전문가)」

ID □□□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본 설문 의 응답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 주 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 행 : 리얼미터

SQ.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recode 

① 만 18세 이하  조사대상 아님

② 19~29세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만 70세 이상  조사대상 아님

S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광역시/도는 다음 중 어느 곳 이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귀하께서는 남성이십니까? 여성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 아동수당 대상여부 및 만족도

※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 '아동수당'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초 이상 노출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 대하여, 가구원 수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지급 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예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A1. 귀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보기 1~6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만족한다  B1. 문항으로
- ② 만족하는 편이다  B1. 문항으로

- ③ 불만족하는 편이다  A3-1. 문항으로
- ④ 매우 불만족한다  A3-1. 문항으로

A1-1. 귀하께서 현행 아동수당 제도에 ‘불만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실제 양육비용 대비 수급액이 적음
- ② 지급 대상 아동연령이 8세 미만이라 지원이 한시적임
- ③ 국가의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 아동수당 개선방안

B1. 귀하는 다음 중 아동수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복지 실현
- ② 아동 가구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가계소득 보전)
- ③ 향후 사회구성원 부양을 담당하는 미래세대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 ④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지원

B2.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확대 방안제시 순서 로테이션)

확대방안	금액 인상	지급 연령 확대	아동수당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즉, 첫째보다는 둘째에, 둘째보다는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선호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_____ 순위

B3. 만약, 아동수당제도를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가정 내 돌봄 필요성이 높은 아동 연령대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서
- ② 수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 경제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 ③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8세 이상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3-1. ‘현재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에게 지급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얼마나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참고] 2019년 자녀 양육비용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약 78만원 입니다

- ① 현재 지급금액인 월 10만원의 가치 유지(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
- ② 실질 양육비용의 15%까지 보조(최대 월 12만원)
- ③ 실질 양육비용의 20%까지 보조(최대 월 15만원)
- ④ 실질 양육비용의 25%까지 보조(최대 월 20만원)

B4. 아동수당제도를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한다면 다음 중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아동기 전반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 ②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 국가의 양육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서
- ③ 일부 연령대로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 ④ 기타 (자세히 : _____)

B4-1. '만 8세 이상 아동으로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면, 몇 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유지
- ②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만12세 미만)
- ③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15세 미만)
- ④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 연령(만 18세 미만)

B5.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있어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에게 '얼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출생 순위의 상관없이 8세 미만 아동당 10만원 지급) 다음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예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① 현재처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원 지급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②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2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2만원
③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2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5만원
④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이상부터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⑤ 첫째 월 10만원을 기본으로, 둘째 매월 5만원, 셋째 이상부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0만원

B5-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순·역순 배치)

- ① 매우 도움이 됨
- ② 약간 도움이 됨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다음은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해외체류 및 이주아동'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B6. 현재 해외 체류기간(해외출생, 복수국적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입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②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 ③ 기타 (자세히 : _____)

B6-1.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과 같이 90일 이상일 때 지급 정지(현행 유지)
- ②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더 많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 ③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므로 급여정지기준이 되는 해외체류기간을 줄여 아동수당을 90일보다 더 적은 기간 동안 받도록 한다.

B7. 현재 우리나라는 난민인정 및 특별기여자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만 8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국적에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이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② 저소득계층의 이주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
- ③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

B8. 아동수당 확대 및 제도개선 관련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아동수당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부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조사개요

제 5 장 조사개요

1.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수당 담당 공무원

□ 표본 크기

- 60명

□ 조사 방법

- 전문가 리스트를 이용한 웹조사(CAWI)
 - CAWI :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조사 기간

- 2022. 11. 18 ~ 2022. 12. 04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조사결과

제 6 장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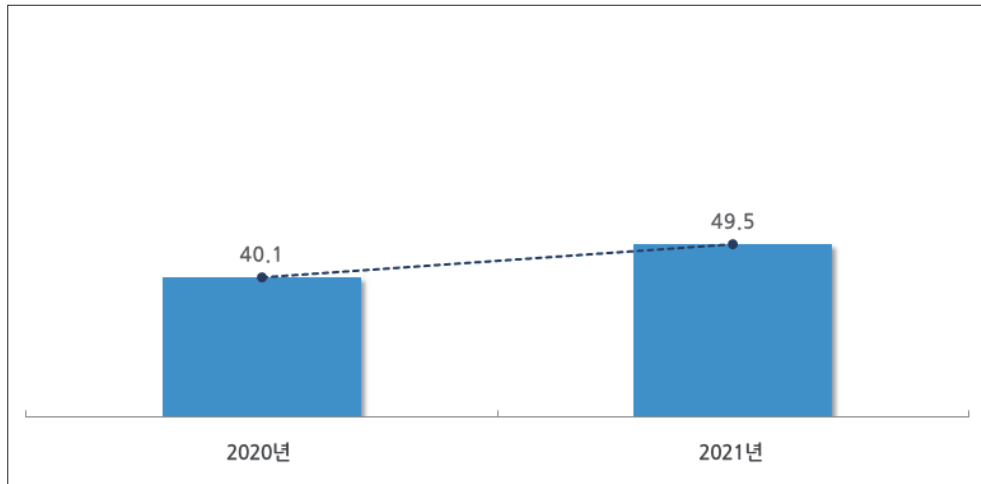
1. 응답자 분포표

〈표 6-1〉 2020 환수결정건수

단위 : %		
	사례수 (명)	%
▣ 전체 ▣	(60)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10
부산광역시	(6)	10
대구광역시	(1)	1.7
인천광역시	(3)	5
대전광역시	(1)	1.7
울산광역시	(1)	1.7
경기도	(11)	18.3
강원도	(3)	5
충청북도	(2)	3.3
충청남도	(4)	6.7
전라북도	(3)	5
전라남도	(6)	10
경상북도	(6)	10
경상남도	(5)	8.3
제주특별자치도	(2)	3.3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0
지방자치단체	(54)	90

2.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율

[그림 6-1]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율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0년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결정 및 환수 사례를 물어본 결과, 평균 환수율은 40.1%로 나타남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1년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대한 과오지급 환수결정 및 환수 사례를 물어본 결과, 평균 환수율은 49.5%로 나타남

[Q2] 2020 화수결정거수

〈표 6-2〉 2020 환수결정건수

	사례수 (명)	0	1	2	3	4	5	7	8	9	10	11	13	20	30	63	계	평균	chi-sq	Sig.
전체	(60)	53.3	6.7	13.3	1.7	6.7	1.7	3.3	1.7	1.7	1.7	1.7	1.7	1.7	1.7	1.7	100	3.7		
지역																				
서울특별시	(6)	16.7	0	33.3	0	16.7	0	0	16.7	0	0	0	0	0	0	16.7	100	13.17		
부산광역시	(6)	33.3	0	16.7	16.7	0	16.7	16.7	0	0	0	0	0	0	0	0	100	2.83		
대구광역시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인천광역시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대전광역시	(1)	0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2		
울산광역시	(1)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1		
경기도	(11)	54.5	9.1	9.1	0	0	0	9.1	0	9.1	0	9.1	0	0	0	0	100	2.73		
강원도	(3)	33.3	0	0	0	33.3	0	0	0	0	0	0	0	33.3	0	0	100	8	152.224	0.991
충청북도	(2)	50	0	5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1		
충청남도	(4)	75	0	0	0	25	0	0	0	0	0	0	0	0	0	0	100	1		
전라북도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전라남도	(6)	33.3	0	33.3	0	0	0	0	0	0	16.7	0	16.7	0	0	0	100	4.5		
경상북도	(6)	66.7	0	0	0	16.7	0	0	0	0	0	0	0	0	16.7	0	100	5.67		
경상남도	(5)	80	2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2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5		
자치단체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16.7	16.7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5	3.056	0.999
지방자치단체	(54)	51.9	56.1	13.3	1.9	7.4	1.9	3.7	1.9	1.9	1.9	1.9	1.9	1.9	1.9	1.9	100	4.06		

[Q2] 2020 환수건수

〈표 6-3〉 2020 환수건수

지역	시례수(명)	0	1	2	3	4	5	7	8	10	11	12	21	63	평균	chi-sq	단위 : %	
전체	(60)	55	8.3	11.7	3.3	5	16.7	1.7	1.7	3.3	1.7	1.7	1.7	1.7	3.15			
지역																		
서울특별시	(6)	16.7	0	33.3	0	16.7	0	0	16.7	0	0	0	0	16.7	13.17			
부산광역시	(6)	33.3	16.7	16.7	16.7	0	16.7	0	0	0	0	0	0	0	1.83			
대구광역시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1)	0	0	100	0	0	0	0	0	0	0	0	0	0	2			
울산광역시	(1)	0	100	0	0	0	0	0	0	0	0	0	0	0	1			
경기도	(11)	54.5	18.2	0	0	0	9.1	9.1	0	0	9.1	0	0	0	2.27	126.428	0.993	
강원도	(3)	33.3	0	0	0	33.3	0	0	0	33.3	0	0	0	0	4.67			
충청북도	(2)	50	0	50	0	0	0	0	0	0	0	0	0	0	1			
충청남도	(4)	75	0	0	0	25	0	0	0	0	0	0	0	0	1			
전라북도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6)	33.3	0	33.3	0	0	0	0	0	16.7	0	16.7	0	0	4.33			
경상북도	(6)	66.7	0	0	16.7	0	0	0	0	0	0	0	16.7	0	4			
경상남도	(5)	80	20	0	0	0	0	0	0	0	0	0	0	0	0.2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치단체구분																		
광역자치단체	(6)	83.3	0	16.7	0	0	0	0	0	0	0	0	0	0	0.33	3.338	0.993	
지방자치단체	(54)	51.9	9.3	11.1	3.7	5.6	1.9	1.9	1.9	3.7	1.9	1.9	1.9	1.9	3.46			

[Q2] 2020 환수율

〈표 6-4〉 2020 환수율

		0	14	50	55	70	75	92	100	계	평균	chi-sq	단위 : %	
지역	사례수(명)	55	1.7	3.3	1.7	1.7	1.7	1.7	33.3	100	40.1			Sig.
전체	(60)													
서울특별시	(6)	16.7	0	0	0	0	0	0	83.3	100	83.33			
부산광역시	(6)	33.3	16.7	0	0	0	0	0	50	100	52.33			
대구광역시	(1)	100	0	0	0	0	0	0	0	100	0			
인천광역시	(3)	100	0	0	0	0	0	0	0	100	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0	100	100	10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100	100	100			
경기도	(11)	54.5	0	9.1	9.1	0	0	0	27.3	100	36.82			
강원도	(3)	33.3	0	33.3	0	0	0	0	33.3	100	50	73.300		0.971
충청북도	(2)	50	0	0	0	0	0	0	50	100	50			
충청남도	(4)	75	0	0	0	0	0	0	25	100	25			
전라북도	(3)	100	0	0	0	0	0	0	0	100	0			
전라남도	(6)	33.3	0	0	0	0	0	16.7	50	100	65.33			
경상북도	(6)	66.7	0	0	0	16.7	16.7	0	0	100	24.17			
경상남도	(5)	80	0	0	0	0	0	0	20	100	2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0	0	0	0	0	0	100	0			
자치단체구분														
광역자치단체	(6)	83.3	0	0	0	0	0	0	16.7	100	16.67	2.306		0.941
지방자치단체	(54)	51.9	1.9	3.7	1.9	1.9	1.9	1.9	35.2	100	42.7			

[Q2] 2021 환수결정건수

〈표 6-5〉 2021 환수결정건수

		사례수(명)		단위 : %											
전체		0	1	2	3	4	5	6	9	10	11	12	14	17	
(60)		28.3	13.3	10	1.7	1.7	1.7	5	3.3	1.7	3.3	1.7	1.7	1.7	
지역	서울특별시	0	0	0	0	0	0	16.7	16.7	0	0	0	0	0	
	부산광역시	33.3	0	16.7	0	0	0	16.7	16.7	16.7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0	0	100	0	0	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100	0	0	0	
	경기도	18.2	27.3	18.2	0	0	0	0	0	0	0	0	0	0	
	강원도	33.3	0	0	0	0	0	0	0	0	33.3	0	0	0	
	충청북도	5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	0	0	0	0	25	0	0	0	0	0	0	25	0	
	전라북도	33.3	33.3	33.3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33.3	33.3	0	0	0	16.7	0	0	0	0	0	0	0	
	경상북도	50	0	16.7	0	0	0	0	16.7	0	0	0	0	0	
	경상남도	40	40	0	0	0	0	0	0	0	0	0	0	2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50	0	0	0	0	0	0	0	5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50	0	16.7	16.7	0	0	0	0	0	0	16.7	0	0	
지방자치단체		25.9	14.8	9.3	0	1.9	1.9	5.6	3.7	1.9	3.7	0	1.9	1.9	

[계속]

단위 : %		20	23	28	29	31	32	44	50	54	60	63	계	평균	chi-sq	Sig.
전체		3.3	3.3	1.7	1.7	1.7	1.7	3.3	1.7	1.7	1.7	3.3	100	12.12		
지역	서울특별시	0	16.7	16.7	0	0	0	16.7	0	0	0	16.7	100	28.83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4.5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100	100	63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2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11		
	경기도	9.1	0	0	9.1	0	0	9.1	0	9.1	0	0	100	14		
	강원도	33.3	0	0	0	0	0	0	0	0	0	0	100	10.33	337.116	0.270
	충청북도	0	50	0	0	0	0	0	0	0	0	0	100	11.5		
	충청남도	0	0	0	0	0	25	0	0	0	25	0	100	27.5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1		
	전라남도	0	0	0	0	16.7	0	0	0	0	0	0	100	6.33		
	경상북도	0	0	0	0	0	0	0	16.7	0	0	0	100	9.67		
	경상남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3.8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7.5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0	0	0	0	0	0	0	0	0	0	0	100	2.83		
지방자치단체		3.7	3.7	1.9	1.9	1.9	1.9	3.7	1.9	1.9	1.9	3.7	100	13.15		

[Q2] 2021 환수건수

〈표 6-6〉 2021 환수건수

□ 전체 □	8	9	10	11	12	13	17	24	25	26
	1.7	5	6.7	1.7	1.7	1.7	1.7	1.7	1.7	1.7
단위 : %										
지역										
서울특별시	16.7	0	0	0	0	0	16.7	0	0	16.7
부산광역시	0	16.7	0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100	0	0	0	0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0	0	100	0	0	0	0	0	0	0
경기도	0	9.1	0	0	0	0	0	0	9.1	0
강원도	0	0	33.3	33.3	0	0	0	0	0	0
충청북도	0	0	0	0	50	0	0	0	0	0
충청남도	0	0	50	0	0	0	0	0	0	0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0	0	0	0	0	0	0	16.7	0	0
경상남도	0	20	0	0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0	0	0	0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	1.9	5.6	7.4	1.9	1.9	1.9	1.9	1.9	1.9	1.9

[계속]

단위 : %

전체	30	34	37	44	63	계	평균	chi-sq	Sig.
지역	1.7	1.7	1.7	1.7	1.7	100	7.55		
서울특별시	0	0	0	16.7	16.7	100	27.17		
부산광역시	0	0	0	0	0	100	2.5		
대구광역시	0	0	0	0	0	100	13		
인천광역시	0	0	0	0	0	10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100	1		
울산광역시	0	0	0	0	0	100	10		
경기도	0	0	9.1	0	0	100	7.27	303.382	0.161
강원도	0	0	0	0	0	100	7		
충청북도	0	0	0	0	0	100	6		
충청남도	0	25	0	0	0	100	14.25		
전라북도	0	0	0	0	0	100	1		
전라남도	16.7	0	0	0	0	100	5.67		
경상북도	0	0	0	0	0	100	4.67		
경상남도	0	0	0	0	0	100	2.2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100	2.5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0	0	0	0	0	100	1	7.170	0.996
지방자치단체	1.9	1.9	1.9	1.9	1.9	100	8.28		

[Q2] 2021 환수율

〈표 6-7〉 2021 환수율

지역	시례수(명)	0	6	16	20	25	31	33	40	45	48	50	52	56
		30	1.7	1.7	1.7	1.7	1.7	1.7	3.3	1.7	1.7	5	3.3	3.3
서울특별시	(6)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6)	33.3	0	16.7	0	0	0	0	16.7	0	0	16.7	0	0
대구광역시	(1)	0	0	0	10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100	0	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11)	18.2	9.1	0	0	0	0	0	0	9.1	0	0	0	9.1
강원도	(3)	33.3	0	0	0	0	0	0	0	0	0	33.3	0	0
충청북도	(2)	50	0	0	0	0	0	0	0	0	0	0	50	0
충청남도	(4)	0	0	0	0	0	25	0	0	0	0	0	0	25
전라북도	(3)	66.7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6)	33.3	0	0	0	0	0	0	16.7	0	0	0	0	0
경상북도	(6)	50	0	0	0	0	0	16.7	0	0	16.7	0	0	0
경상남도	(5)	40	0	0	0	0	0	0	0	0	0	0	20	0
제주특별자치도	(2)	0	0	0	0	50	0	0	0	0	0	0	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50	0	0	0	16.7	0	0	0	0	0	16.7	0	0
지방자치단체	(54)	27.8	1.9	1.9	1.9	0	1.9	1.9	3.7	1.9	1.9	3.7	3.7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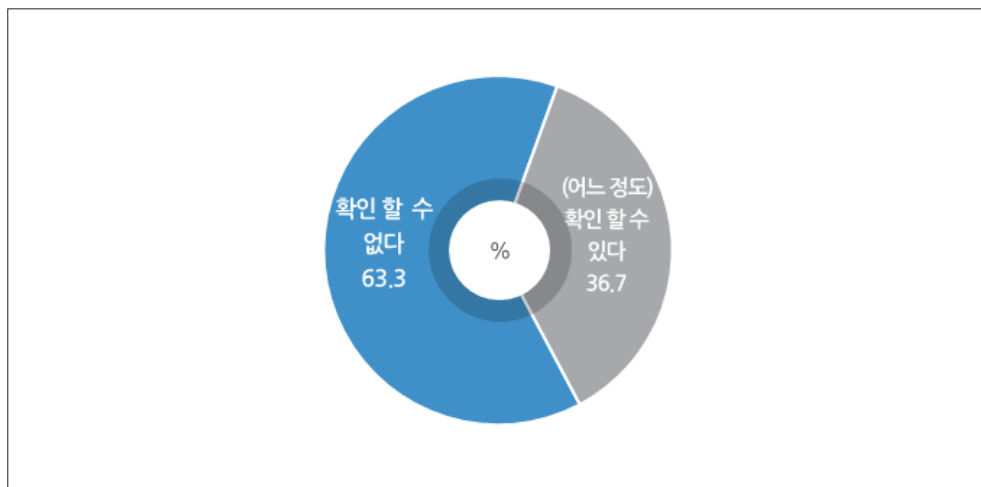
[계속]

		66	68	71	73	75	83	88	90	92	96	100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25	100	49.53		
지역	서울특별시	0	0	0	16.7	0	16.7	16.7	0	16.7	0	33.3	100	89.33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16.7	100	34.33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20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5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100	0	0	0	100	90		
	경기도	0	9.1	0	0	0	0	0	0	0	0	45.5	100	61.36	384.761	0.009
	강원도	0	0	0	0	0	0	0	0	0	0	33.3	100	50		
	충청북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26		
	충청남도	0	0	25	0	25	0	0	0	0	0	0	100	58.25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33.3	100	33.33		
	전라남도	0	0	0	0	0	0	0	0	0	16.7	33.3	100	56		
	경상북도	0	0	0	0	0	0	0	0	0	0	16.7	100	30.17		
	경상남도	0	0	0	0	0	0	0	0	0	0	40	100	50.4		
	제주특별자치도	50	0	0	0	0	0	0	0	0	0	0	100	45.5		
자치단체 구분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6.7	0	0	0	0	0	0	0	0	0	0	100	23.5		
	지방자치단체	0	1.9	1.9	1.9	1.9	1.9	1.9	1.9	1.9	1.9	27.8	100	52.43		

단위 : %

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 사용 실태 확인

[그림 6-2]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해외여권 사용 실태 확인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본 결과, 36.7%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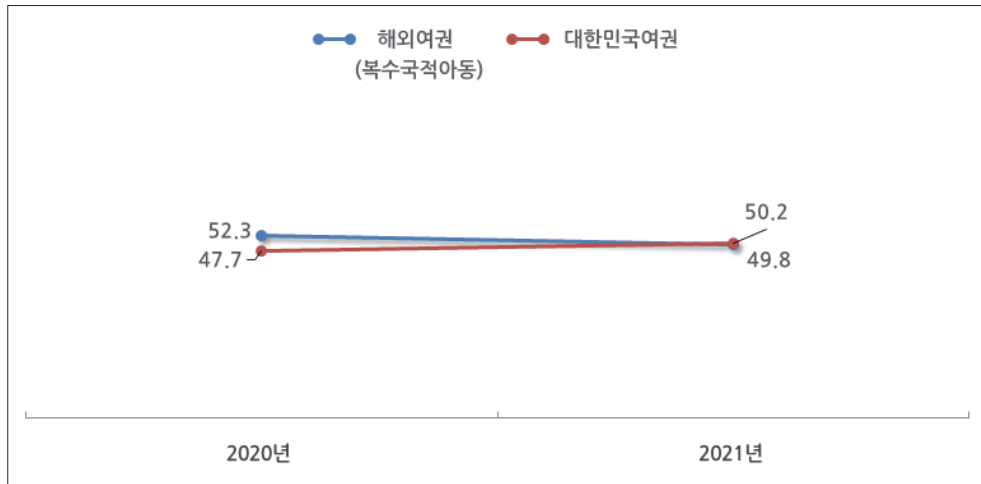
[Q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시 해외여권 사용 여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확인 가능하십니까?

〈표 6-8〉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확인

단위 : %						
	사례수(명)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확인 할 수 없다	계	chi-sq	Sig.
▣ 전체 ▣	(60)	36.7	63.3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33.3	66.7	100	10.139	0.752
부산광역시	(6)	50	50	100		
대구광역시	(1)	0	100	100		
인천광역시	(3)	33.3	66.7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100		
경기도	(11)	36.4	63.6	100		
강원도	(3)	33.3	66.7	100		
충청북도	(2)	0	100	100		
충청남도	(4)	50	50	100		
전라북도	(3)	0	100	100		
전라남도	(6)	16.7	83.3	100		
경상북도	(6)	33.3	66.7	100		
경상남도	(5)	60	4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50	50	100	0.510	0.475
지방자치단체	(54)	35.2	64.8	100		

4.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의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 비중

[그림 6-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의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 비중



- 장기해외체류로 인해 아동수당을 환수하기로 결정된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0년 아동수당 환수가 결정된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비중을 물어본 결과, 2020년 52.3%, 2021년 49.8%로 나타남

[Q3-1] 2020 해외여권

〈표 6-9〉 2020 해외여권

	사례수(명)	0	10	20	30	40	50	60	80	90	100	계	평균	chi-sq	Sig.
전체	(22)	13.6	4.5	9.1	9.1	4.5	18.2	4.5	4.5	18.2	13.6	100	52.27		
지역															
서울특별시	(2)	0	0	0	0	0	50	0	0	50	0	100	70		
부산광역시	(3)	33.3	0	33.3	0	0	0	0	33.3	0	0	100	33.33		
인천광역시	(1)	0	0	0	0	0	0	0	0	100	0	100	9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100	0	0	0	0	100	5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경기도	(4)	0	0	0	50	0	25	0	0	0	25	100	52.5	109.542	0.220
강원도	(1)	0	100	0	0	0	0	0	0	0	0	100	10		
충청남도	(2)	0	0	0	0	0	50	0	0	50	0	100	70		
전라남도	(1)	0	0	0	0	100	0	0	0	0	0	100	40		
경상북도	(2)	0	0	50	0	0	0	50	0	0	0	100	40		
경상남도	(3)	33.3	0	0	0	0	0	0	0	33.3	33.3	100	63.33		
제주특별자치도	(1)	100	0	0	0	0	0	0	0	0	0	10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3)	33.3	0	0	0	0	33.3	0	33.3	0	0	100	43.33	9.971	0.353
지방자치단체	(19)	10.5	5.3	10.5	10.5	5.3	15.8	5.3	0	21.1	15.8	100	53.68		

단위 : %

[Q3-1] 2020 대한민국여권

〈표 6-10〉 2020 대한민국여권

지역	시례수(명)	0	10	20	40	50	60	70	80	90	100	계	평균	chi-sq	Sig.	단위 : %
전체	(22)	13.6	18.2	4.5	4.5	18.2	4.5	9.1	9.1	4.5	13.6	100	47.73			
서울특별시	(2)	0	50	0	0	50	0	0	0	0	0	100	30			
부산광역시	(3)	0	0	33.3	0	0	0	0	33.3	0	33.3	100	66.67			
인천광역시	(1)	0	100	0	0	0	0	0	0	0	0	100	10			
대전광역시	(1)	0	0	0	0	100	0	0	0	0	0	100	50			
울산광역시	(1)	100	0	0	0	0	0	0	0	0	0	100	0			
경기도	(4)	25	0	0	0	25	0	50	0	0	0	100	47.5	109.542	0.220	
강원도	(1)	0	0	0	0	0	0	0	0	100	0	100	90			
충청남도	(2)	0	50	0	0	50	0	0	0	0	0	100	30			
전라남도	(1)	0	0	0	0	0	100	0	0	0	0	100	60			
경상북도	(2)	0	0	0	50	0	0	0	50	0	0	100	60			
경상남도	(3)	33.3	33.3	0	0	0	0	0	0	0	33.3	100	36.67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3)	0	0	33.3	0	33.3	0	0	0	0	33.3	100	56.67	9.971	0.353	
지방자치단체	(19)	15.8	21.1	0	5.3	15.8	5.3	10.5	10.5	5.3	10.5	100	46.32			

[Q3-1] 2021 해외여권

〈표 6-11〉 2021 해외여권

	시례수(명)	0	10	20	30	35	50	60	80	90	100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22)	13.6	4.5	9.1	9.1	4.5	22.7	4.5	4.5	18.2	9.1	100	49.77		
지역															
서울특별시	(2)	0	0	0	0	0	50	0	0	50	0	100	70		
부산광역시	(3)	33.3	0	33.3	0	0	0	0	33.3	0	0	100	33.33		
인천광역시	(1)	0	0	0	0	0	0	0	0	100	0	100	9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100	0	0	0	0	100	5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100	100		
경기도	(4)	0	0	0	50	0	25	0	0	0	25	100	52.5	113.606	0.150
강원도	(1)	0	100	0	0	0	0	0	0	0	0	100	10		
충청남도	(2)	0	0	0	0	0	50	0	0	50	0	100	70		
전라남도	(1)	0	0	0	0	100	0	0	0	0	0	100	35		
경상북도	(2)	0	0	50	0	0	0	50	0	0	0	100	40		
경상남도	(3)	66.7	0	0	0	0	0	0	0	33.3	0	100	30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0	100	0	0	0	0	100	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3)	0	0	0	0	0	66.7	0	33.3	0	0	100	60	11.811	0.224
지방자치단체	(19)	15.8	5.3	10.5	10.5	5.3	15.8	5.3	0	21.1	10.5	100	48.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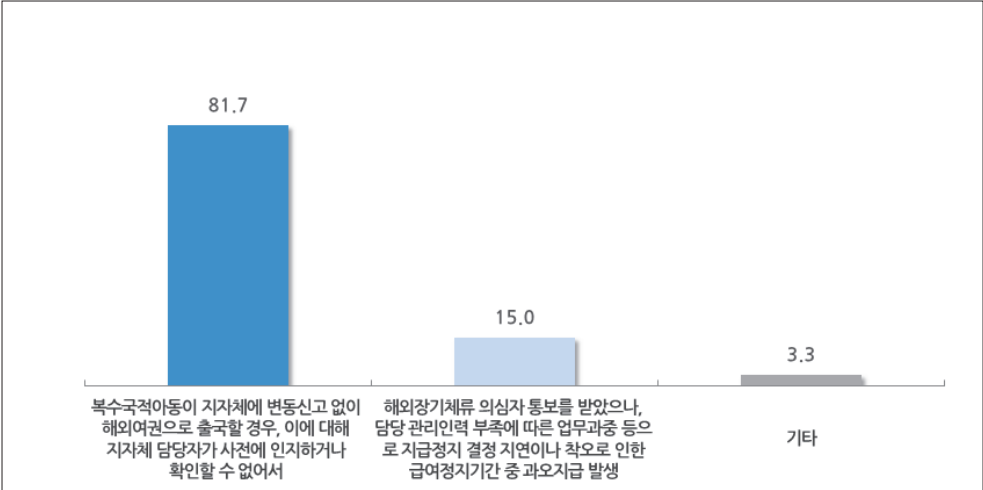
[Q3-1] 2021 대한민국여권

〈표 6-12〉 2021 대한민국여권

		시례수(명)	0	10	20	40	50	65	70	80	90	100	계	평균	chi-sq	단위 : % Sig.	
지역	전체	(22)	9.1	18.2	4.5	4.5	22.7	4.5	9.1	9.1	4.5	13.6	100	50.23			
서울특별시	(2)		0	50	0	0	50	0	0	0	0	0	100	30			
부산광역시	(3)		0	0	33.3	0	0	0	0	33.3	0	33.3	100	66.67			
인천광역시	(1)		0	100	0	0	0	0	0	0	0	0	100	10			
대전광역시	(1)		0	0	0	0	100	0	0	0	0	0	100	50			
울산광역시	(1)		100	0	0	0	0	0	0	0	0	0	100	0			
경기도	(4)		25	0	0	0	25	0	50	0	0	0	100	47.5	113.60	0.150	
강원도	(1)		0	0	0	0	0	0	0	0	100	0	100	90	6		
충청남도	(2)		0	50	0	0	50	0	0	0	0	0	100	30			
전라남도	(1)		0	0	0	0	0	100	0	0	0	0	100	65			
경상북도	(2)		0	0	0	50	0	0	0	50	0	0	100	60			
경상남도	(3)		0	33.3	0	0	0	0	0	0	0	66.7	100	70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100	0	0	0	0	0	100	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3)		0	0	33.3	0	66.7	0	0	0	0	0	100	40	11.811	0.224	
지방자치단체	(19)		10.5	21.1	0	5.3	15.8	5.3	10.5	10.5	5.3	15.8	100	51.84			

5.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그림 6-4]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이유



○ 모든 응답자에게 장기해외체류아동에 대한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즉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Q4] 장기해외체류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즉,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1개만 선택)

〈표 6-13〉 주요 환수결정 이유

	사례수(명)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 중 과오지급 발생	기타	계	chi-sq	Sig.
전체	(60)	81.7	15	3.3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100	0	0	100		
부산광역시	(6)	66.7	16.7	16.7	100		
대구광역시	(1)	100	0	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0	100		
대전광역시	(1)	100	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0	100		
경기도	(11)	81.8	18.2	0	100		
강원도	(3)	100	0	0	100		
충청북도	(2)	50	0	50	100		
충청남도	(4)	75	25	0	100		
전라북도	(3)	100	0	0	100		
전라남도	(6)	83.3	16.7	0	100		
경상북도	(6)	83.3	16.7	0	100		
경상남도	(5)	60	4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33.3	0	100	1.900	0.387
지방자치단체	(54)	83.3	13	3.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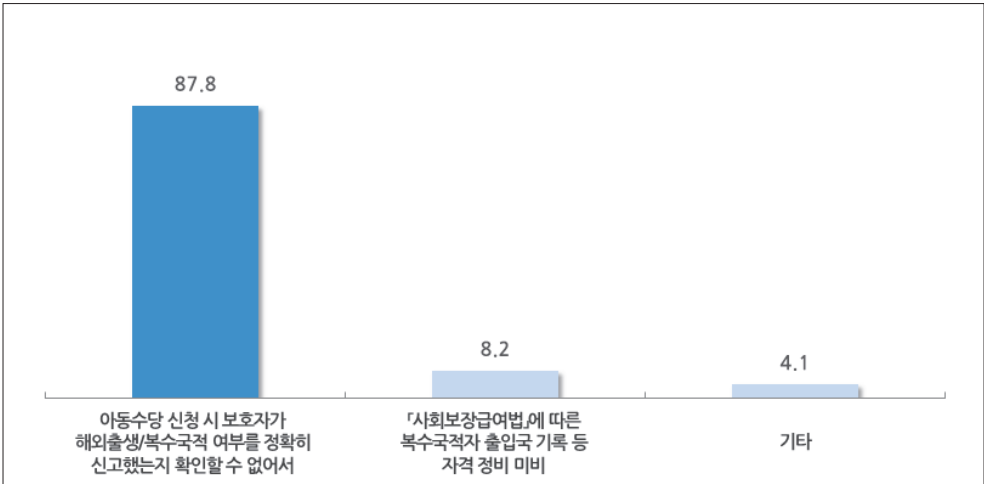
단위 : %

0.601

25.486

6.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그림 6-5]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 앞서 환수결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를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가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Q4-1]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아동수당사업 지침에 따르면, 해외출생이나 복수국적 여부를 신청자가 신고해야 하며, 음면동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여권 사본을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 담당자는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변동 알림 시 자격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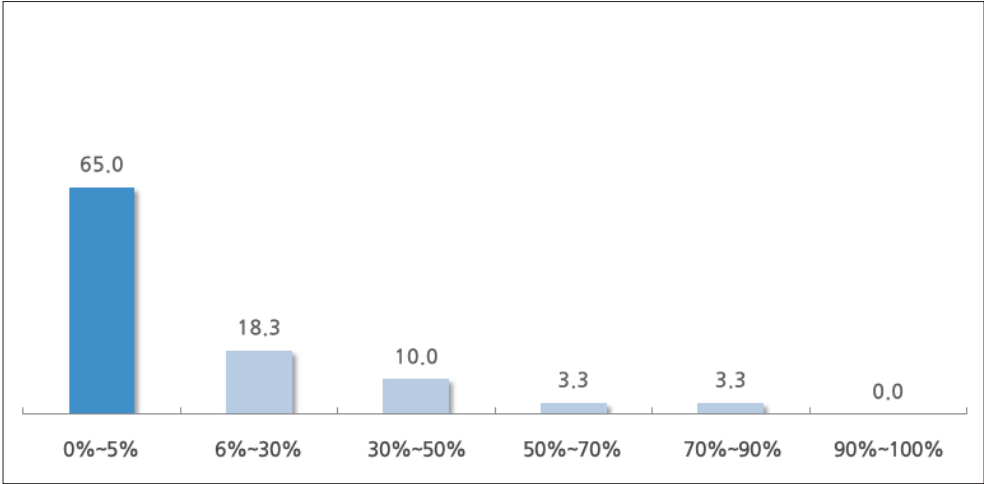
〈표 6-14〉 확인이 어려운 이유

지역	시례수(명)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보호자의 불성실/부정 신고) 확인할 수 없어서 (즉, 복수국적 사실 미신고 아동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통보를 받지 못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정비 미비	기타	계	chi-sq	Sig.
전체	(49)	87.8	8.2	4.1	100		
서울특별시	(6)	100	0	0	100		
부산광역시	(4)	100	0	0	100		
대구광역시	(1)	100	0	0	100		
인천광역시	(2)	100	0	0	100		
대전광역시	(1)	0	10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0	100		
경기도	(9)	88.9	11.1	0	100		
강원도	(3)	66.7	33.3	0	100	28.856	0.420
충청북도	(1)	100	0	0	100		
충청남도	(3)	100	0	0	100		
전라북도	(3)	100	0	0	100		
전라남도	(5)	80	0	20	100		
경상북도	(5)	80	20	0	100		
경상남도	(3)	66.7	0	33.3	10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4)	75	25	0	100	1.771	0.413
지방자치단체	(45)	88.9	6.7	4.4	100		

단위 : %

7.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그림 6-6]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수급아동 보호
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실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아동 수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본 결과, 65.0%가 ‘신고율이 5% 미만으로 극히 낮다
(0~5% 미만)’라고 응답함

[Q6]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지급정지 사유발생·소멸한 경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해서 수급아동 보호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실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아동수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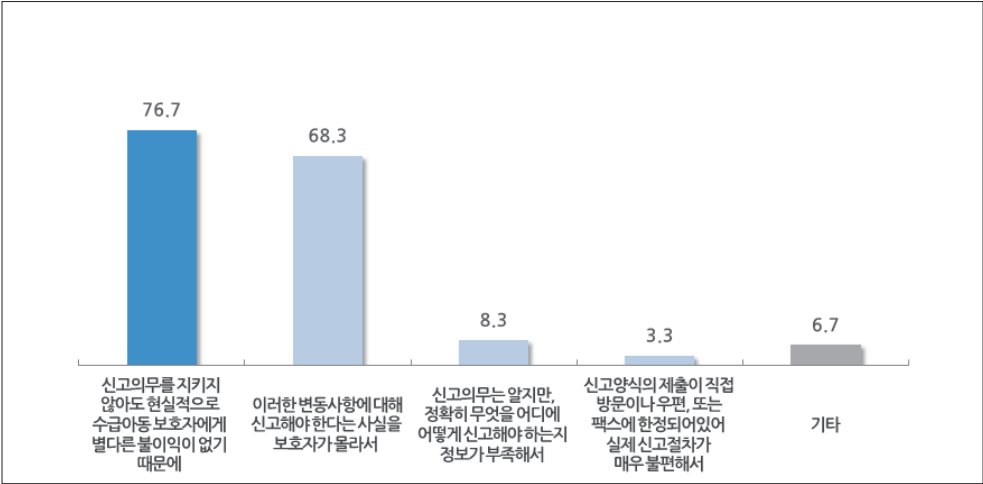
〈표 6-15〉 실제 신고 접수 사례

단위 : %

	사례수 (명)	신고율이 5%미만 으로 극히 낮다 (0%~ 5% 미만)	신고율이 매우 낮다 (6%~ 30% 미만)	신고율이 다소 낮다 (30%~ 50% 미만)	신고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50%~ 70%미만)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70%~ 90% 미만)	계	chi-sq	Sig.
■ 전체 ■	(60)	65	18.3	10	3.3	3.3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33.3	33.3	0	16.7	16.7	100	46.727	0.807
부산광역시	(6)	83.3	16.7	0	0	0	100		
대구광역시	(1)	100	0	0	0	0	100		
인천광역시	(3)	66.7	0	33.3	0	0	100		
대전광역시	(1)	0	100	0	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0	0	0	100		
경기도	(11)	54.5	18.2	27.3	0	0	100		
강원도	(3)	66.7	0	33.3	0	0	100		
충청북도	(2)	50	0	0	0	50	100		
충청남도	(4)	75	25	0	0	0	100		
전라북도	(3)	66.7	33.3	0	0	0	100		
전라남도	(6)	66.7	16.7	16.7	0	0	100		
경상북도	(6)	66.7	16.7	0	16.7	0	100		
경상남도	(5)	80	20	0	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0	0	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50	33.3	16.7	0	0	100	1.790	0.774
지방자치단체	(54)	66.7	16.7	9.3	3.7	3.7	100		

8. 보호자들이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

[그림 6-7] 해외 장기체류 아동 수 대비 관련 신고 비율(2020~2021년)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들이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가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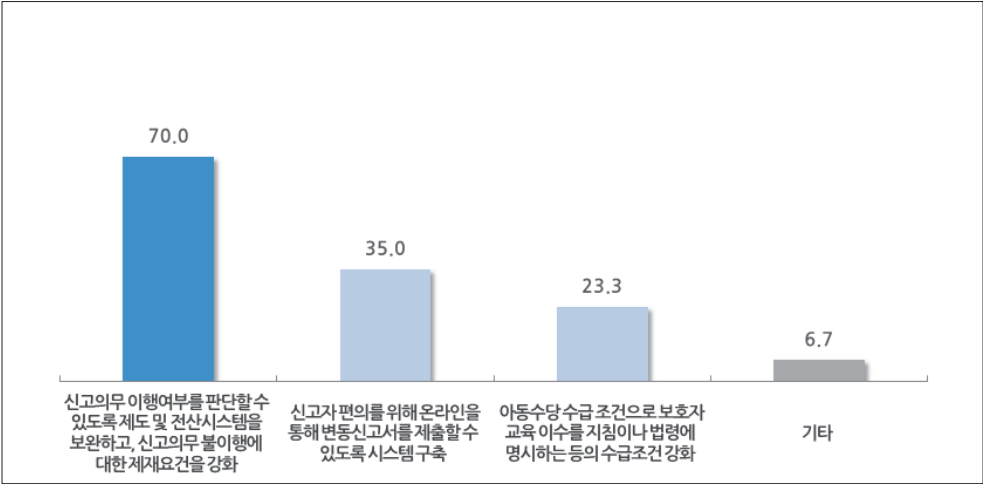
[Q6-1] 변동사항에 대해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표 6-16〉 확인이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사례수 (명)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가 몰라서	신고의무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신고양식의 제출이 직접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에 한정되어있어 실제 신고절차가 매우 불편해서	기타	단위 : %
전체	(60)	76.7	68.3	8.3	3.3	6.7	
지역	서울특별시	83.3	66.7	16.7	0	16.7	
	부산광역시	83.3	83.3	0	0	0	
	대구광역시	100	100	0	0	0	
	인천광역시	66.7	33.3	33.3	0	33.3	
	대전광역시	100	0	0	0	0	
	울산광역시	100	100	0	0	0	
	경기도	63.6	72.7	9.1	9.1	0	
	강원도	66.7	100	0	0	0	
	충청북도	50	0	100	0	0	
	충청남도	75	75	0	0	0	
	전라북도	66.7	66.7	0	0	0	
	전라남도	83.3	50	0	16.7	16.7	
	경상북도	100	66.7	0	0	0	
	경상남도	80	8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50	100	0	0	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50	66.7	16.7	0	16.7	
	지방자치단체	79.6	68.5	7.4	3.7	5.6	

9.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 의무 이행 도모를 위한 보완사항

[그림 6-8]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 의무 이행 도모를 위한 보완사항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외장기체류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요건을 강화’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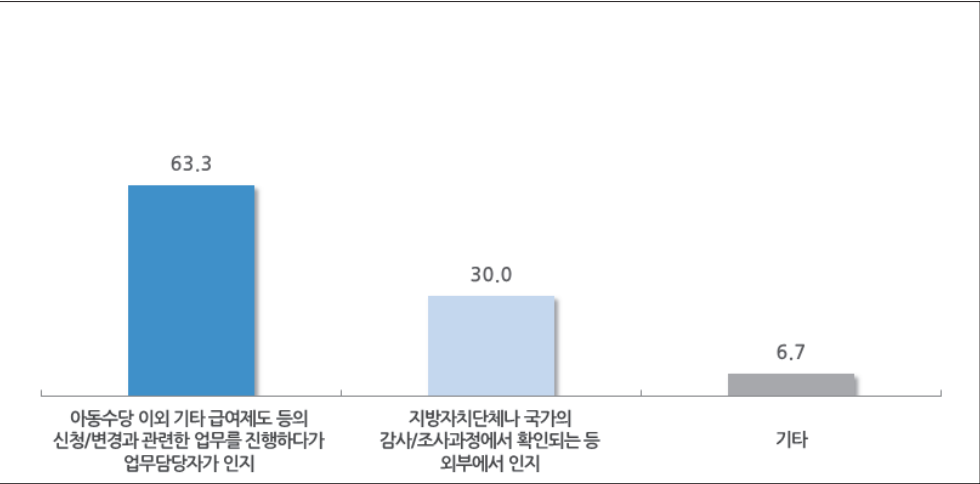
[Q6-2]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까지 선택,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표 6-17〉 우선적 보완사항

지역	시례수(명)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요건을 강화	아동수당 수급 조건으로 보호자 교육 이수율 저침이나 변형에 명시하는 등의 수급조건 강화	신고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변동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기타	단위 : %
전체	(60)	70	23.3	35	6.7	
서울특별시	(6)	83.3	0	33.3	33.3	33.3
부산광역시	(6)	66.7	16.7	33.3	0	0
대구광역시	(1)	100	0	0	0	0
인천광역시	(3)	66.7	33.3	66.7	0	0
대전광역시	(1)	100	0	0	0	0
울산광역시	(1)	100	0	0	100	0
경기도	(11)	63.6	9.1	27.3	0	0
강원도	(3)	66.7	33.3	33.3	0	0
충청북도	(2)	100	0	0	0	0
충청남도	(4)	75	0	50	0	0
전라북도	(3)	66.7	0	66.7	0	0
전라남도	(6)	83.3	33.3	50	0	0
경상북도	(6)	50	66.7	33.3	0	0
경상남도	(5)	60	40	40	0	0
제주특별자치도	(2)	50	100	0	50	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50	16.7	16.7	16.7
지방자치단체	(54)	70.4	20.4	37	5.6	5.6

10.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 인지 경로

[그림 6-9]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 인지 경로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여 환수결정여부를 결정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동수당 이외 기타 급여제도 등의 신청/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담당자가 인지'가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Q7]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여 환수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까? 즉, 인지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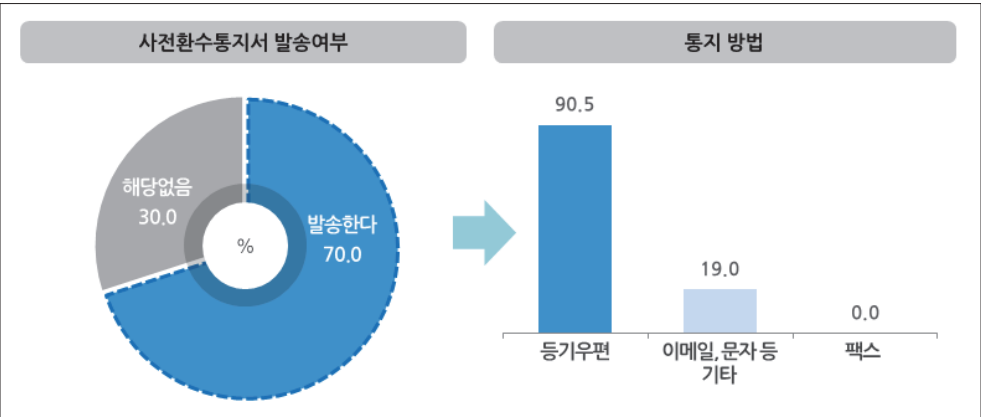
〈표 6-18〉 우선적 보완사항

		단위 : %				
		아동수당 이외 기타 급여제도 등의 신청/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담당자가 인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감사/조사와정에서 확인되는 등 외부에서 인지	기타	계	chi-sq
지역	전체	63.3	30	6.7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부산광역시	(6)	16.7	16.7	100	
	대구광역시	(1)	50	0	100	
	인천광역시	(3)	0	100	100	
	대전광역시	(1)	0	0	100	
	울산광역시	(1)	0	0	100	
	경기도	(11)	100	0	100	
	강원도	(3)	27.3	0	100	
	충청북도	(2)	0	0	100	
	충청남도	(4)	50	0	100	
	전라북도	(3)	50	0	100	
	전라남도	(6)	33.3	0	100	
	경상북도	(6)	16.7	16.7	100	
	경상남도	(5)	33.3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4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지방자치단체	(54)	33.3	16.7	100	
			29.6	5.6	100	
						34.893
						0.173
						0.546

11.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통지 방식 및 비용

1) 사전환수통지서

[그림 6-10] 사전환수통지서 발송여부 및 통지방법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사전환수통지서를 발송하는지 물어본 결과 70.0%가 ‘발송한다’고 응답함
- 사전환수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환수 결정 후 평균 10.24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환수통지서 통지방법으로는 ‘등기우편’이 90.5%로 가장 많았음
- 사전환수통지서는 환수 결정 건 당 평균 1.02회 통지하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은 건 당 평균 6434.29원으로 나타남

[Q8] 사전환수통지서 - 발송여부

〈표 6-19〉 사전환수통지서 - 발송여부

						단위 : %
	사례수 (명)	발송한다	해당없음	계	chi-sq	Sig.
▣ 전체 ▣	(60)	70	30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66.7	33.3	100	7.641	0.907
부산광역시	(6)	100	0	100		
대구광역시	(1)	100	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100		
경기도	(11)	63.6	36.4	100		
강원도	(3)	66.7	33.3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75	25	100		
전라북도	(3)	66.7	33.3	100		
전라남도	(6)	66.7	33.3	100		
경상북도	(6)	66.7	33.3	100		
경상남도	(5)	40	6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33.3	100	0.035	0.851
지방자치단체	(54)	70.4	29.6	100		

[Q8] 사전환수통지서 - 기간

〈표 6-20〉 사전환수통지서 - 기간

		0	1	2	3	5	7	10	14	15	30	계	평균	chi-sq	단위 : %	
지역	사례수(명)	4.8	7.1	4.8	4.8	4.8	19	23.8	9.5	11.9	9.5	100	10.24			Sig.
서울특별시	(4)	25	0	0	0	0	0	25	50	0	0	100	9.5			
부산광역시	(6)	0	33.3	0	0	0	33.3	33.3	0	0	0	100	6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100	30			
인천광역시	(2)	0	0	0	0	0	0	50	0	50	0	100	12.5			
대전광역시	(1)	0	100	0	0	0	0	0	0	0	0	100	1			
울산광역시	(1)	0	0	100	0	0	0	0	0	0	0	100	2			
경기도	(7)	0	0	0	14.3	0	14.3	42.9	0	14.3	14.3	100	12.14	159.871		0.022
강원도	(2)	0	0	50	0	0	50	0	0	0	0	100	4.5			
충청북도	(2)	0	0	0	0	50	0	0	0	50	0	100	10			
충청남도	(3)	0	0	0	33.3	33.3	33.3	0	0	0	0	100	5			
전라북도	(2)	0	0	0	0	0	0	0	0	0	100	100	30			
전라남도	(4)	0	0	0	0	0	50	50	0	0	0	100	8.5			
경상북도	(4)	25	0	0	0	0	25	0	50	0	0	100	8.75			
경상남도	(2)	0	0	0	0	0	0	50	0	50	0	100	12.5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0	0	0	0	100	0	100	15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4)	0	25	0	0	0	0	25	0	50	0	100	10.25	9.892		0.359
지방자치단체	(38)	5.3	5.3	5.3	5.3	5.3	21.1	23.7	10.5	7.9	10.5	100	10.24			

[Q8]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방법

〈표 6-21〉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 등 기타
▣ 전체 ▣		(42)	90.5	19
지역	서울특별시	(4)	100	50
	부산광역시	(6)	83.3	16.7
	대구광역시	(1)	100	100
	인천광역시	(2)	50	50
	대전광역시	(1)	100	0
	울산광역시	(1)	100	0
	경기도	(7)	100	0
	강원도	(2)	100	0
	충청북도	(2)	100	0
	충청남도	(3)	100	0
	전라북도	(2)	100	0
	전라남도	(4)	50	50
	경상북도	(4)	100	25
	경상남도	(2)	100	0
	제주특별자치도	(1)	10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4)	75	25
지방자치단체		(38)	92.1	18.4

[Q8]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표 6-22〉 사전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단위 : %
	사례수(명)	0	1	2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42)	4.8	88.1	7.1	100	1.02		
지역								
서울특별시	(4)	25	50	25	100	1	24.878	0.634
부산광역시	(6)	0	100	0	100	1		
대구광역시	(1)	0	100	0	100	1		
인천광역시	(2)	0	50	50	100	1.5		
대전광역시	(1)	0	100	0	100	1		
울산광역시	(1)	0	100	0	100	1		
경기도	(7)	0	100	0	100	1		
강원도	(2)	0	100	0	100	1		
충청북도	(2)	0	100	0	100	1		
충청남도	(3)	0	100	0	100	1		
전라북도	(2)	0	50	50	100	1.5		
전라남도	(4)	0	100	0	100	1		
경상북도	(4)	25	75	0	100	0.75		
경상남도	(2)	0	100	0	100	1		
제주특별자치도	(1)	0	100	0	100	1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4)	0	75	25	100	1.25	2.270	0.321
지방자치단체	(38)	5.3	89.5	5.3	100	1		

[Q8] 사전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표 6-23〉 사전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지역	□ 전체 □	사례수(명)	단위 : %															
			0	100	400	500	550	1000	1500	1800	2000	2200	2500	2530	3000			
		(42)	9.5	4.8	2.4	7.1	2.4	4.8	9.5	2.4	9.5	2.4	4.8	7.1	9.5			
서울특별시		(4)	25	0	0	0	0	0	0	0	0	0	0	25	25			
부산광역시		(6)	16.7	0	0	16.7	0	0	0	16.7	16.7	0	0	16.7	0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2)	0	0	0	0	0	0	0	0	0	50	0	0	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10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100	0	0			
경기도		(7)	0	0	0	0	14.3	14.3	0	0	0	0	0	0	14.3			
강원도		(2)	0	0	0	0	0	0	0	0	50	0	0	50	0			
충청북도		(2)	0	0	0	0	0	0	0	0	50	0	50	0	0			
충청남도		(3)	0	0	33.3	33.3	0	0	0	0	33.3	0	0	0	0			
전라북도		(2)	0	0	0	0	0	50	50	0	0	0	0	0	0			
전라남도		(4)	0	50	0	0	0	0	25	0	0	0	0	0	0			
경상북도		(4)	25	0	0	25	0	0	0	0	0	0	0	0	25			
경상남도		(2)	50	0	0	0	0	0	0	0	0	0	0	0	50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0	0	100	0	0	0	0	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4)	0	0	0	25	0	0	50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		(38)	10.5	5.3	2.6	5.3	2.6	5.3	5.3	2.6	10.5	2.6	5.3	7.9	10.5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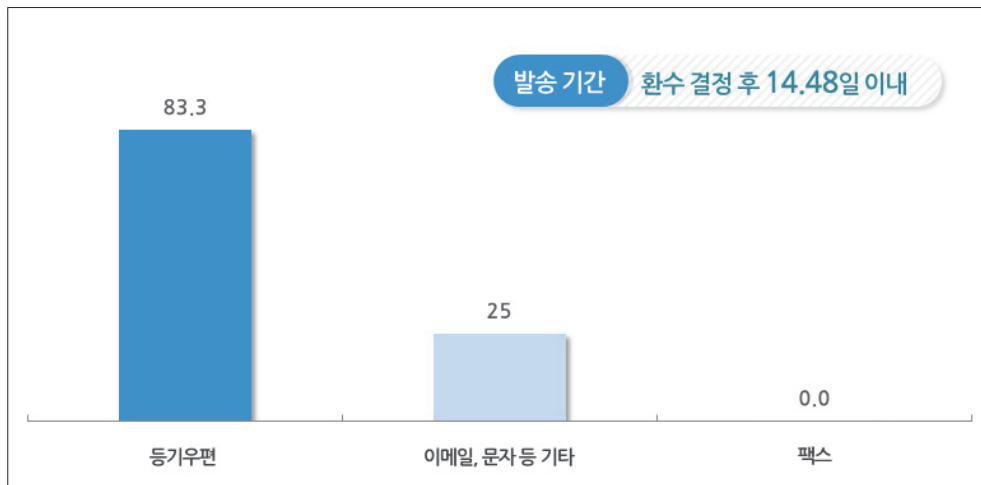
		4000	5000	7000	10000	12000	40000	50000	80000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2.4	4.8	2.4	4.8	2.4	2.4	2.4	2.4	100	6434.29		
지역	서울특별시	0	25	0	0	0	0	0	0	100	2632.5		
	부산광역시	0	0	16.7	0	0	0	0	0	100	2305		
	대구광역시	0	0	0	0	100	0	0	0	100	12000		
	인천광역시	0	50	0	0	0	0	0	0	100	360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0	100	150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0	100	2500		
	경기도	14.3	0	0	14.3	0	0	14.3	14.3	100	21221.43	265.708	0.721
	강원도	0	0	0	0	0	0	0	0	100	2265		
	충청북도	0	0	0	0	0	0	0	0	100	2250		
	충청남도	0	0	0	0	0	0	0	0	100	966.67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100	1250		
	전라남도	0	0	0	0	0	25	0	0	100	10425		
	경상북도	0	0	0	25	0	0	0	0	100	3375		
	경상남도	0	0	0	0	0	0	0	0	100	150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100	15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0	25	0	0	0	0	0	0	100	2125	16.855	0.662
지방자치단체		2.6	2.6	2.6	5.3	2.6	2.6	2.6	2.6	100	6887.89		

단위 : %

11.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통지 방식 및 비용

2) 환수통지서

[그림 6-11] 환수통지서 발송기간 및 통지방법



- 환수통지서는 환수 결정 후 평균 14.48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수통지서 통지방법으로는 ‘등기우편’이 83.3%로 가장 많았음
- 환수통지서는 환수 결정 건 당 평균 1.17회 발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건 당 평균 7293.67원으로 나타남

[Q8] 환수통지서 - 기간

〈표 6-24〉 환수통지서 - 기간

	시례수 (명)	0	1	2	3	5	7	10	14	15	17	20	30	90	계	평균	chi-sq	Sig.
전체	(60)	8.3	3.3	1.7	3.3	8.3	18.3	8.3	11.7	8.3	3.3	1.7	21.7	1.7	100	14.48		
지역																		
서울특별시	(6)	16.7	0	0	0	0	16.7	0	50	0	0	0	16.7	0	100	13.17		
부산광역시	(6)	0	16.7	0	0	0	50	0	0	0	16.7	0	16.7	0	100	11.5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100	0	100	30		
인천광역시	(3)	0	0	0	0	0	33.3	0	33.3	33.3	0	0	0	0	100	12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0	0	0	100	17		
울산광역시	(1)	0	0	0	0	0	100	0	0	0	0	0	0	0	100	7		
경기도	(11)	9.1	0	0	0	0	9.1	18.2	0	9.1	0	9.1	36.4	9.1	100	24.73	164.651	0.559
강원도	(3)	0	0	33.3	0	0	33.3	0	33.3	0	0	0	0	0	100	7.67		
충청북도	(2)	0	0	0	0	50	0	0	0	50	0	0	0	0	100	10		
충청남도	(4)	0	0	0	25	25	25	25	0	0	0	0	0	0	100	6.25		
전라북도	(3)	33.3	0	0	0	0	0	0	0	0	0	0	66.7	0	100	20		
전라남도	(6)	0	0	0	0	0	33.3	16.7	16.7	0	0	0	33.3	0	100	16.33		
경상북도	(6)	33.3	0	0	0	16.7	0	16.7	16.7	0	0	0	16.7	0	100	9.83		
경상남도	(5)	0	20	0	20	20	0	0	0	20	0	0	20	0	100	10.8		
제주특별자치도	(2)	0	0	0	0	50	0	0	0	50	0	0	0	0	100	1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6.7	0	0	0	16.7	16.7	0	0	33.3	16.7	0	0	0	100	9.83	13.232	0.352
지방자치단체	(54)	7.4	3.7	1.9	3.7	7.4	18.5	9.3	13	5.6	1.9	1.9	24.1	1.9	100	15		

단위 : %

[Q8] 환수통지서 - 통지방법

〈표 6-25〉 환수통지서 - 통지방법(복수응답)

단위 : %			
	사례수 (명)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 등 기타
▣ 전체 ▣	(60)	83.3	25
지역			
서울특별시	(6)	100	33.3
부산광역시	(6)	83.3	16.7
대구광역시	(1)	10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대전광역시	(1)	100	0
울산광역시	(1)	100	0
경기도	(11)	81.8	18.2
강원도	(3)	100	0
충청북도	(2)	100	0
충청남도	(4)	100	0
전라북도	(3)	66.7	33.3
전라남도	(6)	50	50
경상북도	(6)	66.7	50
경상남도	(5)	100	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50
지방자치단체	(54)	85.2	22.2

[Q8] 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표 6-26〉 환수통지서 - 통지회수

								단위 : %
	사례수(명)	0	1	2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60)	8.3	66.7	25	100	1.17		
지역								
서울특별시	(6)	16.7	50	33.3	100	1.17	25.775	0.585
부산광역시	(6)	0	83.3	16.7	100	1.17		
대구광역시	(1)	0	100	0	100	1		
인천광역시	(3)	0	66.7	33.3	100	1.33		
대전광역시	(1)	0	0	100	100	2		
울산광역시	(1)	0	0	100	100	2		
경기도	(11)	9.1	81.8	9.1	100	1		
강원도	(3)	0	66.7	33.3	100	1.33		
충청북도	(2)	0	100	0	100	1		
충청남도	(4)	0	75	25	100	1.25		
전라북도	(3)	33.3	33.3	33.3	100	1		
전라남도	(6)	0	83.3	16.7	100	1.17		
경상북도	(6)	33.3	66.7	0	100	0.67		
경상남도	(5)	0	40	60	100	1.6		
제주특별자치도	(2)	0	50	50	100	1.5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6.7	33.3	50	100	1.33	3.333	0.189
지방자치단체	(54)	7.4	70.4	22.2	100	1.15		

[Q8] 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표 6-27〉 환수통지서 - 행정비용

지역	시례수(명)	0	100	150	200	400	500	550	1000	1500	1800	2000	2200	2500
		16.7	3.3	1.7	1.7	1.7	5	1.7	5	8.3	1.7	10	1.7	3.3
서울특별시	(6)	16.7	0	0	0	0	0	0	0	0	0	16.7	0	0
부산광역시	(6)	16.7	0	0	0	0	16.7	0	0	0	16.7	16.7	0	0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3)	0	0	0	0	0	0	0	0	33.3	0	0	33.3	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0	0	100	0	0	0	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11)	9.1	0	9.1	0	0	0	9.1	18.2	0	0	0	0	0
강원도	(3)	33.3	0	0	0	0	0	0	0	0	0	33.3	0	0
충청북도	(2)	0	0	0	0	0	0	0	0	0	0	50	0	50
충청남도	(4)	0	0	0	0	25	25	0	0	0	0	25	0	0
전라북도	(3)	33.3	0	0	0	0	0	0	33.3	33.3	0	0	0	0
전라남도	(6)	16.7	33.3	0	0	0	0	0	0	16.7	0	0	0	0
경상북도	(6)	50	0	0	0	0	16.7	0	0	0	0	0	0	0
경상남도	(5)	20	0	0	20	0	0	0	0	0	0	20	0	20
제주특별자치도	(2)	0	0	0	0	0	0	0	0	50	0	0	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6.7	0	0	0	0	16.7	0	0	33.3	0	0	0	0
지방자치단체	(54)	16.7	3.7	1.9	1.9	1.9	3.7	1.9	5.6	5.6	1.9	11.1	1.9	3.7

[계속]

		2530	3000	4000	5000	7000	10000	12000	30000	40000	50000	80000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6.7	8.3	1.7	5	1.7	3.3	1.7	1.7	3.3	1.7	3.3	100	7293.67		
지역	서울특별시	16.7	33.3	0	16.7	0	0	0	0	0	0	0	100	2588.33		
	부산광역시	16.7	0	0	0	16.7	0	0	0	0	0	0	100	2305		
	대구광역시	0	0	0	0	0	0	100	0	0	0	0	100	12000		
	인천광역시	0	0	0	33.3	0	0	0	0	0	0	0	100	2900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0	0	0	0	100	1500		
	울산광역시	0	0	0	100	0	0	0	0	0	0	0	100	5000		
	경기도	0	9.1	9.1	0	0	9.1	0	9.1	0	9.1	9.1	100	16336.36	316.736	0.572
	강원도	33.3	0	0	0	0	0	0	0	0	0	0	100	1510		
	충청북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2250		
	충청남도	0	0	0	0	0	0	0	0	0	0	25	100	20725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0	100	833.33		
	전라남도	16.7	0	0	0	0	0	0	0	16.7	0	0	100	7371.67		
	경상북도	0	16.7	0	0	0	16.7	0	0	0	0	0	100	2250		
	경상남도	0	20	0	0	0	0	0	0	0	0	0	100	154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0	0	0	50	0	0	100	2075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0	0	0	16.7	0	0	0	0	16.7	0	0	100	8083.33	16.296	0.842
지방자치단체		7.4	9.3	1.9	3.7	1.9	3.7	1.9	1.9	1.9	1.9	3.7	100	7205.93		

단위 : %

11.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통지 방식 및 비용

3) 공시송달공고

- 공시송달공고는 통지서 반송 확인 후 평균 15.7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시송달공고는 환수 결정 건 당 평균 0.73회 발송하며, 이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건 당 평균 7194.67원으로 나타남

[Q8] 공시송달공고 - 기간

〈표 6-28〉 공시송달공고 - 기간

	사례수 (명)	0	2	3	5	7	10	14	15	20	30	60	77	90	계	평균	chi-sq	Sig.
전체	(60)	26.7	1.7	1.7	5	6.7	6.7	13.3	11.7	1.7	18.3	3.3	1.7	1.7	100	15.7		
지역																		
서울특별시	(6)	50	0	0	0	0	0	50	0	0	0	0	0	0	100	7		
부산광역시	(6)	16.7	0	0	0	33.3	0	0	0	0	16.7	16.7	16.7	0	100	30.17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0	0	0	100	30		
인천광역시	(3)	33.3	0	0	0	0	0	33.3	33.3	0	0	0	0	0	100	9.67		
대전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0	0	0	100	3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100	0	0	0	100	30		
경기도	(11)	27.3	0	0	0	9.1	9.1	9.1	9.1	9.1	18.2	0	0	9.1	100	19.64	142.695	0.922
강원도	(3)	0	33.3	0	0	0	0	0	0	0	66.7	0	0	0	100	20.67		
충청북도	(2)	0	0	0	0	0	0	50	50	0	0	0	0	0	100	14.5		
충청남도	(4)	0	0	25	25	25	0	0	0	0	25	0	0	0	100	11.25		
전라북도	(3)	33.3	0	0	0	0	33.3	0	33.3	0	0	0	0	0	100	8.33		
전라남도	(6)	33.3	0	0	0	0	16.7	16.7	16.7	0	0	16.7	0	0	100	16.5		
경상북도	(6)	50	0	0	16.7	0	16.7	0	0	0	16.7	0	0	0	100	7.5		
경상남도	(5)	40	0	0	0	0	0	20	20	0	20	0	0	0	100	11.8		
제주특별자치도	(2)	0	0	0	50	0	0	0	50	0	0	0	0	0	100	1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6.7	0	0	16.7	16.7	0	0	33.3	0	16.7	0	0	0	100	12	7.869	0.795
지방자치단체	(54)	27.8	1.9	1.9	3.7	5.6	7.4	14.8	9.3	1.9	18.5	3.7	1.9	1.9	100	16.11		

[Q8] 공시송달공고 - 통지회수

〈표 6-29〉 공시송달공고 - 통지회수

								단위 : %
	사례수(명)	0	1	2	계	평균	chi-sq	Sig.
▣ 전체 ▣	(60)	28.3	70	1.7	100	0.73		
지역								
서울특별시	(6)	50	50	0	100	0.5	29.203	0.402
부산광역시	(6)	16.7	83.3	0	100	0.83		
대구광역시	(1)	0	100	0	100	1		
인천광역시	(3)	33.3	33.3	33.3	100	1		
대전광역시	(1)	0	100	0	100	1		
울산광역시	(1)	0	100	0	100	1		
경기도	(11)	36.4	63.6	0	100	0.64		
강원도	(3)	0	100	0	100	1		
충청북도	(2)	0	100	0	100	1		
충청남도	(4)	0	100	0	100	1		
전라북도	(3)	33.3	66.7	0	100	0.67		
전라남도	(6)	33.3	66.7	0	100	0.67		
경상북도	(6)	50	50	0	100	0.5		
경상남도	(5)	40	60	0	100	0.6		
제주특별자치도	(2)	0	100	0	100	1		
자치단체 구분								
광역시자치단체	(6)	16.7	66.7	16.7	100	1	9.331	0.009
지방자치단체	(54)	29.6	70.4	0	100	0.7		

[Q8] 공시송달공고 - 행정비용

〈표 6-30〉 공시송달공고 - 행정비용

지역	사례수(명)	단위 : %														
		0	100	150	500	1000	1500	1800	2000	2530	3000	4000	5000	7000		
□ 전체	(60)	53.3	3.3	1.7	1.7	5	5	1.7	3.3	1.7	3.3	1.7	3.3	1.7		
서울특별시	(6)	66.7	0	0	0	0	0	0	0	0	33.3	0	0	0		
부산광역시	(6)	50	0	0	0	0	0	16.7	16.7	16.7	0	0	0	0		
대구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3)	33.3	0	0	0	0	33.3	0	0	0	0	0	33.3	0		
대전광역시	(1)	0	0	0	0	0	10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	0	0	0	0	0	100	0		
경기도	(11)	45.5	0	9.1	0	9.1	0	0	0	0	0	9.1	0	0		
강원도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북도	(2)	50	0	0	0	0	0	0	50	0	0	0	0	0		
충청남도	(4)	25	0	0	25	25	0	0	0	0	0	0	0	0		
전라북도	(3)	66.7	0	0	0	33.3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6)	33.3	33.3	0	0	0	0	0	0	0	0	0	0	16.7		
경상북도	(6)	83.3	0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2)	0	0	0	0	0	50	0	0	0	0	0	0	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33.3	0	0	0	0	33.3	0	0	0	0	0	16.7	0		
지방자치단체	(54)	55.6	3.7	1.9	1.9	5.6	1.9	1.9	3.7	1.9	3.7	1.9	1.9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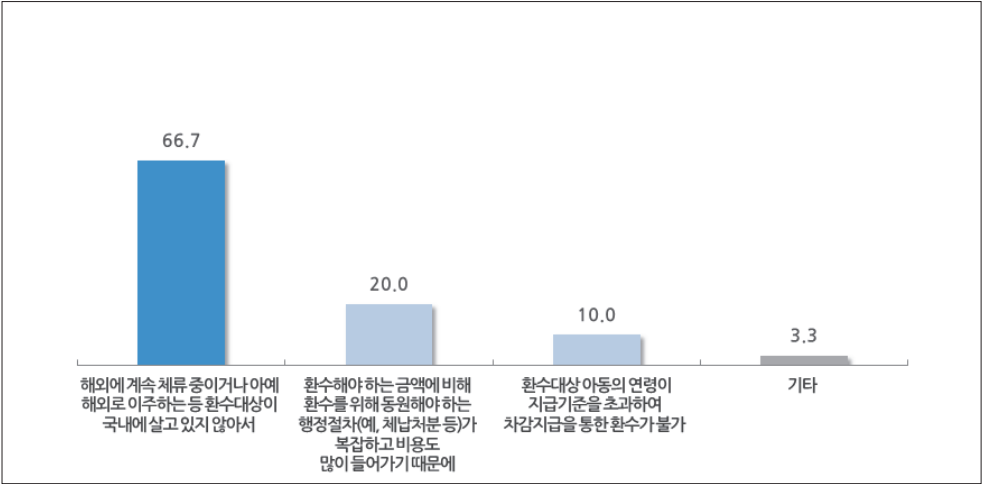
[계속]

지역	전체	10000	18000	20000	40000	50000	80000	160000	계	평균	chi-sq	Sig.
		3.3	1.7	1.7	1.7	1.7	1.7	1.7	100	7194.67		
지역	서울특별시	0	0	0	0	0	0	0	100	100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100	1055		
	대구광역시	0	100	0	0	0	0	0	100	18000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100	2166.67		
	대전광역시	0	0	0	0	0	0	0	100	150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0	100	5000		
	경기도	9.1	0	0	0	9.1	9.1	0	100	13195.45	320.365	0.012
	강원도	0	0	0	0	0	0	0	100	0		
	충청북도	0	0	0	0	0	0	0	100	1000		
	충청남도	0	0	0	0	0	0	25	100	40375		
	전라북도	0	0	0	0	0	0	0	100	333.33		
	전라남도	0	0	0	16.7	0	0	0	100	7866.67		
	경상북도	16.7	0	0	0	0	0	0	100	1666.67		
	경상남도	0	0	0	0	0	0	0	100	0		
	제주특별자치도	0	0	50	0	0	0	0	100	10750		
자치단체 구분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0	0	16.7	0	0	0	0	100	4666.67	26.204	0.125
	지방자치단체	3.7	1.9	0	1.9	1.9	1.9	1.9	100	7475.56		

단위 : %

12.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림 6-12]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등 환수대상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Q9] 귀하께서는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6-31〉 환수가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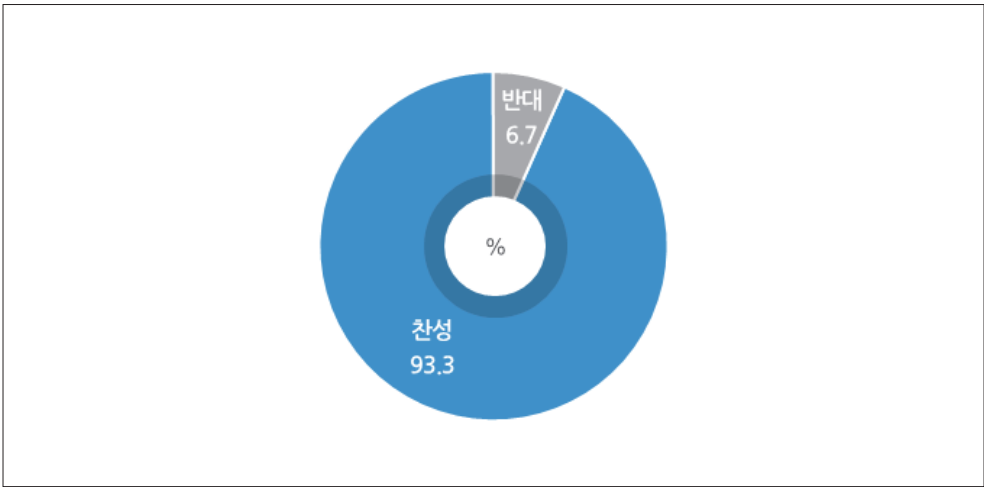
	사례수(명)	(환수대상 부재)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등 환수대상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	(아동연령 초과) 환수대상 아동의 연령이 지급기준을 통한 초과하여 차감지급을 통한 환수가 불가	(환수액 대비 과도한 행정부담) 환수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환수를 위해 동원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계	chi-sq	Sig.
□ 전체 □	(60)	66.7	10	20	3.3	100		
지역	서울특별시	83.3	0	0	16.7	100		
	부산광역시	83.3	0	16.7	0	100		
	대구광역시	0	100	0	0	100		
	인천광역시	100	0	0	0	100		
	대전광역시	0	0	100	0	100		
	울산광역시	100	0	0	0	100		
	경기도	72.7	9.1	18.2	0	100	53.080	0.117
	강원도	100	0	0	0	100		
	충청북도	0	50	50	0	100		
	충청남도	25	25	50	0	100		
	전라북도	66.7	0	33.3	0	100		
	전라남도	66.7	16.7	16.7	0	100		
	경상북도	50	16.7	33.3	0	100		
	경상남도	100	0	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0	0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33.3	0	50	16.7	100	8.333	0.040
	(54)	70.4	11.1	16.7	1.9	100		

단위 : %

13.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1)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그림 6-13]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아동수당 신청 시, 아동의 복수국적 사실을 신청했는지를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 연계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3.3%가 ‘찬성’이라고 응답함

[Q10-1]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여부를 보호자가 신고했는지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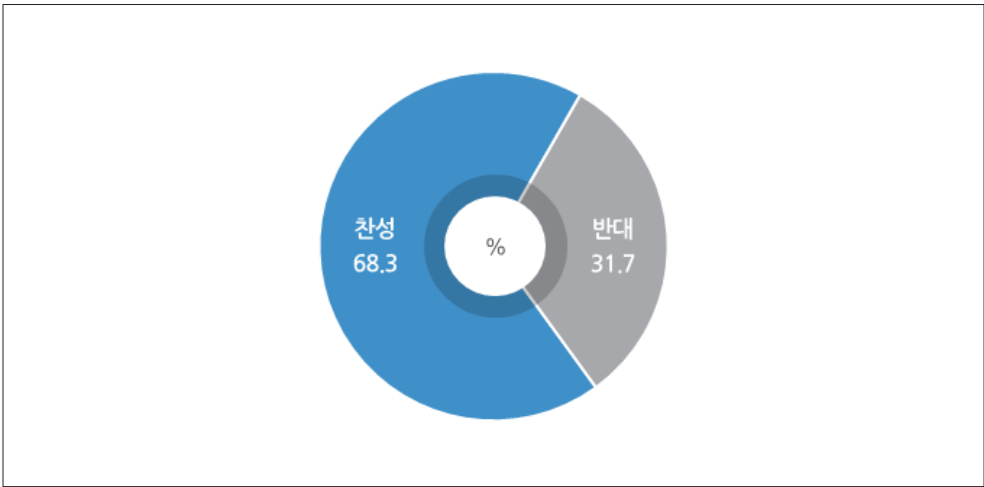
〈표 6-32〉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반대	계	chi-sq	Sig.
■ 전체 ■		(60)	93.3	6.7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83.3	16.7	100	11.786	0.624
	부산광역시	(6)	83.3	16.7	100		
	대구광역시	(1)	100	0	100		
	인천광역시	(3)	100	0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100		
	경기도	(11)	100	0	100		
	강원도	(3)	66.7	33.3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100	0	100		
	전라북도	(3)	66.7	33.3	100		
	전라남도	(6)	100	0	100		
	경상북도	(6)	100	0	100		
	경상남도	(5)	10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100	0	100	0.476	0.490
지방자치단체		(54)	92.6	7.4	100		

13.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2) 부모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그림 6-14] 부모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자의 변동신고 등 의무사항과 절차 및 방법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68.3%가 ‘찬성’이라고 응답함

[Q10-2]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영아수당/부모급여 등 포함)을 지급, 보호자의 변동신고 등 의무사항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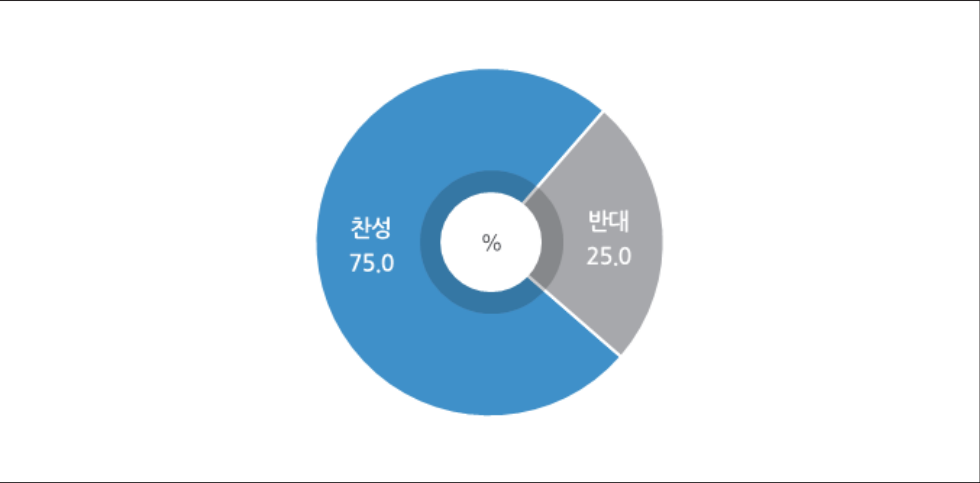
〈표 6-33〉 부모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반대	계	chi-sq	Sig.	
▣ 전체 ▣	(60)	68.3	31.7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83.3	16.7	100	19.725	0.139
	부산광역시	(6)	50	50	100		
	대구광역시	(1)	0	100	100		
	인천광역시	(3)	100	0	100		
	대전광역시	(1)	0	10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100		
	경기도	(11)	72.7	27.3	100		
	강원도	(3)	66.7	33.3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50	50	100		
	전라북도	(3)	0	100	100		
	전라남도	(6)	100	0	100		
	경상북도	(6)	83.3	16.7	100		
	경상남도	(5)	60	4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50	50	100	1.036	0.309	
지방자치단체	(54)	70.4	29.6	100			

13.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3) 입국일 확인 후 소급 지급

[그림 6-15] 입국일 확인 후 소급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시 선제적으로 아동수당을 일시 지급 정지하고,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시 아동수당 최종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한편, 추후 입국일 확인 후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75.0%가 '찬성'이라고 응답함

[Q10-3]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시스템 자동 정지 등)하고, 체류기간 90일 이상시 최종 지급정지 결정하는 한편, 추후 입국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6-34〉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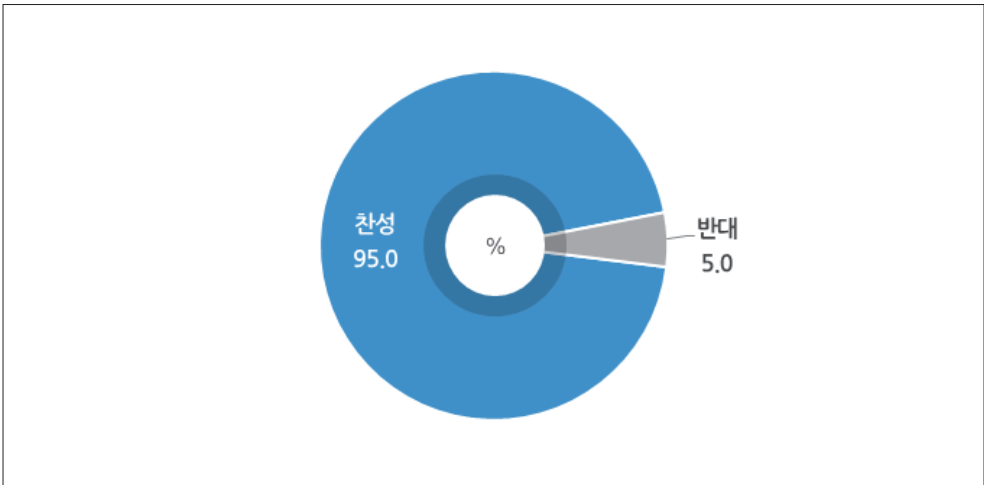
		사례수 (명)	찬성	반대	계	chi-sq	Sig.
▣ 전체 ▣		(60)	75	25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66.7	33.3	100	13.875	0.459
	부산광역시	(6)	66.7	33.3	100		
	대구광역시	(1)	0	10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0	100	100		
	경기도	(11)	72.7	27.3	100		
	강원도	(3)	33.3	66.7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100	0	100		
	전라북도	(3)	100	0	100		
	전라남도	(6)	83.3	16.7	100		
	경상북도	(6)	83.3	16.7	100		
	경상남도	(5)	80	2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100	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83.3	16.7	100	0.247	0.619
	지방자치단체	(54)	74.1	25.9	100		

단위 : %

13.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4) 입국 확인 후 재지급

[그림 6-16] 입국 확인 후 재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 등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아동수당 급여 “미생성” 및 변동 알림을 보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수당 급여정지 여부를 결정, 추후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재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95.0%가 ‘찬성’이라고 응답함

190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설문조사 결과(별책)

[Q10-4] 90일 이상 해외체류 등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급여 “미생성” 및 변동알림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추후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지급하는 방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6-3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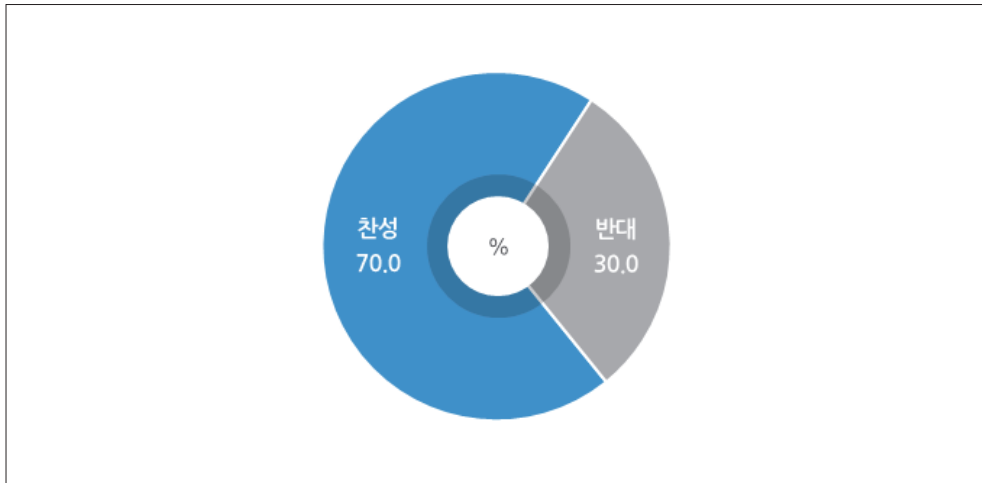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반대	계	chi-sq	Sig.
☐ 전체 ☐	(60)	95	5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100	0	100	12.791	0.543
부산광역시	(6)	100	0	100		
대구광역시	(1)	100	0	100		
인천광역시	(3)	100	0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100		
경기도	(11)	90.9	9.1	100		
강원도	(3)	100	0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100	0	100		
전라북도	(3)	100	0	100		
전라남도	(6)	100	0	100		
경상북도	(6)	83.3	16.7	100		
경상남도	(5)	10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83.3	16.7	100	1.910	0.167
지방자치단체	(54)	96.3	3.7	100		

13.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

5)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그림 6-17]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성실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환수대상자 명단을 1년간 공표하는 것과 같이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70.0%가 '찬성'이라고 응답함

[Q10-5] 불성실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환수대상자 명단 등을 1년간 공표 하는 것과 같이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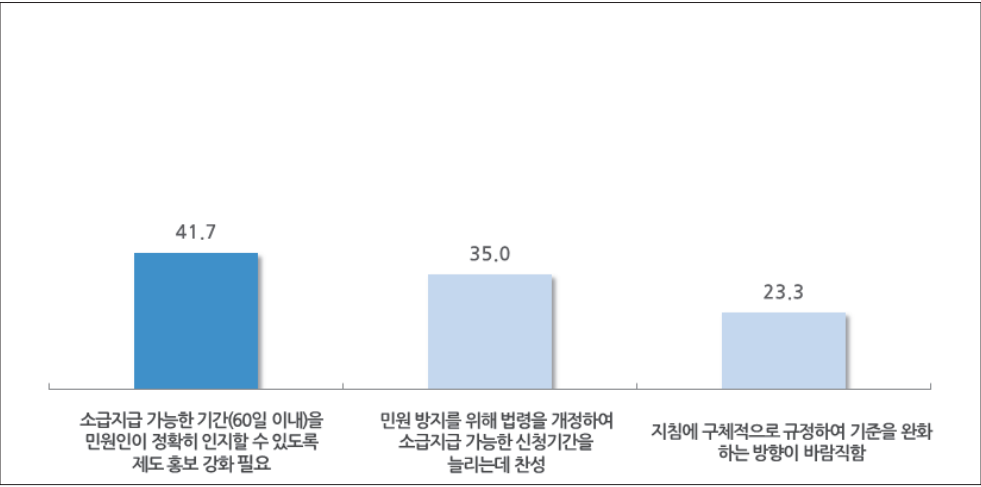
〈표 6-36〉 제도 개선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반대	계	chi-sq	Sig.
▣ 전체 ▣		(60)	70	30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66.7	33.3	100	15.830	0.324
	부산광역시	(6)	50	50	100		
	대구광역시	(1)	0	10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0	100	100		
	경기도	(11)	90.9	9.1	100		
	강원도	(3)	33.3	66.7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50	50	100		
	전라북도	(3)	66.7	33.3	100		
	전라남도	(6)	100	0	100		
	경상북도	(6)	83.3	16.7	100		
	경상남도	(5)	60	4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83.3	16.7	100	0.564	0.453
	지방자치단체	(54)	68.5	31.5	100		

14. 기타 아동수당 제도개선

1) 소급 가능 신청 기간에 대한 민원 및 국민 불편 해소방안

[그림 6-18] 소급 가능 신청 기간에 대한 민원 및 국민 불편 해소방안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소급 가능 신청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에 대한 민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현재도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원스톱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아 대상 14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정보 제공 등 충분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60일 이내)을 민원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필요’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Q11] 현재 아동수당법령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절차 진행,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60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급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90일 등)이 있는데 일선현장의 민원 해소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개선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6-37〉 소급가능한 신청기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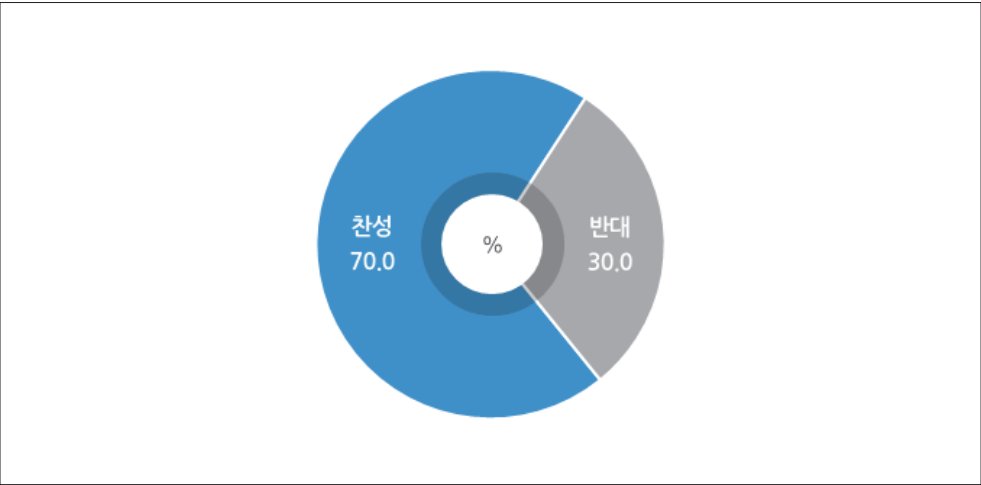
지역	전체	시·도 수(명)	민원 법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소급지급 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리는데 찬성	현재도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웹사이트, 행동출산서비스 신청,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아 대상 14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정보 제공 등 충분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60일 이내)을 민원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필요	“천재지변 등”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가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자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	계	chi-sq	Sig.
	전체	(60)	35	41.7	23.3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33.3	33.3	33.3	100		
	부산광역시	(6)	0	50	50	100		
	대구광역시	(1)	0	100	0	100		
	인천광역시	(3)	66.7	33.3	0	100		
	대전광역시	(1)	0	0	100	100		
	울산광역시	(1)	100	0	0	100		
	경기도	(11)	27.3	54.5	18.2	100		
	강원도	(3)	33.3	33.3	33.3	100		
	충청북도	(2)	50	50	0	100		
	충청남도	(4)	25	75	0	100		
	전라북도	(3)	0	0	100	100		
	전라남도	(6)	50	33.3	16.7	100		
	경상북도	(6)	50	50	0	100		
	경상남도	(5)	60	40	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0	5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50	0	50	100	5.238	0.073
	지방자치단체	(54)	33.3	46.3	20.4	100		

단위 : %

14. 기타 아동수당 제도개선

2)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 강화

[그림 6-19]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 강화 필요



○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 물어본 결과 ‘(찬성) 영유아기 복지지원제도 신설과 강화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기준 강화에 찬성함. 단,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할 때 시스템상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Q12] 현재 아동수당(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등 포함)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사유 발생으로 보아 급여정지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며 단기간 입국과 출국 반복 등 부작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연속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표 6-38〉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 강화 필요

지역	사례 수(명)	(찬성) 영유아기 복지지원제도 신설과 강화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여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기준 강화에 찬성함.	단위 : %	
			70	30
전체	(60)			100
지역				
서울특별시	(6)	83.3	16.7	100
부산광역시	(6)	66.7	33.3	100
대구광역시	(1)	0	100	100
인천광역시	(3)	100	0	100
대전광역시	(1)	100	0	100
울산광역시	(1)	0	100	100
경기도	(11)	81.8	18.2	100
강원도	(3)	66.7	33.3	100
충청북도	(2)	100	0	100
충청남도	(4)	75	25	100
전라북도	(3)	0	100	100
전라남도	(6)	83.3	16.7	100
경상북도	(6)	83.3	16.7	100
경상남도	(5)	40	60	100
제주특별자치도	(2)	50	50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6)	66.7	33.3	100
지방자치단체	(54)	70.4	29.6	100
			0.035	0.851
			19.113	0.161



[부록 2] 조사표: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환수 등 사후관리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영아수당 제도 운영에 있어 수당의 신청/변경/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수행하는 온라인조사(모바일조사)로 응답에는 약 3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기 때문에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책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 후 익명처리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데이터 등)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아동수당지급관리 제도 개선 등 아동수당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00 (044-)
담당자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연구위원 (044-287-8107) 공동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원희 부연구위원 (044-287-8498)

해당 항목에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시고, 부서와 담당하고 계신 핵심업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직] 시/군/구 지자체 드롭박스로 구현

지자체 선택	1) 지역	2)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1	서울	본청/강남구/강서구....
<input type="checkbox"/> 2	부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3	대구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4	인천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5	광주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6	대전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7	울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8	세종	본청
<input type="checkbox"/> 9	경기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본청/000/000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본청

Q1-2. 귀하의 소속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

Q1-3. 귀하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시) 아동수당 환수, 아동수당 지급, 등)

()

Q2. 지난 2년간 장기해외체류(90일 이상)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결정 및 환수사례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 사례 없는 경우 '0' 기입. 담당자 착오나 중복지급 등의 사유는 제외하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환수결정건수	환수건수 [로직] '환수결정건수'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입력 가능	환수율 [로직] 자동 노출 계산식=환수건수/환수결정건수*100
2020	()건	()건	()%
2021	()건	()건	()%

Q3.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결정 대상 아동 중,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시 해외여권 사용 여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확인 가능하십니까?

- 1)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다
- 2) 확인 할 수 없다 → 문항 3-2로 이동

Q3-1. 장기해외체류사유로 인한 환수결정 대상 아동 전체를 100%라 할 때 해외여권(복수국적)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직] 해외여권(복수국적아동)과 대한민국여권 비율 합이 100%가 되어야 함

[로직]응답 후 Q4 이동

연도	환수결정 대상	해외여권 (복수국적아동)	대한민국여권
2020	100%	()%	()%
2021	100%	()%	()%

Q3-2.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_____)

Q4. 장기해외체류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즉,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1개만 선택)

- 1) 복수국적아동이 지자체에 변동신고 없이 해외여권으로 출국할 경우,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
- 2) 해외장기체류 의심자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으로 지급정지 결정 지연이나 착오로 인한 급여정지기간(국외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중 과오 지급 발생 →Q5로 이동
- 3) 기타(_____) →Q5로 이동

Q4-1. 아동수당법 제15조 및 아동수당사업 지침에 따르면, 해외출생이나 복수국적 여부를 신청자가 신고해야 하며, 읍면동 담당자는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외여권 사본을 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 담당자는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변동 알림 시 자격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국적 아동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인지/확인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직] 응답 후 Q5로 이동

- 1) 아동수당 신청 시 보호자가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보호자의 불성실/부정 신고) 확인 할 수 없어서 (즉, 복수국적 사실 미신고 아동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해외여권 사용 출입국 정보 통보를 받지 못함)

- 2)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등 자격 정비 미비
3) 기타(_____)

Q5. 앞서 응답하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로직] Q4.에서 선택한 보기값 노출

(_____)

Q6. 아동수당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지급정지 사유발생·소멸한 경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장기체류와 관련해서 수급아동 보호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사례는 실제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아동수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신고율이 5%미만으로 극히 낮다(0%~5%미만)
2) 신고율이 매우 낮다(6%~30%미만)
3) 신고율이 다소 낮다(30%~50%미만)
4) 신고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50%~70%미만)
5) 신고율이 높은편이다(70%~90%미만)
6) 신고율이 상당히 높다(90%~100%) ->Q7로 이동

Q6-1. 변동사항에 대해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 가능,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로직] 최대 2개 선택 문항

- 1)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2)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가 몰라서
3) 신고의무는 알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4) 신고양식의 제출이 직접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에 한정되어있어 실제 신고절차가 매우 불편해서
5) 기타(_____)

Q6-2 변동사항에 대한 보호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까지 선택, 1개인 경우 1개만 선택)

[로직] 최대 2개 선택 문항

[로직] 응답 후 Q7로 이동

- 1)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요건을 강화
2) 아동수당 수급 조건으로 보호자 교육 이수율 지침이나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수급조건 강화

- 3) 신고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변동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4) 기타 ()

**Q7.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아동수당의 과오지급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여 환수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까?
 즉, 인지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 1개를 선택해주시시오**

- 1) 아동수당 이외 기타 급여제도 등의 신청/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담당자가 인지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감사/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외부에서 인지
 3) 기타 ()

〈※ 다음은 아동수당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환수를 완료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행정력이
 소요되는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환수결정 1건을 기준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아동수당 환수결정 후 환수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은
 통지 1회당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행정비용은 실제 등기비용 등 실비를 포함하여,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사용한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당 임금을 생각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 발송여부	2. 기간	3. 통지방법 (중복선택가능) [로직]복수응답 문항	4. 통지회수	5. 행정비용
사전환수 통지서	1) 발송한다 2) 해당없음 -> '환수통지서'로 이동	환수결정 후 () 일 이내	1) 등기우편 2) 팩스 3) 이메일, 문자 등 기타	()건	건당 ()원
환수통지서		환수결정 후 () 일 이내	1) 등기우편 2) 팩스 3) 이메일, 문자 등 기타	()건	건당 ()원
공시송달공고		통지서 반송 확인 후 ()일 이내		()건	건당 ()원

Q9. 귀하께서는 실제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환수대상 부재)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거나 아예 해외로 이주하는 등 환수대상이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서
 2) (아동연령 초과) 환수대상 아동의 연령이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차감지급을 통한 환수가 불가
 3) (환수액 대비 과도한 행정부담) 환수해야 하는 금액에 비해 환수를 위해 동원해야 하는 행정절차(예, 체납처분
 등)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 기타 ()

〈※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Q10-1.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여부를 보호자가 신고했는지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관리시스템 정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2.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 이수율 조건으로 아동수당(영아수당/부모급여 등 포함)을 지급, 보호자의 변동신고 등 의무사항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3.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 선제적으로 일시 지급정지(시스템 자동 정지 등)하고, 체류기간 90일 이상시 최종 지급정지 결정하는 한편, 추후 입국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4. 90일 이상 해외체류 등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급여 “미생성” 및 변동알림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정지 여부 결정, 추후 입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Q10-5. 불성실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환수대상자 명단 등을 1년간 공표 하는 것과 같이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 2) 반대

〈※ 기타 아동수당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Q11. 현재 아동수당법령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절차 진행,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을 60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급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민원(90일 등)이 있는데 일선현장의 민원 해소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개선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원 방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소급지급 가능한 신청기간을 늘리는데 찬성
- 2) 현재도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앱, 원스톱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주소지 불문 전국 읍면동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아 대상 14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정보 제공 등 충분히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소급지급 가능한 기간(60일 이내)을 민원인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강화 필요
- 3) “천재지변 등”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유가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Q12. 현재 아동수당(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등 포함)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사유 발생으로 보아 급여정지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의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급여정지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며 단기간 입국과 출국 반복 등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국외체류기간 급여정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1) (찬성) 영유아기 복지지원제도 신설과 강화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여 부적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급여정지기준 강화에 찬성함. 단,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할 때 시스템상 자동으로 급여가 정지되는 등 시스템 개선 필요
- 2) (반대) 현재 환수결정건의 대부분이 90일 이상 국외체류로 인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급여정지기준 강화시 지급정지 처리 주기가 짧아지고 환수결정건수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

Q13. 기타 아동수당 신청/지급, 사후관리 및 환수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DQ. 답례품(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all 1잔)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는 답례품 지급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 연락처 당 한 번의 답례품만 지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비 지급
 - 응답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조사 종료 후 3개월까지
 4. 사례품 지급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업무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 기프티콘 전송: 기프트앤

본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번호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 종료